



SINCE 1949



국회보

국민과 함께하는 국회 소식지

2023. 03
VOL. 676

겨울을 버텨낸 나무들이
싹을 틔우는 봄입니다.
추위를 이겨낸 새싹을 통해
희망을 봅니다.



국회사무처
NATIONAL ASSEMBLY SECRETARIAT

국민과 함께하는 국회 소식지

국회보

since 1949

2023. March
Vol. 676

간행물발간등록번호

31-9710176-000680-06 ISSN1975-7581

발행일

2023년 3월 2일

발행인

이광재 국회의사무총장

국회홍보출판위원회

박장호 위원장(입법차장)

박태형 위원(국회운영위원회 수석전문위원)

고상근 위원(정무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정연호 위원(문화체육관광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진선희 위원(보건복지위원회 수석전문위원)

김수옥 위원(특별위원회 수석전문위원)

박재유 위원(법제실장)

정지은 위원(문화소통기획관)

정환철 위원(공보기획관)

서덕교 간사(문화소통담당관)

국회보편집실사무위원회

한주연(비서관), 윤희진(비서관), 이구형(서기관)

편집진

글 김현아(취재보도사무관), 고영선, 박민선, 윤성혜

사진 김지범(촬영사무관), 임진완, 김진원, 유윤기

주소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TEL 02)6788-2058 book@assembly.go.kr

디자인·인쇄 ㈜이팝 02)514-7567

※ 이 책의 우측 상단에는 시각장애인을 위한 음성변환
바코드가 삽입되어 있습니다.



04

04 지금 국회에서는

김진표 국회의장, 가라카니 노르웨이 국회의장과 회담

김진표 국회의장, 어용에르덴 몽골 총리 접견

국회사무처 등 신년 업무보고 실시

‘초당적 정치개혁 의원모임’ 초청 만찬 간담회

11 특집 - 의료취약지역 문제와 의료인력 양성방안

필수의료 기반 강화를 위한 정부의 대책 _임인택 보건의료정책실장

의대정원 확대하고 공공의대 신설해야 _김진현 보건의료위원장

의사증원보다 선결할 과제들 _이상운 부회장

의료취약지 의료인력 양성에 관한 제21대국회 입법 동향 _임제웅 입법조사관

20 위원장에게 듣는다 _백혜련 정무위원회 위원장

“민생 살리는 정책과 입법으로 경제위기 대응하고 국가의 회복력 높일 것”

22 길에서 길을 찾다 _강득구 의원

문화와 예술이 어우러진 행복도시 안양 만안구

26 의원의 좌우명 _조명희 의원

‘나의 스승은 자연(我師自然)’

28 칭찬합시다 _서삼석 의원

정치도 변치 않는 ‘소금처럼’

30 나의 인생 나의 정치 _안병길 의원

‘현장, 소통, 서민’... 나의 세 가지 키워드

32 함께하는 국회

충북 여야 국회의원, ‘충북 첨단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국회 토론회’ 개최

CONTENTS



20



22



26



28



30

35 이달의 청원

36 법률, 시대를 읽다

국가 재난관리자원의 체계적·효율적인 관리체계 구축
_박규찬 전문위원

38 일하는 국회 공부하는 국회

젊은당뇨병 환자 지원법안, 난방비 폭탄 대안,
지역균형 비례대표제 등 주제로 토론회 열려

43 국회의 풀꽃과 나무 이야기

실유카

44 의회외교 포커스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은 우리 의회 외교의 방향 _서정건 교수

46 주재관 리포트

뉴욕주 '강아지공장 금지법' 입법과정과 시사점 _정상훈 주재관

50 위원회는 지금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 난방비 대책 등 논의

54 국회 뉴스

60 법 시행 그 후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62 만화

'민법' 일부개정법률

64 4차산업혁명시대 살아가기

인공지능과 대화하는 시대, 읽기와 쓰기에 대한 고찰
_김동철 박사

66 국회 사람들

육사·특전사 거친 보좌관의 국회 이야기 _김경한 보좌관

68 이달의 서평

돌봄이 돌보는 세계 _문재우 교수

70 고전에서 읽는 지혜

조선 최고의 명저 율곡 이이의 '성학집요(聖學輯要)'
_박석무 석좌교수

72 국회 미술관

다중우주론을 펼쳐보이는 생명의 노래 _김준기 관장

75 찰칵, 국민이 담은 국회

76 속기록으로 본 의정소사

국회 국정감사에 등장한 찐쌀, 산낙지, 구렁이, 고양이
_정영희 속기사무관

78 산으로 떠나는 치유여행

영주 소백산 초원농선 _유인근 여행칼럼니스트

82 생활 속 우리말글

우리말을 열심히 공부해야 하는 이유 _김풍기 교수

84 정치 관련 주요 일지

김진표 국회의장, 가라카니 노르웨이 국회의장과 회담

부유식 해상풍력, 수소 분야 등 양국 간 경제협력 모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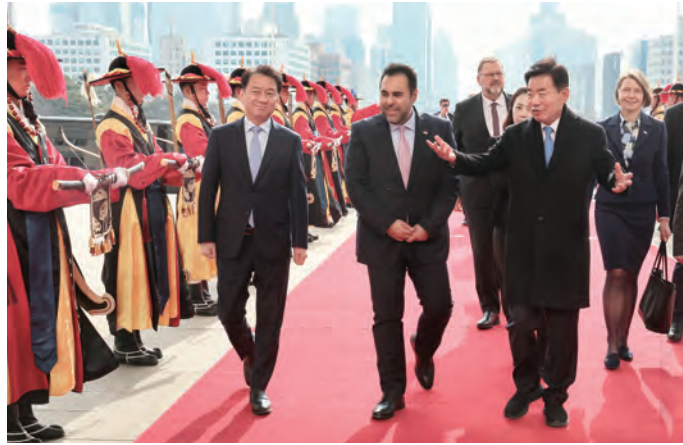


김진표 국회의장(오른쪽)이 2월 9일 의장접견실에서 마수드 가라카니 노르웨이 국회의장과 회담에 앞서 악수를 하고 있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2월 9일 의장접견실에서 마수드 가라카니 노르웨이 국회의장과 회담을 갖고 경제·방산·북극 분야 실질 협력,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 등 양국 간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노르웨이 국회의장 방한은 45년 만이며 양국 간 국회의장 회담은 22년 만이다. 이민자 출신 최초의 국회의장인 가라카니 의장

은 이란 테헤란 출생으로 1987년 이란-이라크 전쟁을 피해 노르웨이로 이민 왔다.

김진표 의장은 “노르웨이가 수교(1959년) 이전임에도 한국전쟁에 ‘야전 이동식 외과병원단’을 파견해준 데 고맙게 생각한다”고 감사를 전하며 “한국과 노르웨이는 국제사회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우방국으로서



김진표 국회의장(오른쪽), 가라카니 노르웨이 국회의장과 이광재 국회사무총장이 2월 9일 국회 본관에서 의장대 사열을 받으며 나란히 걸어 들어오고 있다.

진밀히 협력하고 있으며, 이번 의장 방한이 양국 관계를 발전시키는 좋은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먼저, 김 의장과 가라카니 의장은 양국 간 실질적인 경제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김 의장은 “재생 에너지 분야에서 노르웨이의 한국에 대한 투자가 늘어나고 있어 기쁘다”며 “부유식 해상풍력과 수소, 신 재생에너지 분야에서 양국 기술력을 결합한 협력 방안이 강구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가라카니 의장은 한-EFTA(유럽자유무역연합) FTA가 개정될 수 있도록 의회 차원의 관심을 요청했고, 김 의장은 “한-EFTA FTA가 양국 교역환경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개정될 수 있도록 정부와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김진표 국회의장은 2030세계박람회를 부산에서 유치할 수 있도록 노르웨이 측이 관심을 갖고 적극 지지해줄 것을 요청했다. 김 의장은 “부산은 세계 제2의 환적항과 공항·고속철도, 스마트시티 등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는 동북아 교통 물류의 중심지이자, 다수의 국제행사를 성공적으로 개최한 경험이 있는 최적의 장소”라고

설명했고, 이에 가라카니 의장은 “한국의 유치 노력을 잘 알고 있으며, 이를 정부 측에 전달하겠다”고 답했다.

마지막으로, 김 의장과 가라카니 의장은 한반도 정세와 우크라이나 사태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김 의장은 그간 노르웨이 측이 안보리대북제재위원회 의장으로 우리 측과 긴밀히 공조해 온 것을 높이 평가하며 “우리 정부는 북핵 문제의 평화적인 해결을 위해 대화의 문을 항상 열어두고 있으나, 북한이 7차 핵실험 등 중대 도발을 감행할 경우 국제사회가 단합해 단호히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고 이에 가라카니 의장은 공감을 표했다.

이날 회담과 오찬에는 노르웨이 측에서 스베인 허버그 의회 제1부위원장, 마리안느 실베르센 네스 에너지 환경위원장, 오스몬드 아우크루스트 외교국방위원회 제1부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우리 측에서는 한기호 국방위원장, 전해철 환경노동위원장, 이현승 의원, 김영진 의원, 김병주 의원, 이수진 의원, 이광재 국회사무총장 등이 함께 했다. 🍷

김진표 국회의장, 어용에르덴 몽골 총리 접견

광물·에너지 협력, 한-몽 경제동반자협정, 사증 간소화 등 논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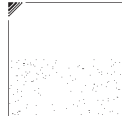


김진표 국회의장(오른쪽)이 2월 15일 의장집무실에서 어용에르덴 몽골 총리와 악수를 하고 있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2월 15일 의장집무실에서 룡상 남스랭 어용에르덴 몽골 총리를 접견하고 광물·에너지 협력 확대, 2030부산세계엑스포 지지 등 양국 관계 강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논의했다. 몽골 총리의 공식 방한은 2011년 바트볼드 전 총리 이후 12년 만이다.

김 의장은 “양국은 언어·문화적 유사성이 높고, 민

주주의·인권·자유 등 공동의 가치를 중요시하며, 경제적으로도 상호 보완적인 만큼 향후 양국 관계가 강화될 잠재력이 크다”고 평가하면서 “총리님의 방한을 계기로 우리 국회 차원에서도 양국 관계 발전 및 의회간 협력 확대를 위한 모든 방안을 지원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진표 국회의장(가운데)이 2월 15일 의장집무실에서 어용에르덴 총리(왼쪽에서 첫 번째)와 대화하고 있다.

어용에르덴 총리는 “한국은 몽골과 국경을 접하는 러시아·중국 다음의 이웃 국가”라며 “1990년 수교 이후 변함없는 마음으로 몽골과 우호 협력을 유지해 온 한국과 한국인에 대해 몽골 정부와 국민을 대신해 감사 인사를 전한다”고 밝히고, 몽골의 광물·에너지 수출에 관한 러시아·중국 편중 현상을 언급하면서 제3국의 대표격인 한국과의 협력 확대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이에 공감을 표하면서 “에너지·광물 등 필수 자원은 개발·교역을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며 “한국은 그동안 양질의 해외 광물자원을 다수 개발한 경험이 있고 관련 기술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온 만큼 몽골 에너지·광물 개발에 참여해 상호 윈윈(win-win) 하자”고 제안했다.

김 의장 “한-몽 경제동반자협정·투자보장협정의 조속한 추진 당부”

김 의장은 또 “경제 교류와 교역·투자를 효과적으로 발전시키려면 그 제도적 기반인 한-몽 경제동반자협정(EPA) 체결 및 한-몽 투자보장협정 개정이 조속히 추진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어용에르덴 총리는 몽골 정부가 2023~2025년을 ‘몽골 방문의 해’로 선언했다면서 양국의 인적교류 및 경제협력 확대를 위해 상호 비자 면제에 관한 김 의장의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이에 김 의장은 “현재 사증 간소화와 관련해 관계기관 간 협의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국회 차원에서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답했다.

어용에르덴 총리는 또 “몽골 정부는 부산의 2030 세계박람회 유치를 지지한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이에 감사를 표하며 “양국 간 특별한 관계에 부합하도록 부산엑스포 개최 과정에서 양국 기업 간 투자·경제협력 확대 및 몽골 도시개발에 대한 스마트시티 기술 활용 등 실질 협력 확대를 기대한다”고 화답했다.

이날 접견에는 몽골 측에서 바트몽흐 바트체첵 외교 장관, 치메드 후렐바타르 부총리 겸 경제개발 장관, 다쉬제벡 아마르바야스갈랑 내각관방 장관, 에르덴척트 사랑티거스 주한몽골대사가 참석했다. 우리 측에서는 박경미 의장비서실장, 고재학 공보수석비서관, 김종구 주몽골한국대사, 조구래 외교특임대사, 황승기 국제국장 등이 함께했다. 🍵

김진표 국회의장, “경제외교 및 국회 입법역량 강화해야”

국회사무처 등 신년 업무보고 실시



김진표 국회의장이 2월 2일 국회접견실에서 2023년도 국회 소속기관의 신년 업무보고를 받은 뒤 발언하고 있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2월 2일 국회접견실에서 국회사무처, 국회도서관, 국회예산정책처, 국회입법조사처, 국회미래연구원 등 국회소속기관으로부터 2023년도 업무보고를 받았다.

이와 관련, 국회사무처는 김 의장이 제21대 후반기 국회 비전으로 밝힌 ‘새로운 희망을 만드는 국회’를 위한 세부 목표별 추진과제로 △국민을 만드는 민생국회(국민과 함께하는 개헌국회, 여·야가 화합하는 협치국회, 국익을 우선하는 경제외교국회, 국가 주요과제를 해결하는 국회) △국민과 함께하는 소통국회(국민 곁에서 더 가까이 알리는 국회, 국민에게 귀기울이는 국

회, 국민과 함께 호흡하는 문화국회) △미래를 준비하는 혁신국회(혁신을 지향하는 디지털AI 국회, 인재를 양성하는 국회, 세종 시대를 준비하는 국회, 하나가 되는 원팀국회)를 보고했다.

김진표 의장은 ‘국익을 우선하는 경제외교국회’와 관련해 “경제외교자문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실무적인 지원이 중요하다”며 “해외 순방 전 의원들의 인적 네트워크를 파악하고, 사후적인 후속조치 사항을 공동 위원장인 두 분의 국회부의장에게 보고해 총리실과 경제단체 등에 전달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국가 주요 과제를 해결하는 국회’에 대해서는 “법률



이광재 국회사무총장이 단상에서 신년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안 발의가 늘고 있어 입법역량 강화가 중요하다”며 “관련 업무계획을 조속히 추진할 것”,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비용추계 내용을 담을 것”, “정치개혁·연금개혁 등과 관련한 공론조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줄이기 위해 웹 조사 등 새로운 기법을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에게 귀기울이는 국회’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청원을 너무 소홀히 해왔다. 청원 홍보 및 위원회 심사 활성화 방안이 모두 실행되었으면 한다”며 “세법 등 입법 미비 사항을 청원을 통해 바로잡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과 함께 호흡하는 문화국회’에 대해서는 봄꽃 축제에 각국의 주한 대사를 초청했으면 좋겠다는 의견과 함께 “국회 홍보 차원에서 봄꽃축제 기간에 전시행사를 기획할 것”을 주문했다.

마지막으로 김진표 국회의장은 ‘하나가 되는 원팀 국회’와 관련해 본격적인 공동연구가 이루어지기 전 새로운 이슈에 대한 논의 테이블을 마련했으면 좋겠다고 하며 정치 일정에 부합하는 연구 및 홍보를 추진할 것을 당부했다.

이광재 국회사무총장은 업무보고에서 “국회사무처를 비롯한 5개의 국회 소속기관이 하나 되어 의장님과 299명의 국회의원, 18개 위원회의 활동을 성심껏 지원하겠다”며 “연구, 전산, 홍보, 공간, 소장품, 인사 여섯가지 분야에서 소속기관 간 칸막이를 없애겠다”고 밝혔다.

또한, △첫째, 국민통합형 개헌과 선거법 개정 준비를 철저히 할 것 △둘째, 경제외교, 의회외교에 새지평을 열 수 있도록 준비할 것 △셋째, 국회의 입법역량 및 예산심사기능 강화에 힘쓸 것 △넷째, 일하는 국회의 모습을 국민에게 확실히 전달하고 국회방송, 의원회관 세미나의 실시간 중계시스템을 확립할 것 △다섯째, 정책 현안, 갈등 현안에 대해 신속한 정책 대안을 제공할 수 있는 국회를 만들 것을 세부 추진과제로 보고했다.

한편, 이날 업무보고에는 김진표 국회의장과 이광재 국회사무총장을 비롯한 국회소속기관장, 국회의장 비서실장, 국회입법차장·사무차장, 정무수석비서관, 정책수석비서관, 공보수석비서관, 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주요 부서장 등이 참석했다. 📍

‘초당적 정치개혁 의원모임’ 초청 만찬 간담회



김진표 국회의장(가운데)이 2월 6일 국회 사랑제에서 열린 ‘초당적 정치개혁 의원모임’ 초청 만찬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2월 6일 국회 사랑제에서 ‘초당적 정치개혁 의원모임’에 참여하는 30명의 국회의원을 초청해 만찬 간담회를 가졌다. ‘초당적 정치개혁 의원모임’은 정치 및 선거제도 개혁을 통해 팬덤정치·진영대결의 분열적 정치를 타파하고 공생 정치를 모색하기 위해 여야 의원들이 자발적으로 구성한 모임으로, 현재 140여 명의 국회의원이 참여하고 있다.

김진표 의장은 먼저 지난해 12월 실시했던 전국지표조사에서 국민의 국회 불신(81%), 특히 중도층의 높은 불신(87%)에 관한 결과를 언급하면서 “대통령 5년 단임제와 승자독식의 현행 선거제가 결합해 거대 양당간 극한 대립이 발생함에 따라 국민의 국회 불신이 지속되고 있다”면서 “이전의 정치개혁 논의에 성과가 없었던 이유는 당 지도부에 협상 전권이 위임된 상황에서 여야 대립격화로 논의가 지연되고, 결국 선거에 임

박해 줄속 개정하는 수순을 반복했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김진표 의장은 이어 “2월 중으로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복수안을 제시하면 3월 동안 당 지도부 중심 논의가 아닌 의원 300명 전원이 참석하는 전원위원회에서 집중토의를 거쳐 의원 200명 이상의 동의를 받아 선거제 개혁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김진표 의장은 또 “여야가 합심해 합리적인 선거제도를 만들어낸다면 사표 비율을 줄이고 대표성을 개선할 수 있음은 물론 수도권·지방 사이의 불균형, 아직 남아 있는 영·호남 대립, 젠더갈등 등 우리 정치의 고질적인 문제를 정치권이 해결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길 것”이라며 “여야가 마음을 합해 선거제도 개혁을 완수하고, 그 힘으로 우리 시대의 해묵은 과제인 개헌까지 완수하자”고 역설했다. 🍷



특집

의료취약지역 문제와 의료인력 양성방안

인구가 감소하는 지방 중소도시에서 의료시설 인프라가 빠르게 축소되고 있습니다. 민간의료 중심으로 구성된 우리 의료체계에서 지방의 인구소멸은 의료 시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공공의료 인프라 확충, 의대 정원 확대, 공공의대 신설 등 의료취약지역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과 의료인력 양성 방안을 전문가들로부터 들어봤습니다.

<편집자주>



필수의료 기반 강화를 위한 정부의 대책

임인택 보건복지부 보건 의료정책실장

의대정원 확대하고 공공의대 신설해야

김진현 서울대 간호학과 교수·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보건 의료위원장

의사증원보다 선결할 과제들

이상운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의료취약지 의료인력 양성에 관한

제21대국회 입법 동향

임제웅 보건복지위원회 입법조사관

필수의료 기반 강화를 위한 정부의 대책

대형병원에 근무하던 간호사가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해 뇌출혈로 사망하는 등 최근 치료 적기를 놓쳐 사망하는 사건이 반복되고, 저출산 등 사회적 변화에 따라 분만과 소아진료 기반이 크게 약화되고 있어 국민들의 불편함과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야간·휴일 당직 등 고된 근무 강도에 따른 충분한 보상이 없는 필수의료분야의 근무 여건은 충분한 의료인력을 확보하는데 장애물이 되고 있다.

정부는 최근 중증·응급, 분만, 소아진료 등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필수의료의 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필수의료 지원대책을 발표했다. 지금이 대한민국 보건의료의 체계를 새롭게 써야 하는 골든타임인 것이다.

국민이 언제 어디서나 골든타임 내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개별 의료기관의 역량에서부터 권역 내 협력체계까지 전반적으로 강화할 계획이다. 우선 최종치료까지 책임질 수 있도록 응급의료체계를 개편하고, 실제 생활권 내에서 신속한 응급질환 대응이 가능하도록 중증응급의료센터 개소 수도 늘린다. 권역심뇌혈관센터는 골든타임 내 고난도 수술이 상시 가능하도록 전문치료 중심으로 기능을 재편하고, 상급종합병원도 본연의 기능인 중증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정·평가 기준을 개선한다.

주요 응급질환에 대해서는 지역 내 최소 1개 병원에서 최종치료를 제공해 신속 대응이 가능하도록 병원 간 순환당직제를 도입하고, 119등과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해 환자가 발생한 경우 신속히 해당 당직병원으로 이송될 수 있게 된다.

분만, 소아 진료를 위한 접근성 강화에도 힘을 쏟았다. 산모와 신생아의 중증도에 따라 모자의료 전달체계를 개편해 안전한 분만과 치료를 돕는다.



임인택 보건의료정책실장
보건복지부



분만취약지 지원도 확대해 취약지에 거주하더라도 안심하고 분만을 준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특히 소아 응급환자를 위해 소아전문 응급의료센터를 늘리고, 야간·휴일에 소아 외래진료가 가능한 의료기관을 확대한다. 아울러 소아암 지방 거점병원을 신규로 지정하고 집중적으로 육성해 소아암 환자의 원활한 치료와 회복을 도울 수 있도록 한다.

필수의료 지원의 적절한 보상과 충분한 의료인력 확보

언제 어디서든 필수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체계가 작동하도록 적절한 보상을 지급한다. 공공정책수가는 국민의 생명·안전과 건강한 삶을 위해 필수의료 분야에 충분한 의료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행위별 수가의 한계를 보완해 마련한 새로운 건강보험 보상체계다. 공공정책수가를 통해 고난도 중증의료 인프라, 수요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야, 기관 간 협력체계에 대한 보상을 강화해 의료안전망을 구축한다.

야간·휴일 당직, 장시간 대기 등 의료인력의 업무부담이 큰 분야에 대한 보상도 강화한다. 야간·휴일 응급수술·시술에 대한 보상을 확대하고, 응급전용입원실 관리료를 신설해 중증환자를 위한 입원실을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 올해부터는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 사후보상 시범사업이 시작돼 중증소아 진료를 위한 기반을 유지하는 데에 도움이 될 것이다. 그동안 저평가됐던 수술·입원 분야에 대한 보상이 강화되며, 고난도·고위험 행위에 대해서는 보상을 추가한다.

지역에 따른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지역수가가 처음으로 도입된다. 시군지역에 시설인력 기준을 충족한 분만 의료기관에 수가를 지원해 운영난이 개선될 수 있

도록 하며, 병·의원급의 신생아실 및 소아중환자실 입원료를 올리고, 소아환자가 일반병동에 입원했을 때 연령에 따른 가산체계를 개선한다.

또한 상급종합병원이 중증환자의 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역 의료기관들과 네트워크를 구성해 외래진료를 감축했을 경우 성과를 보상해주는 시범사업도 추진한다.

필수의료 분야 인력의 업무강도와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한다. 의사의 당직·근무시간을 줄일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또한 불가항력 의료사고에 대해 의료인들이 느끼는 부담감을 완화하면서 의료사고 피해자들의 구제를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이 종합적으로 검토될 예정이다. 특히 지역 간 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지방병원에 전공의를 확대 배치하고, ‘병상수급 기본시책’을 수립해 지역별 병상 불균형 문제도 개선한다. 필수의료 분야의 교육·수련을 강화하기 위해 의대 교육과정에서 필수의료 임상수련을 강화하고, 외상·소아심장·감염 등 특수전문분야 의사를 양성하기 위한 실습 지원도 확대해 나간다. 또한 필수의료분야 전공의가 수련 중 수술과 처치 등을 충분히 경험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내실화해 나갈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지역 의사 부족과 필수분야 의사 수급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의료계와의 협의를 통해 구체적인 이행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번 대책이 의료현장과 국민의 삶에서 체감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보완해나갈 계획이며, 앞으로도 새로운 분야를 발굴해 지원하는 추가대책을 마련할 것이다. 필수의료 강화는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필수의료의 질과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지속적으로 발전시켜나가야 하는 국정과제로, 이번 대책은 필수의료를 강화하기 위한 첫걸음이다. 🍵

의대정원 확대하고 공공의대 신설해야

우리나라 인구 1천 명당 활동의사 수는 2022년 기준 2.3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 3.6명의 64% 수준에 불과하고, 지난 수십 년간 국민의 의료 이용량 증가에 비해 의사인력 공급이 따라가지 못해 지방병원이나 중소병원은 물론이고, 군의관과 공중보건의사도 턱없이 부족하다.

의사 인건비도 급등해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에 의하면 10여 년 전에는 도시근로자 임금의 4배 정도였으나 지금은 6배 이상으로 증가했다. 최근 언론 보도에 의하면 지방의료원에서 연봉 4억 원을 제시했지만 지원한 의사가 한 명도 없었다고 한다. 보건사회연구원의 추계에 의하면 인구 고령화에 따라 의료수요가 증가하면서 의사 부족 현상은 더욱 심화되어 2035년에는 의사 2만 4천 명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된다.

의사수 절대적 부족으로 지역 간 의사수 불균형 등 다양한 문제 발생

의사수의 절대적 부족은 지역 간 의사 분포의 불균형, 전문과목별 의사 수급 격차, 비임상 의사의 부족, 대학입시에서 의대 편중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인구 1천 명당 의사수는 서울이 3.5명인 데 비해 세종은 1.2명으로 가장 적어 3배 정도 차이가 나며, 전국적으로 인천, 전남, 경북은 의사수가 최하 수준이다.

의과대학 입학정원은 지난 2000년 의약분업 당시 의료계 파업을 무마하는 차원에서 3천500명 수준에서 10% 감축돼 3천58명으로 줄어들었다. 그사이 국민의 의료수요, 연구개발 등 비임상 분야의 의사 수요, 해외환자 수요 등은 꾸준히 증가했다.

지난 수십 년동안 의료기관의 전공의(레지던트) 모집인원은 연간 4천



김진현 서울대 간호학과 교수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보건의료위원장



명이었으나 의대 졸업생이 3천 명에 불과해 매년 1천 명 정도의 전공의 인원을 충원하지 못했다. 이럴 때마다 의료계는 부족한 의대 입학정원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충원 미달이 해당 과목의 수가 낮기 때문이라고 했다. 의사의 총인원은 부족하지 않으며 지역별, 전문분야별 분포의 불균형이 문제라고 주장하면서 작동가능한 해결책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의료취약지의 경우 종합병원이 있어도 이를 운영할 의사가 없어서 중증환자나 응급환자를 제때 치료하지 못하고, 결과적으로 치료가능 사망률이 다른 지역보다 더 높게 나타나고 있다. 앞에서 언급한 전남, 인천, 경북이 대표적이다. 의료취약지의 환자는 통상적인 치료를 위해서도 먼 거리에 있는 대도시로 이동할 수밖에 없고, 여기에 적지 않은 교통비와 숙박비, 시간이 소요된다. 또한 산부인과·소아청소년과 등 필수 진료과가 부족한 경우가 많아 출산율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의사공급의 지역간 격차는 코로나19와 같은 심각한 감염병 발생 시 지역사회의 효과적인 초기대응을 불가능하게 한다. 의료공급의 지역격차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2016년부터 공공의대 설립, 지역의를 모색해 오고 있으나 성공적으로 수행되지 못했다. 또 2020년 공공의대 설립과 의사정원 확대를 추진했으나 의사들의 집단 진료거부와 의대생들의 국가고시 거부로 중단됐다.

입학 정원 단기간 일괄증원 후 추후 속도 조절해야

OECD 회원국은 민간의료기관이 30% 이하인 반면 우리나라는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의사인력의 총

인원이 부족한 상황에서 지역별, 전문분야별 수급 불균형은 구조적으로 불가피하다.

따라서 의사인력시장이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의사공급의 총량이 충분히 뒷받침돼야 하고, 특히 소외 지역의 필수 의사인력 확보를 위해서는 공공 의대 도입이 필수적이다.

의료계는 수가 인상을 통해 의사 부족이 해결될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절대적으로 의사수가 부족한 상황에서 이러한 조치는 다른 지역, 다른 진료과의 의사 부족을 연쇄적으로 유발해 악순환만 되풀이할 뿐이며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다.

현재의 의사 부족을 향후 20~30년 이내에 완화하려면 의대 입학정원이 최소한 4천~5천 명 수준으로 증가해야 한다. 최대한 단기간에 일괄증원한 후 시장의 수급 상황을 살펴보고 속도를 조절하면 된다. 참고로 간호학과는 지난 10여 년간 전국적으로 입학정원이 1만3천 명 수준에서 2만7천 명 이상으로 증가됐다.

의대 입학정원의 확대 방법은 기존 국공립의대의 정원 확대, 의과대학이 없는 지방 국공립대학에 의대 신설(수도권, 충청권, 전라권, 경상권), 특수목적 의대(국군, 보훈)의 설립, 소규모 사립의대의 입학정원 증원으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현재 국공립의대가 없는 자치단체는 경기, 인천, 충남, 세종, 경북, 울산, 전남이며 충북, 강원, 제주에는 국립 의대가 있긴 하지만 정원이 50명 이하로 매우 적다. 공공의대를 졸업한 의사는 일정기간 공공의료기관에 근무하도록 규정하는 대안이 있을 수 있으며, 이는 해당 지역에 필수 의사인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함으로써 지역 간 의료 격차 해소에 도움을 줄 것이다. 🍵

의사증원보다 선결할 과제들

의대정원 문제나 공공의대 신설문제를 논하기 위해서는 의학적, 보건학적, 사회적, 경제적, 법률적 등 다양한 논의가 선행되어야 한다. 이 때문에 과거, 현재, 미래의 이론과 현상이 잘 어우러진 깊이 있는 연구가 전제되고 또 검증되고 난 후에 논의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인구학적으로 보면 2020년부터 3년 연속 인구가 감소하고 있다. 반면 고령화 추세는 증가하고 있어 2025년 인구의 20%가 65세 이상인 초고령사회로 진입하게 된다.

이러한 인구변화 및 추이, 건강보험재정 추이, 건보료 부담에 대한 사회적 합의나 준비, 시대 변화에 따른 의료 패러다임의 변화, 보건 인력 추이, 우리나라 전체 병상수급 상황, 의료에 대한 국민 사회적 인식 변화, 그리고 다양한 정책을 추진력 있게 진행할 수 있는가에 대한 정책당국의 의지나 능력 등 선(先) 문제가 많아서 깊이 있는 연구에 대한 제안을 먼저 하고 싶다.

의사수는 적지만 의료접근성은 OECD 최고 수준

지난해 12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2035년 의사가 2만7천 명 부족해 진다는 예상을 발표했고, 교육부는 의대 정원 확대를 보건복지부에 공식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다. 인구 10만 명당 의사수가 2.1명이라는, 그저 숫자로 OECD 평균보다 낮으니 의사수를 늘리자는 주장이 말이 안되는 이유 중에 첫째가 적은 의사수로 제공되는 의료접근성이나 질이 아직까지는 세계 1, 2위를 다투는 아주 높은 의료질을 국민께 제공하고 있다는 것이다. 최근에 발표된 OECD 보건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의료 접근성은 최고 수준이며, 기대수명은 83.5세로 높고, 의료질을 평가하는 지표



이상운 부회장
대한의사협회



중 인구 10만 명당 치료가 안되어 사망한 숫자, 즉 치료 가능사망률은 2021년 42.0명으로 OECD 평균 74.4명에 비해 크게 낮고 스위스 39명 다음 2위다.

지역간 편차도 총복이 46.9명으로, 우리나라에서는 꼴찌인데 이 숫자가 세계 5위 수준이다. 즉, 우리나라는 적은 수의 의사가 최고의 의료를 국민에게 제공하고 있고, 또 도시 농촌 간의 차이도 OECD 국가들과 비교할 때 매우 적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의료서비스는 의사 혼자 제공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의사가 늘어나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보건의료 인력, 장비, 시설 등 기본적 자원의 증대가 요구되고 그에 따라 당연히 의료행위가 늘어날 것이며 건강보험재정에는 빨간불이 켜질 것이다. 나아가 국민적 의료비 부담 문제, 지불문제 등이 사회 문제로 대두될 것이다. 그러므로 향후 초래될 의료비용과 부담에 대한 사회적 합의와 준비가 필요하다. 더욱이 의사증원이 반드시 필수 의료 의사 증가와 지역 의사 양성으로 이어진다는 보장이 없다. 오히려 다른 분야나 수도권 쏠림이 심해지면 그때는 정책적 해결 자체가 어려울 것으로 생각된다.

공공의대 문제와 관련해 공공병원에 대해 먼저 설명하자면 우리나라 총 병상수는 64만 병상인데 그중 6만 2천 병상이 공공병상이다. 문제는 현재의 공공병원들이 민간병원과 경쟁을 하고 수익사업에 전념해 공익적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데 있다. 의료행태는 비슷한데 치료질이 높지 못하고, 평균 재원 일수도 길고, 운영도 적자여서 국고보조가 필요한 상황이며, 특히 이번 코로나19 감염병 등 사태 때 공공의료기관의 역할 수행이 크게 부족했다. 그리고 공공의대를 신설해 필수

의료과를 강제로 전공시키거나 지역 의사로 일정기간 복무하게 하는 등 제한이 동반될 경우 국민들이 공공의대 출신 의사들에게 진료를 받으려 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양성된 의사들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복수전공을 하거나 수도권으로 진입을 시도할 것이다. 현 시점에서 의사증원 양성 등 문제에 대해서는 단기 중기 장기 계획을 세워 체계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단기 대책으로는 첫째, 의대증원 이전에 의사가 적 재적소에 적절히 배치되어야 한다. 의료는 질병·상태마다 의료요구량이 다르므로 필요한 요구량에 따라 의사를 우선 배치할 수 있는 정책이 1차로 진행되어야 한다. 전문가와 논의하면 쉽게 답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둘째, 필수의료분야에 과감한 수가개선 작업이 필요하다. 셋째, 환자를 소신있게 치료할 수 있는 의료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넷째, 수련비용의 정부 투자다. 전문의사를 양성함에 있어서 국가는 투자를 해야 한다. 대신 인력 배치와 효율성 있는 교육체계를 국가가 주도하고 양성해야 한다.

중기 대책으로는 의료전달체계의 확립이 필요하다. 의료 수도권 쏠림을 해결하고 수도권과 지역간의 의료질 차이를 극복할 과제가 있으며 국민들에게 최대한 의료기관 이용체계를 이해시키고, 질환의 경증, 중증에 따라 적절한 의료기관의 체계를 만들고 국민들은 그 적절성에 따른 치료를 받으면서 최고의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신뢰를 회복할 수 있어야 하며, 역시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국가적 보건의료 정책 총괄에 대한 목표와 실행방안을 시기별로 책정해 실행하고 검토해 대한민국의 미래의료를 준비해 가야 할 것이다. 🍵

의료취약지 의료인력 양성에 관한 제21대국회 입법 동향

우리나라 의료자원의 불균형 정도는 보건복지부가 올해 1월에 발표한 ‘필수의료 지원대책’에 따르면, 인구 천 명당 의료기관 종사 의사 수가 전국 평균 2.0명, 서울 3.2명, 경기 1.7명, 충북 1.6명 등의 편차를 보이는 수준이다. 지역 의료인력이 부족한 원인으로는 수도권에 비하여 생활, 자녀교육 및 진료 여건이 열악하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다.

이에 제21대국회에서는 의료자원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필요한 의료인력을 양성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의료인력 양성 관련, ‘지역의사법안’과 ‘공공의대법안’ 발의

의료인력 양성에 관하여 발의된 법안은 대체로 10년 동안 공공보건의료기관 등에서 의무복무하는 것을 조건으로 의사를 양성하려는 취지로, 크게 ‘지역의사법안’과 ‘공공의대법안’으로 구별할 수 있다. ‘공공의대법안’은 다시 전국 각지에 배치할 의사를 양성하기 위한 ‘(국립)공공의대법안’과 ‘한국방사선의대법안’, ‘공주의대법안’ 및 전남, 인천, 창원 등 특정 지역에서 복무할 의사를 양성하기 위한 ‘목포의대법안’, ‘전남의대법안’, ‘인천의대법안’, ‘창원의대법안’으로 구분된다. ‘지역의사법안’과 ‘(국립)공공의대법안’, ‘한국방사선의대법안’은 보건복지위원회 소관이고, 나머지 법안은 교육위원회 소관으로 심사 중이다.

‘지역의사법안’은 기존의 의과대학 등을 활용하여 10년간 의무복무를 하는 의사 등(김원이 의원안은 치과의사, 한의사도 포함)을 양성하려는 취지이다.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되고 소위에 회부되었고 이후 구체적인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국립)공공의대법안’은 (국립)공공의대(가칭)를 설립, 설치 또는 지정하



임제웅 입법조사관
보건복지위원회



여 전국 각지에서 10년간 의무복무하는 의사를 양성하려는 것이다. 의학전문대학원(4년제) 형태로 국립공공의대를 설립하려는 안(이용호 의원안, 김성주 의원안)과 기존 국립대학 내에 의과대학과 별개로 공공의대(6년제 학사과정)를 설치하려는 안(김형동 의원안), 국립대를 중심으로 기존 의과대학을 공공의대(6년제)로 지정하거나 기존 국립대 내에 공공의대(6년제)를 설치하려는 안(서동용 의원안), 지방자치단체가 교육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 의과대학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려는 안(기동민 의원안)이 이에 해당하며 보건복지위원회 제2법안심사소위에서 병합 심사 중이다.

‘한국방사선의대법안’, ‘창원의대법안’ 등도 ‘(국립)공공의대법안’과 유사한 취지로 의대를 설립 또는 설치하여 의무복무 의사를 양성하려는 것인데, ‘창원의대법안’은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 상정됐으나 논의되지 못했고, 나머지 법안들은 각 소관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되고 소위에 회부된 후 논의되지 않고 있다.

당초 보건복지부는 폐교된 구 서남대 의대가 있던 전북 남원에 국립공공의대를 설립하려는 계획을 발표(2018. 4. 11.)한 바 있다. 그러나 의료계가 진료 거부 등으로 반발하면서 보건복지부는 의대 정원 확대, 공공의대 신설 추진을 중단하고 코로나19 안정화 이후 의정협의체를 구성하여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협의하기로 대한의학협회와 합의(2020. 9. 4.)했다.

이후 국내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2022년 3월에 정점을 찍고 내려간 시점인 2022년 4월 26일에 보건복지위원회 제2법안심사소위에서 ‘(국립)공공의대법안’이 한 차례 논의되었는데, 의학전문대학원으로 기관의 성격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를 했고 이후 학생선발, 의무복무 등

상세 사항에 대해서는 법안 소위에서 다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2022년 정기회(제400회)에는 ‘국회법’에 따라 제정안/전부개정안에 대한 공청회가 개최되었다.

의료취약지 의료인력 양성에 관하여 향후 어느 법안을 중심으로 심사가 진행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

제21대국회 관련 법안 발의 현황

의안	대표발의	소관 위원회
지역의사 양성을 위한 법률안	김원이 의원	보건 복지위원회
지역의사법안	권철승 의원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이용호 의원	
공중보건장학을 위한 특례법 전부개정법률안	서동용 의원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동민 의원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	김성주 의원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치에 관한 법률안	김형동 의원	교육 위원회
한국방사선의과대학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전봉민 의원	
국립창원대학교 의과대학 설치에 관한 특별법안	강기윤 의원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교흥 의원	
국립목포대학교 의과대학 설치에 관한 특별법안	김원이 의원	
전라남도 내 의과대학의 설치 및 공공의료인 양성을 위한 특별법안	소병철 의원	
국립공주대학교 의과대학 설치에 관한 특별법안	성일종 의원	

“민생 살리는 정책과 입법으로 경제위기 대응하고 국가의 회복력 높일 것”

백혜련 정무위원회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경기도 수원시을)



Q. 정무위원회 소개와 위원장으로서의 포부를 말씀해 주십시오.

A. 정무위원회(이하 정무위)는 금융 정책을 통해 실물 경제를 지원하고, 혁신적인 경제성장과 공정한 시장경제를 촉진하는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또 국가 경제의 근간을 바로 세우고 활력을 불어넣는 책무를 지닌 상임위로 국무총리실, 국무조정실, 국민권익위원회, 금융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국가보훈처 등을 소관기관으로 두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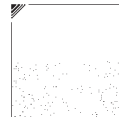
저는 ‘의회정치 부활’의 신호탄을 쏘아 올리겠다는 각오로 임기를 시작했습니다. 특히 대화와 타협이라는 의회의 기본 정신이 온전히 구현되는 정무위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올해는 작년에 이어 경제위기의 파고가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로 인한 원자재 가격 불안으로 물가의 고공행진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며 소비, 투자, 고용 등 내수 전망도 어둡습니다.

국민의 살림살이와 직결된 민생 현안들이 많은 상임위의 위원장으로서 경제위기에 대응하고 국가의 회복력을 높이는 일에 집중하겠습니다.

Q. 제21대국회에서 정무위원회가 거둔 성과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A. 지난해 7월 정무위원장이 된 후 상임위를 점검해 보니, 작년 상반기 정무위에서 처리한 법안이 ‘0’ 건이었



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는 정무위원장으로서 국회 본연의 기능인 입법을 활성화시키고자 했습니다.

여야 의원님들과 함께 하반기 정무위는 의미있는 법안들을 다수 처리할 수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개인정보 전송요구권을 도입해 국민의 개인정보에 대한 통제권을 강화하는 내용의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 근절과 피해자 보호를 내용으로 하는 ‘통신사기피해환급법’ 개정안 등 다수의 법률안이 정무위에서 가결되었습니다. 2022년을 기준으로 처음 법안을 통과시킨 것입니다.

또한 정무위는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을 운영하는 ‘메타’ 측이 사용자들에게 요구한 개인정보 수집 동의 방식 및 내용의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는 최소한의 개인정보 동의를 요구하고 있는지를 물었고 공정거래위원회에는 메타 측이 시장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과도한 개인정보 동의를 요구하는 것이 아닌지 짚어낸 것입니다. 그 결과 메타 측이 기존 개인정보 동의 요구에 대한 철회 입장을 밝혀왔고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요구되거나 공유되는 일을 막아냈습니다.

올해처럼 경제가 어려운 때, 민생을 살릴 수 있는 사안이라면 여야 간 언제든지 머리를 맞댈 수 있도록 정무위원장으로서 모든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Q. 올해 꼭 해결해야 할 정무위의 주요 현안이나 입법과제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A. 올해 2023년 우리 경제는 흑한기에 들어섰다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고금리·고물가로 서민과 취약계층·한계차주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물가와 민생 안정이 올해 정무위의 최우선 목표입니다. 이를 위해 위원회가 복합적 위기 상황을 면밀히 분석하고 점검해

정부부처가 선제적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요구하고, 민생경제를 뒷받침할 대응방안을 함께 만들어갈 계획입니다.

또한 다수의 가상자산 관련 법안과 온라인 플랫폼 법안이 정무위에 계류되어 있습니다. 가상자산 관련 법안은 예치금 관리 강화, 불공정거래 규제 도입 등 최소한의 이용자 보호장치 마련을 우선 추진하는 것에서 시작해 점진적·단계적 입법으로 기본법 제정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온라인 플랫폼 법안의 경우에는 시장지배적 온라인 플랫폼의 ‘정량적 기준’을 설정해 부당한 기업 인수합병·이해충돌·차별행위를 금지하고, 플랫폼 기업과 입점 사업자 간의 ‘표준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을 내용으로 합니다. 국민의 삶과 밀접한 법안들인 만큼 심도 있으면서도 신속한 심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Q. 마지막으로 위원장님의 정치철학과 더불어 여야 위원님께 덕담을 겸한 당부의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A. 대한민국에 상당 기간 복합위기가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경제위기, 민생위기로 인해 국민 여러분의 어깨가 무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치가 국민 여러분께 위로와 희망이 되어드려야 합니다.

그 어느 때보다 여야가 한마음이 되어 협치의 정치를 해야 하는 시기입니다. 지난해 정무위 위원장으로서 임기를 지내며 협치와 균형의 중요성을 다시금 느꼈습니다. 올해도 정무위 소속 여야 의원님들이 정쟁보다는 좋은 정책과 입법에 매진하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저 역시 균형 잡힌 시각으로 위원회를 이끌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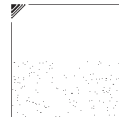
물은 배를 띄우기도 하지만 뒤집기도 합니다. 국민과 국익을 위하지 않는 정치는 언제든지 민심의 심판을 받을 수 있다는 생각으로 의정활동에 만전을 기할 것입니다. 🍵

글 김현아 사진 김진원

문화와 예술이 어우러진 행복도시 안양 만안구

강득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경기도 안양시만안구)





수리산과 관악산, 안양천 등 수려한 자연환경과 함께 안양예술공원, 안양아트센터, 병목안 시민공원 등 문화와 예술이 어우러진 살기 좋은 고장 안양 만안(萬安). 이곳은 아름다운 자연으로 이름났을 뿐 아니라 서안양 친환경 융합 스마트밸리 조성 등을 통해 역동적으로 성장하는 도시이기도 하다. 입춘(立春)이 막 지난 2월의 어느 날, 강득구 의원과 만안 지역을 둘러보며 지역과 정치 이야기를 들어 봤다.

25년 방치된 안양역 앞 폐건물을 철거하다

강득구 의원은 안양역 앞 변화한 거리에서 취재진을 만났다. 강 의원이 가리킨 것은 뜻밖에도 철거가 한창인 한 폐건물이었다. 강 의원은 “안양역 앞에 90년대 후반 골조공사만 끝낸 이래 25년째 방치된 폐건물을 철거하는 것은 지역 주민의 오랜 숙원이었다. 마침내 지난해 11월 안양역 앞 흉물인 폐건물 철거 공사가 시작됐다”고 소개했다. 목소리에 뿌듯함이 묻어났다.

“안양 시민 1만 4천여 명이 철거를 요구하는 서명운동을 벌였을 정도로 안양 시민들의 관심이 컸습니다. 폐건물이 철거되기까지 숱한 우여곡절이 있었지요.”

강 의원을 비롯해 만안구 시·도의원, 건축사, 변호사 등 지역 주민들이 대거 참여한 가운데 폐건물 철거를 위한 대책위원회도 구성됐다. 그렇지만 강제철거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사실상 없었다. 2021년 강 의원이 공사가 중단된 지 10년 이상인 건축물로 인해 지역 미관 저해 또는 안전상 문제가 발생할

경우, 기초자치단체장이 철거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하면서 강제철거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

이어 강 의원은 안양역 인근의 안양1번가에 들렀다. 이곳은 안양시의 대표적인 변화가로 손꼽히는 곳이다. 그는 “안양1번가는 오래전부터 안양을 대표하는 상권이었다. 안양역 앞이라 사람들의 왕래가 많다”고 소개했다. 강 의원은 안양시에 안양역 주변 상권 활성화를 위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 만안구 중심지구에 대한 종합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해왔다.

“올해는 안양시 승격 5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지방자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도시의 정주성과 자족성이지요. 안양은 정주성을 갖춘 도시입니다. 안양 시민들의 안양에 대한 애정과 자긍심은 그 어느 곳에도 뒤지지 않습니다. 이제 안양은 성장의 50년을 넘어 새로운 50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강득구 의원이 안양천 앞에 섰다. 아직 겨울 추위가 가시지 않았지만 안양천을 산책하





안양역 앞에 선 강득구 의원. 왼편에 흰 가림막이 쳐진 건물이 폐건물 윈스퀘어다.

는 주민들이 곳곳에 눈에 띄었다. 안양천 위로 청둥오리가 유유히 지나갔다. 안양천은 그에게 특별한 의미가 있는 곳이다.

“안양천은 8개 지역과 연결돼 있습니다. 약 100리길이라고 합니다. 오염되었던 하천을 지자체와 시민들의 노력으로 생태하천의 모습을 회복했지만 전 국민의 생활문화 공간으로 사랑받는 한강에 비해 전반적으로 편의 시설 등이 아직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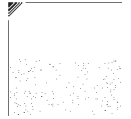
서울대관악수목원을 시민의 품으로

강 의원은 2021년 안양천변 지역구 의원들로 구성된 ‘안양천을 사랑하는 국회의원 모임’ 결성을 주도했다. 안양천을 시민친화형 하천으로 바꾸기 위해 정책, 입법, 예산 확보 방안 등에 대해 국회 내 논의를 시작한 것이다. 안양천을 공유하고 있는 서울권 4개 지자체(구로, 영등포, 양천, 금천구)와 경기권 4개 지자체(광명, 안양, 군포, 의왕시) 소속 국회의원 14명이 힘을 합쳤다. 이학영 의원

이 위원장을, 강득구 의원이 간사를 맡았다.

이어 강득구 의원은 만안구 석수동에 있는 ‘안양예술공원’으로 향했다. 공원 초입에는 시립박물관인 ‘안양박물관’이 위치해 있다. 처음에는 김중업박물관이라는 이름을 달고 건축가 김중업의 일상과 작품 등을 전시하다가 2017년 안양역사관이 이곳으로 옮겨오면서 안양박물관으로 개칭됐다. 안양예술공원은 과거 안양유원지로 불렸던 곳으로, 관악산과 삼성산 사이의 계곡에 흐르는 맑은 물과 울창한 숲이 주변의 전통사찰, 문화재 등과 조화를 이뤄 과거 수도권의 휴양지로 큰 인기를 끌었던 곳이라고 한다.

인공폭포, 야외무대, 전시관을 비롯해 광장, 산책로, 조명시설 등이 있고 곳곳에 국내외 유명작가의 예술작품 50여 점이 설치돼 있다. 안양예술공원 주변에는 울창한 숲 사이로 여러 등산로가 있어 수도권 시민들의 등산코스로도 사랑받고 있으며 안양사, 염불암 등 전통사찰과 보물 제4호인 중초사지 당간지주를 비롯해 중초사지 3층 석탑(경기도 유형문화재 제164호) 등도 자리하고 있다.



안양천에서



병목안 시민공원 내 캠핑장

안양예술공원을 쫓 따라 올라가면 서울대관악수목원이 나온다. 1천158종의 식물이 살아 숨 쉬는 관악수목원은 교육과 연구를 위해 설립된 우리나라 최초의 학교수목원이다. 안양시에 위치하고 있지만 수목 보호 등을 이유로 40년이 넘는 세월동안 일반인의 출입이 제한돼 왔다. 이에 수목원의 전면 개방을 요구하는 시민의 목소리가 끊이지 않았다고 한다. 강 의원은 국회 교육위 국정감사 때 서울대 총장으로부터 ‘수목원 개방 의지’ 확답을 받아냈다. 서울대와 안양시의 협의회 구성과 MOU를 지원하면서 지난해 4월과 10월 두 차례 수목원의 임시 개방을 이끌었고, 전면개방에 힘쓰고 있다.

“누구나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고 싶어”

강득구 의원은 제2대, 제5·6대 경기도의원을 지냈다. 만 35세의 젊은 나이에 도의원에 당선됐고 제9대 전반기 경기도의회 의장과 남경필 경기도지사 시절 경기도 연정부지사를 역임했다. 2020년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에서 안양시 만안구에 출마해 당선됐으며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강 의원은 마지막으로 병목안 시민공원에 들렀다. 이곳은 과거 철도에 부설할 자갈을 채취하던 채석장으로, 오랜 시간 방치됐다가 자연 친화적인 시설로 복원한 공원이다. 계곡 옆 병목안 캠핑장은 안양뿐 아니라 수도권 시민들이 자주 찾는 곳이다. 열은 미소를 띠고 시민들과 인사를 나누던 강 의원은 자신이 펼치고 싶은 ‘정치’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사람이 배움의 정도, 부의 정도, 어디 출신인지 그런 것 때문에 차별받아서는 안 되고, 누구나 존중받는 사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요즘 경제가 참 어렵다보니 주변에 반노숙인 상태가 되는 분들까지 있습니다. 이런 분들을 보듬는 우리 사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대한민국 성장, 발전도 중요하지만 지속가능한 사회에 대한 고민을 우선 가치로 생각했으면 합니다. 사람이 존중받고 지속가능성을 우선하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 제가 오늘도 정치를 하는 이유입니다.” 🏠

글 박민선 사진 유유키

자연에서 인생의 진리를 배우다 ‘나의 스승은 자연(我師自然)’



조명희 의원
(국민의힘, 비례대표)

우리나라 위성 정보 분야 1호 박사로, 40여 년간 지구관측 위성정보 기반 연구와 후학 양성에 몸담았던 조명희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의 인생 좌우명은 ‘나의 스승은 자연(我師自然)’이다. 조명희 의원을 만나 인생 좌우명과 의정활동 이야기를 들었다.

지리학을 전공한 조명희 의원은 “전공 덕분에 자연과 함께하면서 낮과 밤, 사계절의 균형과 조화를 항상 관찰하며 살았던 터라 자연에서 많은 가르침을 얻었다”고 했다.

“햇살이 너무 뜨겁다가도 어느 날 비가 오고 그러다 다시 날이 맑아지고, 혹독한 추위가 찾아오나 싶으면 어느 새 봄이 오고, 그런 자연과 마찬가지로 인생도 좋은 때가 있으면 힘들 때도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밤이 오면 머지않아 해가 뜰 것이라 생각하고, 날이 추우면 따뜻한 봄이 곧 올 것이라는 희망을 안고 인생의 고비를 넘겨왔습니다. 좋을 때 너무 자만하지 않고, 힘들 때 절망하지 않는 지혜를 가르쳐준 것이 자연입니다.”

대학 졸업 후 교사로 일했던 조명희 의원은 결혼하면서 교직을 떠나게 됐다.

“당시만 해도 사립학교 여교사는 결혼하면 일을 그만두어야 했습니다. 아이 둘을 키우며 소위 ‘경단녀’로 4년을 지내다가 다시 공부를 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요즘 같은 육아시스템이 전무한 시절이라



친정어머니가 고생을 많이 하셨지요. 할머니 시집살이를 하시면서 저희 아이까지 봐주셨거든요. 부모님께 늘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경북대 대학원에서 지리학 석사와 원격탐사 및 GIS 박사학위를 취득한 조 의원은 그 후 UNCRD(유엔지역개발센터) 연구원을 거쳐 1994년부터 경일대 위성정보공학과 교수로 일했다.

“열심히 프로젝트를 따서 장학금을 주면서 학생들을 가르쳤는데 졸업할 때가 되고 보니 취업시킬 회사가 없더군요. 당시 벤처붐이 일면서 학교 안에 창업보육센터가 생겼고 학교에서는 교수들이 창업해서 입주하는 것을 권장했어요. 그래서 제가 벤처회사를 창업해 학생들을 취업시켜 같이 일을 했습니다. 그러던 중 지리 정보 시스템이라는 새로운 기술이 막 나오기 시작해 일본 도카이대학 대학원으로 유학을 떠나 공학박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2013년부터 모교인 경북대 융복합시스템공학부 항공위성시스템전공 교수로 이직한 조명희 의원은 박근혜 정부 시절 대통령 소속 국가우주위원회 위원을 지냈으며 행정안전부, 미래창조과학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대구광역시, 경상북도, 국립환경과학원 등에서 자문위원으로 활동했다.

조 의원은 당시 했던 다양한 활동 중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우주소위 위원장을 맡아 차세대 중형위성 개발을 제안했던 것이 가장 보람 있는 일이었다고 회고했다.

“차세대 중형위성만큼은 농작물 작황 조사나 도시 계획 수립 등 국토와 자원을 관리하고 태풍·폭설·홍수·산불 피해 관측 등 재해나 재난 대응을 위해 영상자료를 확보하는 민간분야 위성으로 활용하자고 제가 제안했습니다. 1년에 3천억 원씩 위성 개발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해 이를 실현하도록 뒷받침했던 것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과학 분야 육성과 안정적·지속적 연구 환경 만들기 위해 노력할 터”

제21대국회에 입성한 조명희 의원은 4차 산업혁명시대에 걸맞은 과학 분야 육성과 세계 최고 수준의 과학자 배출을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1호 법안으로 대표발의해 2020년 11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조 의원은 “최근 10년간 노벨상 수상자들의 평균 나이는 69세, 평균 연구기간은 31.4년인데 우리나라 연구자의 정년은 연구기관이 61세, 대학은 65세로 장기연구가 불가능한 환경”이라며 “개정법률은 기초과학 분야의 장기연구를 지원하고, 국제 공동연구를 확대해 과학기술 분야 노벨상 수상을 촉진토록 한 것”이라고 소개했다.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도 조 의원이 대표발의해 통과시킨 법안이다.

조 의원은 “4차 산업혁명시대를 맞아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전문가들의 의견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과학기술 전문가의 자문을 구할 중앙정부의 지원이 부족했다”면서 “개정법률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과학기술전문 자문기구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에 구성된 과학기술전문 자문기구에 대한 국가의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이라고 소개했다. 그는 “법 통과를 계기로 정부와 지자체에서 과학기술전문 자문기구 운영을 통해 국가 과학기술의 전문성을 높일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간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위원으로서 국가 R&D 정책을 설계하고, 과학기술인이자 교육자로서 연구와 후학 양성에 30여 년간 매진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미래유망 과학 분야를 육성하고, 연구자들이 안정적·지속적 연구 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는 노력을 계속 해나가겠습니다.” 

글 김현아 사진 유윤기



강대식 의원
(국민의힘, 대구 동구을)

정치도 변치 않는 ‘소금처럼’

서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전라남도 영암군무안군신안군)

3월호 ‘칭찬합시다’의 주인공은 서삼석 의원이다. 그를 추천한 강대식 의원은 “서 의원은 저와 같은 지방의원으로 입문한 지역전문가로, 지역에 애착을 갖고 지방균형발전에 누구보다 진심인 분이다”라고 추천했다. 이에 서삼석 의원은 “강 의원이야말로 항상 전화할 때마다 지역에 있을 만큼 지역구 활동에 열심인 분이라 많이 배우고 있다”며 “긴 말보다는 눈빛 하나로도 충분히 의사 전달이 가능한, 여야를 떠나 무한한 신뢰를 보내는 동갑내기 친구인데 부끄럽지만 칭찬받아 기쁘긴 하다”며 웃었다.

전남 무안·영암·신안을 지역구로 둔 서삼석 의원은 전남도의원 재선과 군수 3선을 거쳐 지난 제20대국회에 보궐 선거로 여의도에 입성했다. 초등학교 시절 막연하게 ‘국회의원이 꿈’이라는 생각은 있었지만 정치를 해야겠다고 마음먹게 된 건 군수 시절 여러 정책 사업을 추진하면서 느꼈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동기가 컸다고 했다.

“오랜 시간 지역민들에게 신뢰를 받아온 만큼 많은

도움이 되고 싶었지만, 지역에 반드시 필요한 정책적인 문제들을 해결해야 할 때마다 현실적인 벽에 부딪혀 항상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지요.”

의원실 한쪽 벽에 ‘소금처럼’이라고 쓰여 있는 큰 팻말이 눈에 들어왔다. 한쪽에는 소금, 무화과, 비누 등 지역특산품들이 벽면을 가득 메우고 있었다. 서 의원은 취재진에게 직접 우려낸 차를 건네며 “마땅히 둘 곳이 없



어서"라며 씩스러워 했지만 지역구에 대한 남다른 애착이 느껴졌다.

“제 지역구인 신안군의 경우 1천 개가 넘는 섬이 있습니다. 의료 및 문화적 혜택을 받기도 힘든데 뚜렷한 근거나 체계가 없음에도 섬지역이라 택배가 어렵다는 이유만으로 추가 배송비를 적용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지난해 국정감사를 통해 연륙 섬 지역 택배비 부과의 부당함을 알리고 택배 3사를 대상으로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어려운 농산어촌을 위해 법도 만들고 정부 정책도 살피면서 특히 관련 예산을 확보하는 일이 다반사입니다만, 현장에 계시는 주민들의 체감 정도는 생각보다 크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해 드린 것에 대해서 지역구민들이 고마워하시는 모습을 볼 때 ‘큰 힘이 되었구나’ 느낄 수 있었지요.”

‘농산물가격안정법’ 통과로 농민 피해 없도록 할 것

서삼석 의원은 또 임기 중 대표발의한 ‘농산물가격안정법’을 반드시 통과시키고 싶다는 포부도 밝혔다.

“제20대국회에서 되풀이되는 농산물 가격폭락문제에 대응한 ‘농산물최저가격보장제’ 도입을 촉구했으나 반영되지 못해 제21대국회에서 재발의했습니다. 또 천일염 생산어가의 생존권 보장에 대한 제도적 기반마련을 위해 천일염최저가격보장제 도입을 골자로 한 ‘소금산업 진흥법’도 함께 발의했는데 이 두 법안 모두 지역소멸 위기의 농산어촌에 꼭 필요한 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서삼석 의원은 또 최근 농해수위 전체회의에서 소형 농작물 저온보관창고에 농산물 가공품을 보관하는 것에 대해 위약금을 부과하는 문제를 지적한 바 있다. 이후 한 국전력공사와 협의를 진행해 위약금 부과 관련 개선방안 등 후속조치가 조만간 이뤄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배추는 가능한데 쌀과 김치는 위약금 부과 대상이라

고 하는 것이 농업현실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규정이라 생각됐죠. 농사만 하는 분들이 법을 잘 알겠습니까? 애꿎은 농민들만 피해를 보는데, 이런 문제를 해결하라고 지역구민들이 저를 뽑아주신 거죠.”

서 의원은 수필·시집 형식의 ‘소금처럼’이란 제목의 책을 여러편 출간하기도 했다. 지역구에서는 ‘국회의원’보다 일명 ‘소금아저씨’로 더 자주 불린다고 했다. 서 의원은 “소금이 지역구와 관련도 있지만 소금이 가지고 있는 특성이 변하지 않는 것”이라며 “정치도 소금처럼 변치말자는 게 제 소신”이라고 강조했다.

“저에게 정치란 우선은 ‘신뢰’받는 사람입니다. 오늘도 중요하지만 내일을 준비하는 해안을 갖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일상적으로 말하는 다스리는 ‘정치’(政治)를 바르게 하는 ‘정치’(正治)로 생각하고 실천하고자 합니다.”



박덕흠 의원을 칭찬합니다

“박덕흠 의원(국민의힘, 충청북도 보은군옥천군영동군괴산군)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함께 활동하고 있는데 상대를 배려하는 마음이 몸에 배인 분입니다. 여야를 아우르는 리더십도 있으시고 남다른 포용력으로 여야간의 정쟁도 줄일 수 있는 분이죠. 항상 연륜있는 말씀과 행동에 감동도 받고, 배움도 얻습니다. 이웃집이 아닌 집안 형님 같으셔서 큰형님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

글 윤성혜 사진 유윤기

‘현장, 소통, 서민’ 나의 세 가지 키워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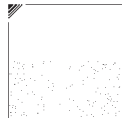
안병길 의원
(국민의힘, 부산광역시 서구동구)

언론인 출신인 안병길 의원은 2020년 제21대 총선에서 당선돼 국민의힘 대변인을 지냈고 현재 국민의힘 원내 부대표, 국회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지원특별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다. 부산 지역과 해양 전문가로 농림축산 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에서 활동하고 있는 안 의원의 인생과 정치이야기를 들어봤다.

경남 진주 태생인 그는 당시 전기도 안 들어오는 외곽의 시골에서 자랐다고 회상했다.

안 의원은 “고등학생 때까지 진주에서 살았다. 어린 시절 동물을 좋아해 동물 박사가 되고 싶어 이과를 선택했지만 적성에 맞지 않아 문과로 바뀌 법대에 진학했다”며 “생각해보니 인생이 제가 생각한 대로 된 건 하나도 없는 것 같다”고 웃었다.

“사법고시를 준비하던 시절, 친구와 지하철을 타고 가다 우연히 신문기자 모집 광고를 봤어요. 친구와 함께 지원을 했는데 친구는 떨어지고 저만 합격을 했습니다.”



기자로 사회생활을 시작한 그는 부산일보에서 사회부장·정치부장·편집국장·대표이사 사장까지 33년간 언론인으로 지냈다.

그가 2005년 편집국 부국장 시절 펴낸 ‘행동하는 언론 공공 저널리즘’은 공공저널리즘 보도기법을 구체적으로 담아 화제를 불러일으켰고, ‘차상위계층’이란 개념을 널리 알리는데 일조한 저서라는 평가를 받았다.

안 의원은 “취재부장 시절, 언론이 문제를 지적만 할 것이 아니라 대안도 제시해야 한다고 생각했다”며 “책에서 빈곤 문제 및 선거보도와 관련한 공공저널리즘 프로젝트를 소개했는데 좋은 반응을 일으켰다”고 소개했다.

언론인으로서 퇴직 이후 어떤 일을 해야 할지 고민하던 그에게 주변에서 사업과 정치는 하지 말라고 조언했다고 한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을까 생각하다 사회에 봉사를 해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부산에 국제구호단체가 별로 없어 제대로 된 단체를 한 번 만들어볼까 하다가, 정치도 봉사라는 생각에 정치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안 의원은 전략공천이 아닌 치열한 경선으로 공천을 받아 출마했고, 제21대 총선에서 당선됐다. 처음엔 야당 의원으로 출발했지만 2년 만에 여당 의원으로 신분이 바뀌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 직후 대통령직인수위원회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 태스크포스(TF)’에 참여해 박람회 유치와 부산 발전 로드맵을 새 정부 국정과제에 포함시키기도 했다.

그는 “저의 세 가지 키워드는 현장, 소통, 서민이다. 현장을 중요시하는 것은 기자생활 시절부터 몸에 밴 것”이라며 현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천막민생쉼터’다. 안 의원은 의원 당선 직후인 2020년 7월부터 지역에서 ‘천막민생쉼터’를 진행하고 있다. 매월 두 번 지역을 돌아다니며 3m×3m 크기의 천막을 치고 주민의 목소

리를 듣고 있다. 2년 반 동안 42번 천막을 쳤다고 한다.

“땀 흘리며 찾아오신 어르신, 답답한 점을 하소연하는 주민, 취업과 결혼이 막막해 고민하는 청년 등 수많은 주민들의 목소리를 생생하게 들었습니다. 앞으로도 천막민생쉼터는 계속되니 무엇이든 말씀하시면 됩니다. 무엇이든 들겠습니다.”

부산 및 전국의 원도심 부활을 위해

안병길 의원은 주변의 예상과 달리 상임위를 농해수위로 선택했다. 그는 “부산은 바다와 떼려야 뗄 수가 없는 도시여서 주저 없이 농해수위를 택했다. 부산 서구는 부산공동어시장 현대화 산업, 수산식품산업 클러스터 조성사업, 수산기자재 시험인증센터 건설사업 등 첨단수산업의 중심으로 키우고, 동구는 북항 재개발 2단계 사업, 산복도로 확장 및 버스베이 설치 사업, 육아종합지원센터 조성 사업 등으로 도시재생의 선두로 이끌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안 의원은 최근 ‘원도심 활성화법’(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그는 “10년이면 강산이 변하듯, 올해로 10주년을 맞은 이 법도 빠르게 낡은 원도심의 현실을 고려해 빨리 개정돼야 한다”며 “부산 서·동구뿐만 아니라 전국의 원도심들이 신도시와 비교해 정책적으로 소외를 받지 않도록 원도심 활성화법에 대한 정치권의 각별한 관심을 촉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지역 발전뿐만 아니라 부산 전체, 대한민국 균형발전에도 힘쓰겠습니다. 중앙정치인으로서 상임위와 입법 활동에 매진하고, 지역에선 현안을 해결하고 민심을 청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치봉사자로서 이제껏 해왔던 것처럼 앞으로도 계속 해나갈 것입니다.” 🏠

글 고영선 사진 임진완

충북 여야 국회의원,

‘충북 첨단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국회 토론회’ 개최

충청북도 지역 여야 국회의원들이 국회에서 충북의 첨단전략산업 육성 정책 방향에 대해 논의하는 토론회를 개최했다.

2월 7일 국회의원회관 2소회의실에서 열린 ‘충북 첨단전략산업 반도체·이차전지 육성을 위한 국회 토론회’는 이장섭 의원, 충청북도, 충청북도의회, 충북반도체, 이차전지산업육성협의회가 주관하고 더불어민주당 변재일(충청북도 청주시청원구)·도종환(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이장섭(충청북도 청주시서원구)·임호선(충청북도 증평군진천군음성군) 의원, 국민의힘 정우택(충청북도 청주시상당구)·이종배(충청북도 충주시)·박덕흠(충청북도 보은군옥천군영동군괴산군)·엄태영(충청북도 제천시단양군) 의원 등 충북의 모든 지역구 의원들이 공동 주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충북의 주력산업인 반도체와 이차전지 산업의 운명이 걸린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공모를 앞두고 개최됐다.

개회사에서 김영환 충북지사는 “충북은 반도체와 이차전지 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해 반도체 생산액 전국 2위, 이차전지 생산액 전국 1위 등 성장잠재력이 매우 풍부한 지역”이라며 “충북이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로 지정돼 더 많은 기업 투자가 이뤄지고 국제 경쟁력을 갖추 수 있도록 지원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이장섭 의원은 개회사에서 “K-반도체 벨트의 중심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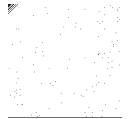
자 이차전지 산업의 압도적 경쟁우위를 갖춘 충북이 대한민국 첨단전략기술 초격차 육성을 위한 최적지”라며 “교통과 국가전략산업의 요충지인 충북이 균형 잡힌 대한민국 첨단산업 혁신 생태계를 선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덕흠 의원은 “첨단산업경쟁력은 단순한 산업기술을 넘어 국가안보에도 영향을 미친다. 우리는 세계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빈틈없이 전략을 준비해야 한다”며 충북의 자원을 십분 활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도종환 의원은 “전 세계가 첨단산업 전쟁에 사활을 걸고 있다. 충북 청주는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의 중심”이라며 “국회 차원에서도 국가첨단전략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할 수 있도록 법제도 정비에 더 노력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변재일 의원은 “첨단전략산업 육성을 위해서는 우수한 인력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근무자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한 초·중·고 교육여건 개선, 문화·체육 인프라 확충, 아파트 등 주택 공급을 위한 지자체의 노력을 당부했다.

이종배 의원은 “우리 첨단산업은 강대국에 밀리고 신흥국에 쫓기는 사면초가의 형국이 됐다”면서 “국내 첨단산업을 이끌어온 충북이 가진 인프라를 기반으로 새 정부와 함께 국가 첨단산업의 획기적인 발전을 이룩할



이종배·도종환·변재일 의원, 김영환 충북지사, 이장섭·박덕흠·양향자·임호선 의원, 이범석 청주시장, 조병옥 음성군수(앞줄 왼쪽부터) 등이 토론회에 참석해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것”이라고 강조했다.

임호선 의원은 “반도체와 이차전지 산업은 우리 경제의 중추를 담당하는 핵심 산업”이라며 “충북이 중부권 핵심거점 클러스터로서 기업투자, 인재 양성, R&D 분야의 밑그림을 그리고 국가균형발전의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전략을 구상해야 한다”고 말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국민의힘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양향자(무소속, 광주광역시 서구을) 의원은 특화단지 지정과 관련해 “충북의 특장점을 제대로, 설득력 있게 준비해야 한다”고 주문하기도 했다.

충북의 반도체, 이차전지 육성전략 논의

토론회는 충북의 주력산업이자 첨단전략산업인 충북 반도체, 이차전지 육성전략에 대한 주제발표를 시작으로 전문가 토론회 순으로 진행됐다. 여야 의원들은 주제가 지역과 국가의 중요한 현안인 만큼 토론회가 끝날 때까지 자리를 지키는 모습을 보였다. 의원들은 전문가들

이 나누는 토론을 경청하고 질문을 던지기도 했다. 특히 양향자 의원은 토론자 한 명 한 명과 각기 다른 질의응답을 벌여 눈길을 끌었다.

이용일 충북도 산업육성과장은 주제발표에서 충북의 반도체, 이차전지 산업의 강점과 대한민국 첨단전략산업 초격차 실현을 위한 충북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운영 방안을 제시했다.

특히 반도체에 대해서는 충북에 SK하이닉스, DB하이텍, 네팩스 등 국내 주요 반도체 관련 기업이 집적돼 있고 반도체 매출액(11조3천억 원)과 종사자 수(1만3천명)가 전국 2위 수준인 점도 강점으로 소개했다. 이차전지와 관련해서는 생산액(10조 원)과 수출액(21조9천억 원)이 전국 1위 수준인 점, LG에너지솔루션, 에코프로비엠 등 우수기업이 집적화 돼 있는 점을 강점으로 제시했다.

이규복 한국전자기술연구원 부원장을 좌장으로 한 전문가 토론회에서는 이일우 청주 SK하이닉스 부사장, 임영목 산업통상자원부 R&D전략기획단 MD, 김형준 차



‘충북 첨단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국회 토론회’ 포스터(왼쪽)와 토론회 현장

세대지능형반도체사업단 단장, 이주현 한국산업기술진흥원 본부장, 김남호 LG에너지솔루션 상무, 정순남 한국전지산업협회 부회장 등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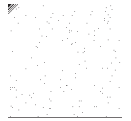
토론자들은 특화단지 지정과 관련해 충북이 가진 강점에 공감하며 분야별로 첨단전략산업 육성 방안과 향후 충북의 첨단전략산업 육성 정책 방향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임영목 MD는 ‘앵커 기업’(선도 기업)을 중심으로 한 집적 효과, 수요자 관점의 기반시설, 지역 주요 사업과 전략산업과의 연계발전 가능성, 전문 인력(인력공급·지역인재 육성)이 연계된 종합전략 마련을 주문했다. 김남호 LG에너지솔루션 상무는 글로벌 배터리 시장 상황과 오창 1·2공장을 중심으로 한 매출 성장 추이를 소개했고, 정순남 전자산업협회 부회장은 이차전지 산업 분야 인력 현황과 전망 등을 설명했다. 김형주 단장은 반도체

패키징 수요에 대응한 전략을 당부했다.

한편 정부는 반도체, 이차전지, 디스플레이를 3대 국가첨단전략산업으로 선정하고 초격차 기술의 선제 확보 등 글로벌 첨단기술 속도 경쟁의 우위를 점유하고, 첨단 전략산업의 안정적 생산거점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을 예고했다. 이와 관련해 산업통상자원부는 2월 27일까지 특화단지 지정 신청서와 육성계획서를 접수 받아 상반기 중 국가첨단전략 산업위원회 의결을 통해 특화단지를 지정할 예정이다.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로 지정되면 입지 및 기반시설 확보, 인·허가 특례, 사용료 및 부담금 감면, R&D 및 사업화 촉진 등을 지원받게 된다. 이 외에도 기업의 시설투자 세액 공제, 용적률 상향, 판로개척, 국내외 투자 유치 인센티브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

글 고영선



이달의 청원

국회의원의 소개를 받거나 5만 명 이상의 국민동의를 받아 국회에 접수된 청원은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어 법률안 처리절차와 동일하게 심사·처리된다. 지난 2월 14일 김진표 국회의장은 상임위원회로 회부된 청원의 충실하고 신속한 처리를 위해 청원심사를 위한 소위원회를 적극 활성화해 줄 것을 요청하는 협조서한을 국회 17개 상임위원장에게 전달했다.

제21대국회가 개원한 이후 현재까지 접수된 청원은 총 115건으로 의원소개청원이 63건이고, 국민동의청원이 52건이었다. 이 중 지난 2월 한 달 동안 접수된 청원은 모두 4건(의원소개청원 2건, 국민동의청원 2건)으로 주요 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유방암 치료제 엔허투의 건강보험 승인 촉구’에 관한 청원’은 유방암 치료제인 ‘엔허투’가 국내 허가를 획득했지만 1회 투여 비용이 약 500만 원에 달해 일반인들의 사용이 어려우므로 엔허투의 건강보험 승인을 요청하는 내용으로 국민 5만 명의 동의를 받아 지난 3일 보건복지위원회로 회부됐다.

둘째, ‘현실성 없는 유보통합 반대’에 관한 청원’은 최근 발표된 정부의 유아교육과 보육 통합방안에 대해 여

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줄속으로 진행되는 유보통합추진을 멈추어 줄 것을 요청하는 내용으로 국민 5만 명의 동의를 받아 지난 5일 교육위원회로 회부됐다.

셋째, ‘100%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위성정당 창당 방지를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에 관한 입법청원’은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전 도입한 준연동형 선거제도를 100%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개편하고, 비례대표 선출 방식을 개선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을 건의하는 내용으로 이상민 의원의 소개로 제출되어 지난 3일 정치개혁특별위원회로 회부됐다.

마지막으로 ‘고등교육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립대학 구조개선법 제정에 관한 청원’은 학령인구 급감과 이에 따른 대학 신입생 미충원 사태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고등교육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점검하고 과감한 구조개선을 통해 고등교육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사립대학구조개선법’ 제정을 건의하는 내용으로 이태규 의원의 소개로 제출되어 지난 13일 교육위원회로 회부됐다. 접수된 청원의 원문 및 위원회 심사정보 등 보다 자세한 내용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의 ‘청원현황’에서 찾아볼 수 있다. 🏠

국회민원지원센터

청원제목	청원자(소개의원)	소관위	접수일	구분
유방암 치료제 엔허투의 건강보험 승인 촉구에 관한 청원	임여정	보건복지	2. 3.	국민동의청원
현실성 없는 유보통합 반대’에 관한 청원	김수아	교육	2. 5.	국민동의청원
100%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위성정당 창당 방지를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에 관한 입법청원	김성달(이상민 의원)	정치개혁특별	2. 3.	의원소개청원
고등교육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립대학구조개선법 제정에 관한 청원	정진택(이태규 의원)	교육	2. 13.	의원소개청원

국가 재난관리자원의 체계적·효율적인 관리체계 구축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지난 2월 6일 튀르키예·시리아 지역에서 발생한 대지진이 자연재난의 무서움을 일깨워 주었다면, 작년 10월 29일 발생한 이태원 참사는 우리의 생활 주변에서 일어날 수 있는 사회재난이 얼마나 우리의 일상을 파괴하고 회복하기 어려운 후유증을 남기는가 하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¹⁾ 인간의 다양한 재해예방 노력에도 불구하고 세계적인 기후변화에 따른 기상재해, 대형 산불, 태풍, 홍수, 지진 등 자연재해가 세계 여러 곳에서 발생하고 있고, 신종 바이러스 등에 의한 감염병 확산, 미세먼지에 의한 피해 등으로 인류가 고통받고 있다. 재해와 관련해서는 사전에 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는 한편, 일단 재해가 발생한 경우라면 신속하고도 효과적으로 재해를 수습하고 복구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러한 일련의 활동을 재난관리²⁾라고 한다. 그리고 재난관리에 있어서 사전 예방과 수습 및 복구가 원활하게 이루어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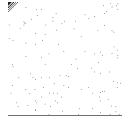
박규찬 전문위원
행정안전위원회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정의) 제1호에서 재난을 국민의 생명·신체·재산과 국가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것으로 정의하면서 그 종류를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으로 구분하고 있다.

- 자연재난: 태풍, 홍수, 호우(豪雨), 강풍, 풍랑, 해일(海溢), 대설, 한파, 낙뢰, 가뭄, 폭염, 지진, 황사(黃砂), 조류(藻類) 대발생, 조수(潮水), 화산활동, 소행성·유성체 등 자연우주물체의 추락·충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

- 사회재난: 화재·붕괴·폭발·교통사고(항공사고 및 해상사고를 포함한다)·화생방사고·환경오염사고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피해와 국가핵심기반의 마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른 가축전염병의 확산,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미세먼지 등으로 인한 피해

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정의) 제3호: '재난관리'란 재난의 예방·대비·대응 및 복구를 위해 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기 위해서는 재난관리를 위해 필요한 물적·인적 도구인 재난관리자원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안’ 제정과정과 주요내용

그런데, 우리나라의 경우 재난관리자원 관리에 있어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재난관리자원의 비축 및 지정 등 관리에 관한 근거규정을 두고 있으나, 구체적인 관리 방법 등에 관하여는 ‘물품관리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물품이나 재산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따르도록 하고 있어서 재난관리자원의 특수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었다. 또한, 감염병·풍수해 등 실제 재난이 발생했을 때 그 수습에 필요한 물품 등 자원이 부족하거나 오히려 과잉 비축으로 불용처리되는 등 현행 체계로는 기후변화 및 신종 감염병 등 대형화·복잡화하는 재난 대응에 한계가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었다. 특히 코로나19 초기에 발생한 방역 물품의 부족 사태 등을 계기로 각종 재난에 대비하기 위한 국가 차원의 재난관리자원 관리체계 구축의 필요성이 더욱 부각됐다.

이에 행정안전위원회에서는 박완주 의원의 ‘재난관리자원의 관리에 관한 법률안’과 이만희 의원의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안’을 통합해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안(대안)’을 제안하기로 했다. 두 의원의 제정안들은 전체적으로 유사한 내용이었으나 제정법안의 내용이 재난관리자원의 관리뿐만 아니라 공급망관리체계, 물류체계 및 동원 등에 관한 사항도 규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법안의 제명에 ‘관리 등’을 명시하기로 했다. 이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안’은 2022년 12월 28일 본회의를 통과했고, 2023년 1월

17일 공포되어 1년의 준비기간을 거쳐 2024년 1월 18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재난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물품·재산 및 인력 등 물적·인적 자원을 재난관리자원으로 정의하고, 행정안전부 장관이 재난관리를 위해 공급망관리체계를 구축하도록 했다. 둘째, 국가재난관리지원기업·지역재난관리지원기업 및 국가재난관리물류기업의 지정 및 준비조치 등을 통해 공급망관리체계 구축 및 재난관리자원 공급·동원 등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했다. 셋째, 재난관리물품의 비축·관리, 취득·보관 및 사용·처분 등에 관한 사항과 재난관리재산 및 재난관리인력의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세부적으로 정하고, 재난관리자원의 통합 관리 및 동원에 관한 사항을 구체화함으로써 각종 재난 발생 시 재난관리자원을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동원할 수 있도록 했다.

위원회 심사 과정에서는 특히 국가재난관리지원기업 등의 지정과 관련, 지정 업무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해당 기업을 지정할 때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방법 및 기준에 따르도록 함과 아울러 그 지정 사실을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을 추가했고, 관련 기업들의 책임성을 담보하기 위해 국가재난관리지원기업 등의 지정 해제 사유에 기존의 폐업·도산 외에 법령 위반의 경우를 추가하도록 했다.

앞으로, 이 법률이 국가재난관리자원 통합관리정보센터를 통해 ‘디지털 기반 재난관리자원 통합관리체계’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해 재난관리자원을 체계적·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재난 발생 시 필요한 재난관리자원을 신속·안정적으로 동원함으로써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기여하기를 기대해 본다. 🍵

젊은당뇨병 환자 지원법안, 난방비 폭탄 대안, 지역균형 비례대표제 등 주제로 토론회 열려

· 소아·청소년·청년 당뇨병 법안 상정과 통과를 위한 정책토론회

강훈식·전혜숙 의원(더불어민주당)과 이명수·최재형·서정숙 의원(국민의힘)은 2월 1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소아·청소년·청년 당뇨병법안 상정과 통과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젊은 당뇨병의 임상적 특징과 환자들이 경험하는 현실적인 문제를 짚어보고 포괄적인 해결 방안과 함께 조속한 법안(이하 젊은당뇨병 환자 지원법) 통과를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재 ‘젊은당뇨병 환자 지원법’은 2021년 이명수 의원이 대표발의했지만 아직 한 차례도 논의되지 못한 상태다. 해당 법안은 0세부터 34세까지의 젊은 당뇨병 환자의 혈당관리 환경과 처우 개선 등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이들을 위한 당뇨병 예방과 관리, 정책적 지원 등이 주된 내용이다.

토론회에서는 박석오 대한당뇨병연합 등기이사의 발제와 오한진 대한가정의학회 회장, 정춘희 연세대 원주 의과대학 교수 등 각계각층의 전문가들이 참석해 젊은 당뇨병 환자들을 위한 체계적인 관리와 제도적 뒷받침의 필요성 및 관련 법안 체계 구축과 법안 통과 필요성 등에 대해 토론했다.

· 난방비 폭탄 대안 마련 토론회

더불어민주당 탄소중립위원회는 2월 2일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난방비 폭탄 대안 마련 토론회’를 개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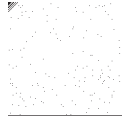
이번 토론회는 취약계층의 난방비 부담 경감 방안, 재생에너지 중심의 바람직한 에너지 전환정책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토론회에서는 전 세계 가스시장과 세계 각국의 에너지 위기 현황과 함께 권승문 민주연구원 박사가 ‘기후위기 한파가 도래한 상황에서 정부의 에너지 정책’을 주제로 발표했다. 이어 석광훈 에너지전환포럼 전문위원이 ‘에너지 위기 시대, 세계 각국의 대응’을, 윤용상 에너지공유 대표가 ‘에너지 위기 상황에서 건물 부문 정책의 문제점과 대안’을 주제로 발제했다.

이어진 종합토론에서는 양의원영 의원이 좌장을 맡아 참석자들과 현행 정책의 한계점을 짚고 개선 방안을 모색했다.

· 스쿨존 어린이 교통사고, 왜 제자리인가?

안전한 스쿨존 조성을 위한 정책 토론회가 국회에서 열렸다. 태영호 의원(국민의힘)은 2월 3일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스쿨존 어린이 교통사고, 왜 제자리인가’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지난해 12월 서울 강남구 청담동 언북초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로 9살 이동원군이 희생된 참사를 계기로 어린이를 보호하지 못하는 ‘어린이 보호구역’의 실태를 고발하고 어린이 안전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책을 수립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태영호 의원이 1월 27일 대표 발의한 스쿨존 안전 강화 법안(도로교통법·도로법 개정안), 일명 ‘동원이법’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다.

이날 토론회의 좌장은 우승국 한국교통연구원 교통안전방재연구센터장이 맡았고, 허억 가천대 행정학과 교수, 강수철 도로관리공단 본부장이 스쿨존 어린이 안전 강화 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정부 측에서는 조우종 경찰청 교통운영과장이 참여해 스쿨존 어린이 교통사고 현황과 과제에 대해 발표에 나섰고, ‘동원이법’에 대해서는 권순호 변호사가 발제를 맡아 진행했다.

· 실손보험 미지급 사태에 대한 국회 정책 간담회

제2의 건강보험이라 불리는 실손의료보험이 최근 보험금 미지급 사태로 분쟁이 치열해지고 있는 가운데 국회에서 그 원인과 대안을 찾기 위한 간담회가 열렸다. 김한규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월 6일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실손보험 미지급 사태에 대한 국회 정책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김종명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대표의 ‘실손의료보험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한 발제를 시작으로 김희경 생명보험협회 보험심사부 부장, 정경인 실손보험 소비자권리찾기 시민연대 대표, 이형걸 손해보험협회 장기보험부 부장, 유원규 금융위원회 보험과 사무관 등이 참석해 최근 화두가 되고 있는 실손

의료보험 문제점, 개선방안과 함께 구체적인 소비자 피해사례가 다수 소개됐다.

또, 백내장 보험금 부지급에 대한 최근 사법부의 판결을 소개하며 관련 종사자를 대상으로 개선방안 등에 대한 토론이 이어졌다.

· 기업 승계 활성화를 위한 개혁과제 세미나

박대출 의원(국민의힘)은 2월 7일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기업 승계 활성화를 위한 개혁과제 세미나’를 개최했다. 세미나는 상속세로 인한 기업 경영권 상실 문제를 진단하고, 기업 승계를 활성화하기 위한 세법 등 법·제도 혁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세미나에 참석한 각계 전문가들은 현행 상속세 제도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글로벌 수준에 맞는 세율과 과세 방법을 도입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선진국 수준의 장수 기업 조성 환경을 만들기 위해, 상속세 개편과 공익재단 활성화 등 비기업 승계 제도의 과제와 해결방안에 대해 의견을 내기도 했다.

이호선 국민대 법과대 교수는 상속세 제도의 위헌성을 구체적으로 지적했고, 신중섭 강원대 윤리교육과 교수는 “헌법재판소로부터 현행 상속법이 위헌이라는 결정을 끌어낼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황승연 경희대 사회학과 교수는 상속세를 자본 이득세로 바꿔야 한다고 제언했다.

· ‘지역균형 비례대표제가 답이다!’ 토론회

윤호중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월 8일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지역균형 비례대표제가 답이다!’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는 지난 1월 윤호중 의원이 ‘지역균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골자로 대표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

법률안'의 구체적 검토 및 합리적 선거제 개혁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에서는 지역균형 비례대표제 법안 내용을 다루고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편 제안-권역별 지역균형비례제' 주제를 바탕으로 토론이 이뤄졌다. '지역균형 비례대표제'는 비례대표 의석을 늘리고 6개 권역으로 나누어 각 정당이 권역별로 얻은 득표율에 따라 권역별 비례대표 의석을 결정하되 지역불균형 해소를 위해 비수도권 권역에 인구 가중치를 적용, 기존 비례대표제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이다.

기조연설자로 나선 김태일 장안대 총장은 거대 양당 독점체제의 부작용을 여러 사례를 통해 설명하고 '선거법 개혁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한상익 가천대 교수는 '5개 권역+1개 특별 권역의 지역균형 비례대표제' 구상을 제안했다. 이어 참석자들은 '지역균형 비례대표제'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낳은 부작용을 보완하고 지역불균형을 해소하면서 지역주의 완화와 함께 대표성·비례성·다양성을 강화한다고 주장했다.

• '미충족 필수의료 못하는 국립중앙의료원의 좌절' 국회토론회

조명희 의원(국민의힘)은 2월 9일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미충족 필수의료 못하는 국립중앙의료원의 좌절' 국회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는 국가 의료 제공을 위한 국립중앙의료원 신축·이전 병상 확보 대책을 마련하고, 현재의 국립중앙의료원 수준을 검토해 확대, 발전시키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마련됐다.

토론회에서는 이소희 국립중앙의료원 전문의협의회장이 '국립중앙의료원 현대화 사업 예산 삭감이 불러 올

미래'를 발제하면서 국립중앙의료원이 공공보건의료체계 총괄기관으로서 제 역할을 하기 위한 필요 충족요건 등을 발표했다.

이후 김연재 국립중앙의료원 중앙감염병병원운영센터장, 엄중식 가천대 의대 감염내과 교수, 정경원 아주대의대 외상외과 교수 등 다양한 보건의료 전문가들이 국립중앙의료원의 현대화 사업 규모 현안과 총사업비 조정결과의 문제점, 정부의 재정적 지원 강화의 필요성, 중앙감염병병원의 기능유지를 위한 모병원의 적정규모 필요성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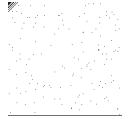
• 일하는 사람들을 위한 선거제 개혁 토론회

김종민(더불어민주당), 김형동(국민의힘), 배진교(정의당) 의원은 2월 13일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위한 선거제 개혁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는 지역주의와 정치 양극화를 극복하기 위한 새로운 선거제도 도입 방안을 모색하고자 개최됐다.

토론회 주제발표에서 발제자로 나선 조성복 중앙대 교수가 사회통합과 갈등조정을 위한 선거제도 개혁과제에 대해 발제했으며 조 교수는 권역별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과 정당 설립 요건 완화, 교사·공무원 등의 정치기본권 보장 등의 선거제도 개편과 참정권 확대 방안을 제안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하승수 농본 변호사, 권두섭 민주노총 법률원 변호사, 허석재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등이 소선거구제+권역별 연동형 비례대표제, 대선거구제+권역별 비례대표제(개방형),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 선거일 유급 공휴일 적용, 협동조합·지방 공기업 노동자의 정치기본권 보장 등에 대해 토론을 펼쳤다. 🍵



2월에 개최된 국회 토론회 및 세미나 안내(2.1~2.16)

일시	세미나	주최	장소
2.1(수)	2023 제5회 디움 국회세미나 - 바람직한 디지털자산 투자자 보호 제도 확립	강민국 의원실	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
	국정원의 시간은 거꾸로 간다	김의겸, 기동민, 김남국, 김병기, 박범계, 윤건영, 최강욱 의원실	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
	사학기관 외부회계 감사제도 개선방안	이태규 의원실	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
	‘더 플레이어’ 출판 기념회	윤상현 의원실	의원회관 대회의실
	소아·청소년·청년 당뇨병법안 상정과 통과를 위한 정책토론회	이명수, 전해숙, 강훈식, 최재형, 서정숙 의원실	국회도서관 소회의실
2.2(목)	신용생명보험, 빌라왕 사태 대책이 될 수 있을까?	최승재 의원실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
	혁신형 SMR 국회포럼	이원욱, 김영식 의원실	글래드 여의도 호텔 블루A홀
	대한민국 복합위기, 극복의 길 - 위공 박세일 선생 서거 6주년 추모 세미나	박수영 의원실	의원회관 신관 제2세미나실
	윤석열 정부 사회적기업 정책수립을 위한 국회 토론회	박대수, 김형동, 이주한 의원실	의원회관 제5간담회의실
	난방비 폭탄 대안 마련 토론회	더불어민주당 탄소중립위원회	의원회관 신관 제세미나실
	농어업·농어촌 특별위원회 역할과 발전 방향 정책 토론회	홍문표 의원실	의원회관 제3간담회의실
	국가구강검진제도 활성화 방안 공청회	정춘숙 의원실	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
2.3(금)	CJ택배기사 1심 판결이 의미하는 노동조합법 개정 방향	김영진, 노웅래, 우원식, 윤건영, 이수진 (비), 이학영, 전용기, 진성준 의원실	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
	선감학원사건 진상규명 및 특별법 제정을 위한 토론회	김철민 의원실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
	중대재해처벌법 과연 위헌인가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1년, 평가와 과제	박범계, 진성준, 박주민, 이수진, 이탄희, 최강욱, 심상정, 강은미, 류호정, 배진교, 이은주, 장혜영 의원실	의원회관 신관 제2세미나실
	스쿨존 어린이 교통사고, 왜 제자리인가?	태영호 의원실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
	한국사회 갈등사례 토론회	이달곤 의원실	국회도서관 소회의실
2.6(월)	실손보험 미지급 사태에 대한 국회 정책 간담회	김한규 의원실	의원회관 신관 제세미나실
	국가 암빅데이터 활용과 의료산업 발전방안	홍정민, 전해숙 의원실	의원회관 신관 제세미나실
	디지털 대전환 시대 노인 건강불평등 현황과 과제	김민석 의원실	의원회관 제2간담회의실
	김한규와 경제 읽기: 시즌3, 5강 주식시장: 지금 주목해야 할 지표는?	김한규 의원실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
2.7(화)	학교도서관 길 찾기, 사서가 있어야 도서관이다 - 학교도서관 정책토론회	도종환 의원실	국회도서관 소회의실
	IB(국제 바칼로레아), 공교육 도입 의의와 과제	하태경, 위성곤 의원실	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
	대구 미래모빌리티 모터 특화단지 조성 포럼	양금희 의원실	의원회관 신관 제3세미나실
	충북 첨단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국회 토론회	이장섭, 도종환, 박덕흠, 변재일, 엄태영, 이종배, 임호선, 정우택 의원실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
	기업 승계 활성화를 위한 개혁과제 세미나: 상속세 개정 및 공익재단 활성화를 중심으로	박대출 의원실	의원회관 신관 제3세미나실
	더불어민주당 정치혁신위원회 혁신토론회	더불어민주당 정치혁신위원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

일하는 국회
공부하는 국회

일시	세미나	주최	장소
2.7(화)	환경갈등사례를 통해서 본 환경영향평가법 개선방향 토론회	이은주, 심상정, 우원식, 이학영, 진성준 의원실	의원회관 제7간담회의실
	한국과 중국의 오늘과 내일: 제1회 중국의 정치체제	홍영표, 김학용 의원실	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
2.8(수)	제4차 국회의원 경제세미나: 경제는 민주당	더불어민주당 민생경제위기대책위원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
	지역균형 비례대표제 토론회 - 지역균형 비례대표제가 답이다	윤호중 의원실	의원회관 신관 제1세미나실
	동물 대신 신기술로 시험하는 시대	남인순, 이주환 의원실 등, 동물복지 국회포럼	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
	올바른 공론장 형성을 위한 포털의 역할	윤두현 의원실, 국민의힘 정책위원회, 국민의힘 ICT미디어진흥특별위원회	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
	유무인전투체계 구축 및 대응방향 세미나	신원식 의원실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
2.9(목)	국가균형발전특별위원회 발족식 및 국가균형발전 3.0시대의 정책 방향 토론회	더불어민주당 국가균형발전특별위원회	의원회관 신관 제2세미나실
	미충족 필수의료 못하는 국립중앙의료원의 좌절	조명희 의원실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
	플랫폼 독과점 완화를 위한 현실적 입법 방안 모색	강병원, 최승재 의원실	의원회관 신관 제1세미나실
2.10(금)	북한주민의 생명권 보호 및 인권증진을 위한 국제사회의 역할	태영호 의원실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
	일치를 향한 글로벌 리더십 청년학교	이명수, 박찬대 의원실	의원회관 신관 제3세미나실
2.13(월)	왜 한국에겐 반도체 산업인가? 무엇을 해야 하나?	양향자, 박성민, 조응천, 조정훈, 최형두, 김영호, 김미애, 박수영, 서범수, 안병길 의원실, 국회글로벌 혁신연구포럼	의원회관 신관 제3세미나실
	도시침수 대책 마련을 위한 입법토론회	노웅래, 박대수 의원실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
	철도 교통의 마케팅이 나아가야 할 새로운 방향 모색	민홍철 의원실	의원회관 신관 제1세미나실
	일하는 사람들을 위한 선거제 개혁 국회 토론회	김종민, 김형동, 배진교 의원실	의원회관 신관 제3세미나실
	퇴역 경주마 복지 개선을 위한 국회토론회	윤미향, 위성곤 의원실, 동물복지국회포럼	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
2.14(화)	도산 안창호 - 미주도산기념관 설립을 위한 정책 토론회	배현진 의원실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
	윤석열정부 부동산 정책 전문가에게 듣는다	김민기, 최인호, 김두관, 김민철 의원실	의원회관 제5간담회의실
	임상데이터 활용을 위한 공공데이터 결합 활성화	서정숙 의원실	의원회관 신관 제3세미나실
	서울 막사발 실크로드 포럼 2023	이태규, 이용호 의원실	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
2.15(수)	한국과 중국의 오늘과 내일: 제2회 중국의 경제전략 및 한중경제 전망	홍영표, 김학용 의원실	의원회관 신관 제2세미나실
	발전 온배수 관리 시스템 구축 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토론회	김정호, 양이원영, 이수진(비) 의원실	의원회관 신관 제3세미나실
	세계인의 한류, 세계인의 한국어, 세종학당의 도전과 미래	김승수, 이병훈 의원실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
	유럽 특허침해소송 제도의 대대적 변혁과 시사점	박범계 의원실	의원회관 신관 제1세미나실
	WHO 고령화 정책을 통해 바라본 노인 통합 돌봄 정책 세미나	최영희, 강기윤, 김성원 의원실, 국회입법조사처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
	무안공항 활성화를 위한 정책 세미나	서삼석, 김두관, 이개호, 김승남, 신정훈, 김원이, 김희재, 서동용, 소병철, 윤재갑, 조오섭, 주철현 의원실	의원회관 신관 제3세미나실
	안성시 반도체 산업 유치 전략 토론회	최혜영 의원실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
	웹툰작가 창작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 간담회	류호정, 김승수, 유정주 의원실	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
2.16(목)	이륜차 배달업 종사자와 국민 모두를 위한 안전체계 구축 대토론회	민홍철, 임호선 의원실	의원회관 신관 제2세미나실
	미래세대 일하는 시민의 연금개혁 목소리	정춘숙, 강훈식, 고영인, 김민석, 신현영, 한정애 의원실	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
	국내 모바일 앱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정책지원 방안	정우택, 김영식 의원실	의원회관 신관 제3세미나실

국회 토론회 및 세미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국회의원 정책자료'(https://ampos.nanet.go.kr:7443/main.do)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유카

국회 소통관 중앙정원에 가는 길이 사방으로 퍼진 독특한 모양의 식물이 눈에 띕니다. 추운 겨울에도 선명한 초록 잎을 자랑하는 실유카입니다. 흰색 꽃이 7~8월에 울망줄망 핍니다. 북아메리카가 고향인 유카에 속하는 식물에는 여러 종류가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잎 가장자리에 하얀 실처럼 생긴 섬유 가닥이 늘어지는 실유카가 많이 자란다고 합니다. 꽃말은 ‘강인함’과 ‘끈기’입니다. 🌻

글 박민선 사진 김진원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은 우리 의회 외교의 방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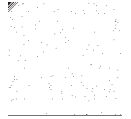
올해로 한미 동맹이 70주년을 맞게 된다. 2022년 8월 김진표 국회의장은 방한한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과 공동 언론 발표에서 “한미 동맹 70주년 기념 결의안 채택을 검토하고, 북핵 문제의 실질적 해결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후 우리 국회는 2월 24일 열린 본회의에서 ‘한미 동맹 70주년 기념 양국 관계 지속 발전 촉구 특별 결의안’을 의결했다.

돌이켜보면 1950년 발발한 한국 전쟁 휴전 이후 맺어진 한미상호방위조약은 미국 헌법 절차에 따라 미국 상원에 의해 1954년 1월 26일 비준됐다. 찬성 81명, 반대 6명이라는 압도적이고 초당파적인 지지로 한미상호방위조약이 통과됐다. 그런데 흥미로운 사실은 반대표를 던진 미국 상원 의원들이 당시와 이후 미국 외교의 중진급 의원들이었다는 점이다. 루이지애나 출신의 미국 외교 대부 격인 러셀 롱 의원의 경우 한국과 미국 간 동맹 조약이 핵전쟁의 가능성을 높일 것이라는 이유를 제시했다. 상원의 군사위원장을 맡게 된 존 스테니스 미시시피 의원은 조약이 체결되면 의회의 승인 없이 대통령이 군대를 파견할 수 있게 되는지에 대한 의구심을 이유로 찬성하지 않았다. 초당파적 합의와 비판적 토론이 공존하는 미국 의회 외교 정책의 특징을 잘 보여주는 대목이다.

한국 전쟁을 계기로 처음 결성된 동맹 중심의 한미 관계가 미국과 중국 간 경쟁 구조의 등장으로 인해 새로운 도전과 선택에 직면하고 있다. 미국과 중국이 벌이는 다차원적인 경쟁은 우리로 하여금 안보와 통상, 그리고 북한 문제에 이르기까지 기존의 접근법을 재검토하고 새로운 전략을 모색하도록 만드는 계기가 되고 있다. 사실 트럼프 전 대통령 임기 4년 동안 미국이 추진했던 중국 견제 조치들은 대통령의 행정 명령에 근거한 측면이 컸다. 오랫동안 자유 무역을 옹호해 온 공화당을 통해서만 미국 우선주의를 위한 의회 입법을 만들어내기 어렵다고 본 트럼프의 대안적 선택이었다. 따라서 트



서정건 교수
경희대 정치외교학과



럼프 4년간 미국의 중국 견제는 관세 폭탄 혹은 2020년 초 1단계 합의 등 주로 행정부 차원에서 진행됐고 미국 의회의 직접적인 개입은 찾아보기 어려웠던 것이 사실이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바이든 행정부 이후 미국은 백신 접종 드라이브와 코로나 재난 지원금, 사회간접자본 등을 포함한 대대적인 입법 정치에 나서게 된다. 하지만 민주당 내부의 중도파와 진보파 간 합의 실패로 인해 바이든 대통령이 야심차게 추진했던 “더 나은 재건 (Build Back Better)” 관련 법안들은 큰 진척을 보지 못했다. 전격적으로 2022년 7월과 8월 미국 의회는 반도체 과학법(CHIPS and Science Act)과 인플레이션 감축법(Inflation Reduction Act)을 연달아 통과시킨다. 특히 인플레이션 감축법 조항 중에 “북미 지역 최종 조립 (finally assembled in North America)” 요건을 충족한 전기차에 한해 7천500달러 규모의 세제 혜택을 부여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로 인해 한국 전기차 수출에 비상이 걸린 사실은 이미 잘 알려져 있다.

이처럼 급변하는 국제 정세와 한미 관계에 대처하는 우리 국회의 의회 외교 현실은 어떨까? 특히 한국 국회와 미국 의회 간 기존의 교류 및 협력은 주로 인적 차원, 즉 의원 외교에 초점이 맞춰져 왔다. 어느 나라 의회나 주로 국내 문제를 다루고 있으므로 국경을 넘어 의회끼리 교류하는 범주는 주로 인적 차원을 넘어서기 어렵기 때문이다. 그런데 의원 외교는 대외 정책과 관련성이 높은 국내 문제에 대한 상호 이해를 높이고 행정부가 다루기 어려운 이슈들을 논의하는 기회의 확대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와 같은 긍정적인 측면에도 불구하고 근본적으로 민주주의 국가의 의회 구성원인 의원들은 우선 선거를 통한 당락으로 인해 자주 바뀔 수밖에 없다는 점, 양국 의회 현실상 외교 정책 전문가 의원 (congressional foreign policy entrepreneurs)들이 많

지 않다는 점, 우리 국회 경우 초선 의원 비율이 매 의회 절반에 달하는 특성상 인적 교류의 안정성과 지속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점 등을 고려할 수밖에 없다.

한미의회, 교류 폭과 깊이 확대해야

결론적으로 70주년을 맞은 한미 동맹의 업그레이드 차원에서 우리 국회와 미국 의회는 교류 폭과 깊이를 확대해야 한다. 첫째, 한미의원연맹을 사단법인 차원에서 공식화함으로써 몇몇 의원들이 개인 차원에서 미국 의원들을 초청하거나 방문하는 방식에서 탈피해야 한다. 창립총회를 열고 정관을 제정한 후 임원을 선출해 사업계획안을 승인함으로써 한국과 미국 간 의회 협력을 초당파적이고 공식적인 차원에서 강화해야 한다. 둘째, 외교 정책의 경우 의원 보좌진의 전문성을 토대로 한 교류 및 협력이 유용하므로 보좌진 중심의 인적 네트워크를 구성할 필요가 있다. 특히 유럽 의회 및 호주 의회가 이미 시행하고 있는 방식대로 한미 양국 의회가 의회 연락 사무소를 상호 설치함으로써 양국 의회 보좌관들의 정보 교환 및 현안 논의를 제도화하는 방식을 논의해 볼 만하다. 셋째, 양국 모두 상임위원회 중심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만큼 상임위원회 차원에서의 협력을 시범적으로 운영해 보는 것이 바람직하다. 예를 들어 과학 기술 분야가 점점 중요성을 더하고 있는 반면 비교적 정치적 색채가 덜한 위원회이므로 양국 의회의 과학 기술 관련 상임위원회부터 시작해 보면 어떨까 싶다. 위원장의 상호 방문 및 위원회 소속 전문 위원들의 정기적 회동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실제로 “의회는 그것(it)이 아니라 그들(they)”이라는 주장이 있다. 우리 국회가 앞으로 펼칠 미래 비전 중심의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의원 외교는 결국 우리 의원들 한 명 한 명에게 달려 있음을 인식해야 할 때다. 🍷

뉴욕주 ‘강아지공장 금지법’ 입법과정과 시사점



정상훈
국회 뉴욕 주재관

미국은 반려동물의 천국이다. 전체 가구의 약 60%가 반려동물을 키우는 것으로 추정되는데, 그 중 반려견은 6천900만 마리, 고양이는 4천500만 마리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반려동물, 특히 반려견의 막대한 수요는 상업적 목적을 위해 개를 대규모 교배, 사육하는 번식장, 이른바 강아지공장(Puppy Mill)을 통해서 충족된다. 통계에 따르면, 미국 내 강아지공장은 약 1만 개 이상으로, 생산되는 강아지의 수는 연간 200만 마리 이상으로 추산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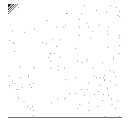
강아지공장과 같은 상업적 번식장은 동물보호단체 등으로부터 동물권 및 동물복지를 저해하는 시설이라는 비판을 받아 왔다. 우리나라와 같이 미국 역시 강아지공장 내의 동물 학대, 비위생적인 사육여건 등이 수차례 언론에 보도되면서 동물복지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떠올랐다.

특히, 최근 코로나19 팬데믹을 거치면서 반려동물 산업규모가 급격히 증가¹⁾했는데, 비위생적으로 사육되어 펫 스토어에 공급된 반려동물의 건강 문제, 이로 인한 소비자들의 의료비용 부담, 팬데믹 종식 이후 유기 동물의 증가 등이 사회 문제로 부각되기 시작했다.

‘강아지공장 금지법’의 주요내용

이러한 가운데 2022년 12월 15일, 뉴욕 주지사가 이른바 ‘강아지공장 금지법’에 서명했다. 뉴욕주 의회 및 정부는 동법이 동물 복지를 증진하고 동물 보호소 및 구조 단체로부터의 입양을 장려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

1) 미국의 반려동물 산업 규모는 2018년 910억 달러에서 2021년 1,236억 달러로 35.8% 증가했다.



음을 밝히고 있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강아지공장과 같은 대규모 상업 번식장에서 공급된 개, 고양이, 토끼를 펫 스토어에서 판매하는 것을 금지한다. 둘째, 펫 스토어가 동물보호소나 구조기관과 협력해 입양을 주선할 수 있도록 상점 내 공간을 입양홍보를 위한 장소로 임대할 수 있도록 했다. 셋째, 소규모로 동물을 번식시켜 파는 합법적 브리더(breeder)들과 동물 구조기관들을 규제하지 않음으로써 브리더 등으로부터는 반려동물을 구입할 수 있도록 했다. 넷째, 법을 위반한 펫 스토어는 벌금, 영업 정지 또는 영업 허가 취소를 포함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했으며, 법 시행은 2024년으로 한다.

강아지공장 규제의 배경과 논의 경과

뉴욕주의 강아지공장 규제와 관련된 논의는 10년 전부터 시작됐다. 동물보호단체 등으로부터 강아지공장 근절 등 동물학대 방지에 대한 요구가 지속되자, 2014년 1월 뉴욕주는 뉴욕시 등 지방자치단체가 독자적으로 반려견 판매 및 영업행위를 제한하는 조례를 제정할 수 있도록 하는, 이른바 ‘강아지공장법’을 시행했다.

새로운 법에 따라 반려견 영업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통제 권한이 강화되자, 일부 단체는 펫 스토어로 하여금 강아지공장에서 생산된 반려견이 아닌 브리더 등으로부터 제대로 길러진 반려견을 판매하도록 의무화했다. 또한 반려동물의 건강과 안전상태에 대한 감독을 실시했으며, 무면허 개 사육업자, 반려견 온라인 판매업자

에 대한 단속도 강화됐다.

하지만, 규제 지역 내의 펫 스토어들이 타 지역으로부터 반려견을 공급받으면서 당초 법안의 취지가 점차 퇴색되기 시작했다. 중서부(Midwest) 지역의 타 주에서 길러진 애완동물이 뉴욕주 펫 스토어로 판매되기 시작되었는데, 특히 미주리에서 반입된 반려견은 뉴욕주에서 판매되는 반려견의 43%에 달했다. 또한, 단속을 피하기 위해 비영리동물 보호소로 위장한 강아지공장이 생기고, 뉴욕의 반려견 도매업자들이 미국 전역의 펫 스토어에 판매할 수 있는 영업허가를 받음으로써 지방정부의 규제를 회피하는 등 정책의 허점이 드러나기 시작했다.

이에 따라 뉴욕주는 강아지공장에서 그치지 않고 강아지공장 “공급(pipeline)”에 규제의 초점을 맞추기 시작했다. 2018년 뉴욕주 의회는 강아지공장에서 공급된 반려견 등을 펫 스토어에서 판매하는 것을 금지하는 입법을 추진했으나, 논란 끝에 임기만료 폐기됐다. 그 후 2021년 7월 새로운 회기에서 동 법안이 다시 발의되어 2022년 6월 양원에서 모두 통과됐다.

이로써 뉴욕주는 펫 스토어에서 상업적 번식장으로 부터 가져온 개, 고양이 등을 판매하는 것을 금지하는 여섯 번째 주²⁾가 됐다.

강아지공장 금지 법안에 대한 반대 의견

의회 논의과정과 의결된 법안이 주지사에게 송부되어 서명에 이르기까지 동 법안에 대한 많은 반대의견이

2) 2017년 캘리포니아, 2021년 메릴랜드, 메인, 2022년 일리노이, 워싱턴 주에 이어 여섯 번째다.

제기됐다. 법안이 동물 학대 방지와 복지 확대라는 국민적 감정에 호소하고 있을 뿐, 강아지공장을 근절하고자 하는 정책의 목표는 달성하지 못한 채 합법적이고 윤리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펫 스토어, 번식장은 물론 소비자에게도 피해를 줄 것이라는 점이다.

비영리단체인 'Pet Advocacy Network'는 법 시행 이후 뉴욕주에서만 최소 80개 이상의 펫 스토어가 폐업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반려동물 소매업자들은 2017년 10월 미국에서 최초로 강아지공장을 금지한 캘리포니아주의 사례를 들어 정책의 실익이 없다고 주장한다. 캘리포니아의 경우, 법안 시행 이후 '구조된 강아지'라고 판매되는 반려견 중 많은 수가 실제로는 강아지 공장에서 사육된 것이라는 조사³⁾가 있으며, 이 강아지들은 '구조'된 강아지로 '세탁'되어 상당히 높은 가격에 판매되었다는 점⁴⁾을 강조한다.

입법 및 정책적 시사점

우리 국회와 정부 역시 반려가구 급증 및 동물보호·복지에 대한 국민의 인식변화 등에 따라 반려동물 산업을 육성하고 동물 복지를 확대하고자 하는 입법·정책적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

국회는 '동물보호법'을 전부 개정(2022.4)하여 2023

년 4월부터 동물생산업, 동물수입업, 동물판매업 등 반려동물 영업제도를 허가제로 전환하고, 영업요건 및 준수사항 위반에 대한 처벌을 강화할 계획이다. 정부 역시 2022년 12월, 동물 관련 정책을 기존의 보호 개념에서 복지 확대 개념으로 전환하고, 정책을 전담하는 국 단위 조직을 신설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동물복지강화방안'을 발표했다. 특히, 동물복지 요소를 강화하기 위해 2024년에는 기존의 '동물보호법'을 '동물복지법' 체계로 개편할 계획인데, 그 과정에서 상업적 번식장과 반려동물의 판매 등 영업행위에 대한 규제가 지금보다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뉴욕주의 반려동물 영업행위 규제와 내용과 논의 배경은 향후 우리 국회의 관련 법안 심의에 참고할 만한 사례가 될 것이다. 우리나라의 반려동물 관련 영업장은 총 2만 685개소, 종사자는 약 2만 4천863명에 달한다. 그 중 등록된 번식장은 2천19개, 판매업장은 4천 10개에 달하는 등 그 규모가 작지 않은 상황⁵⁾이다. 향후 '동물복지법' 입법 과정에서 동물보호단체, 반려동물 영업자, 전문가·학계 등의 다양한 의견 수렴을 바탕으로, 반려동물 산업 전반과 반려동물 생산업 또는 판매업자들에게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검토가 필요할 것이다. 🐾

3) 2018년 Companion Animal Protection Society(CAPS)의 조사에 따르면, Hobo K-9라는 비영리적 그룹이 생산된 강아지를 구조된 강아지라고 속인 뒤 판매하고 있었다고 한다. 즉, 사육업자들은 국세청에 비영리단체로 등록한 후 가짜 구조 작업을 통해 강아지공장에서 생산된 강아지들을 "세탁"함으로써 법의 허점을 노렸다.

4) The Southern California News Group 은 미주리나 캔사스에 농장을 두고 있는 PetConnect와 같은 기업이 비영리단체로 등록한 후 유기된 강아지들을 "구조"했다는 이유로 \$3,600 이상의 가격으로 판매하고 있는데, 유기된 강아지는 나이가 상대적으로 많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강아지들의 특징이 (1)어리고, (2)영양 실조나 전염성이 강한 병을 가지고 있으며, (3)제대로 된 예방접종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보도한 바 있다.

5) 농림수산물부, '2021년 반려동물 보호복지 실태 조사', 2022.8

신속한 의정 현장보도와 정책이슈 심층분석

N0.1 정치 뉴스

국회라이브1

월~금 낮 1시 / 생방송

앵커 송경철
(前 YTN 앵커실장)

아나운서
이예재



국회방송  NATV
www.natv.go.kr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 난방비 대책 등 논의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지원 특위, 관계부처 업무보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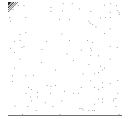
국회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지원특별위원회(위원장 박재호)는 2월 9일 전체회의를 열고 국방부, 해양수산부, 산업통상자원부, 외교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 부처와 부산광역시,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위원회로부터 업무보고를 청취했다.

이날 회의에서 특위 위원들은 4월 4~7일로 예정된 2030세계박람회 개최지 선정을 위한 국제박람회기구(BIE)의 현지실사를 앞두고 그간의 유치 진행경과 및 현지실사 준비상황을 보고받고 현지실사와 관련한 우려사항, 장애요인을 집중 점검했다.

위원들은 현지실사 심사에서 좋은 평가를 받기 위해서는 한국의 경제적 특성을 부각하면서 한국문화를 효과적으로 소개할 수 있는 현지실사단 맞춤형 일정을 준비하고, 서울-부산 일정에 따른 이동 동선을 세심하게 계획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현지실사단에게 국회, 정부 및 국민의 세계박람회 개최 의지와 열망을 전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위원들은 이를 위해 교통 인프라 구축의 핵심인 2029년 완공을 위한 가덕도 신공항의 조기 착공, 우리 국민에게 부산 세계박람회 유치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한 적극적인 홍보 전략, 유치위원회의 ‘도심항공교통체계(UAM) 사업협력 업무협약(MOU)’ 관련 연내 성과 창출을 위한 정부 차원의 후속조치, 특위의 원활한 유치지원 활동을 위한 예비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위원들은 또 현지실사 전 준비사항 전반을 점검하기 위한 국회 및 관계부처 등의 총괄회의 개최, 현지실사 중 대통령과 국회 및 지방자치단체의 합동 일정 마련을 제안하고 국회 의원친선협회와 같은 국가별 의회외교망을 활용한 초청외교 등 국회 차원의 지원을 약속했다. 박재호 위원장은 “세계박람회 유치는 대한민국이 한 단계 더 도약하기 위한 것”이라며 “필요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야 하는 만큼 관계부처 및 국회가 함께 모여 유치 방안을 적극 모색할 것”이라고 밝혔다.



**산자중기위, 난방비 대책 등
산업부 업무보고 청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위원장 윤관석)는 2월 9일 난방비 인상 대책 등에 대한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했다.

이날 위원들은 난방비 급등 문제와 관련해 에너지바우처 등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외에도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하는 추가적인 지원 대책 마련, 에너지 취약계층에 대한 가스요금 납부 유예나 분할납부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사실상 자본잠식 상태인 한국가스공사의 성과급 지급 등 방만경영 개선을 요구했다.

그 외에도 위원들은 △무역적자 급증 및 반도체 등 주요품목 수출 감소 추세에 대한 구조적 요인 분석 및 대응 방안 검토 △미국발 반도체법상 가드 레일 조항 및 대중 수출통제로 인한 대책 수립 등 정책 대안 마련을 촉구했다. 또한 송전선로 건설 지연으로 인한 전력공급 차질 발생 우려에 대한 대책 마련, 농사용 전기요금 인상 중단 및 한전의 위약금 부과기준 재검토, 남부지역 가뭄으로 인한 국가산단 입주기업 용수 확보 대책 마련 등을 주문했다.

윤관석 위원장은 “최대 현안인 난방비 급등과 관련, 정부가 보다 정밀한 진단과 함께 국민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실효적인 지원대책을 검토하여 국민에게 제시해 달라”고 당부했다.

**외교통일위, 튀르키예·시리아
지진 피해 희생자 추모 및 복구
지원 촉구 결의안, 한미동맹
70주년 기념 결의안 의결**

외교통일위원회(위원장 김태호)는 2월 14일 전체회의를 열고 ‘튀르키예·시리아 지진 피해 희생자 추모 및 복구 지원 촉구 결의안’(대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결의안은 같은 날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번 결의안에는 지난 2월 6일 튀르키예·시리아에서 발생한 강진으로 유명을 달리한 수만 명의 희생자들에 대한 애도 및 위로의 뜻과 우리 정부에 충분한 긴급구호와 피해복구 지원을 촉구하면서 국회 차원에서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하는 내용이 담겼다.

아울러 해외 재난 발생시 우리 교민과 유학생, 여행객들의 안전 확보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우리 정부에 요구하는 한편, 국제적 위상에 부합하는 충분하고도 효율적인 인도적 지원과 긴급구호 활동을 전개할 수 있도록 국회 차원에서 가능한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했다.

이에 앞서 김태호 위원장은 튀르키예·시리아 강진 발생 직후인 2월 7일

아키프 차아타이 클르츠 튀르키예 국회 외교위원장에게 위로 서한을 발송하고 대한민국 정부의 신속하고 적극적인 지원을 촉구했다.

한편, 외교통일위원회는 2월 17일 전체회의를 열고 ‘한미동맹 70주년 기념 양국 관계 지속발전 촉구 특별 결의안’(위원회안)을 의결했다. 이 결의안은 금년에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아 대한민국 국회가 양국 관계의 지속적인 발전을 촉구하는 내용이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지난해 8월 낸시 펠로시 당시 미국 하원의장의 방한을 계기로 양국 의회가 동맹 70주년 결의안을 각각 채택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이날 의결된 ‘한미동맹 70주년 기념 양국 관계 지속발전 촉구 특별 결의안’은 △양국의 공동번영을 위하여 동맹관계의 호혜적인 확대·발전이 필요함을 천명하고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의 성실한 이행을 위한 국회 차원의 법적·제도적 뒷받침을 다짐하며 △북한의 고도화되고 있는 핵·미사일 위협에 맞서 양국 정부에 효과적인 억제체계 구축과 동시에 북한과의 대화를 통해 항구적인 평화 정착을 위해 노력할 것을 촉구하고 △경제안보동맹이자 기술동맹으로서 핵심·신흥기술과 사이버 안보 협력, 경제·에너지 안보 협력을 심화해 나갈 것을 양국 정부에 촉구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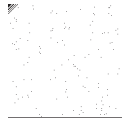
김태호 위원장은 “한미동맹은 피로 맺은 혈맹이자 세계적으로 가장 모범적인 동맹으로 평가받고 있다”며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아 국회가 여야 합의로 한미동맹의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으로의 격상을 환영하며 이를 적극 뒷받침하기로 한 것은 상당히 의미가 크다”라고 밝혔다.

**농해수위, 농어업인 전기요금 지원
대책 마련 촉구 결의안 등 의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소병훈)는 2월 21일 전체회의를 열고 ‘농어업인 전기요금 지원대책마련 촉구 결의안’을 의결하고 해양수산부·해양경찰청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했다.

농해수위는 결의안을 통해 최근 전기 요금 및 유가 상승 등으로 야기된 농어업인들의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도록 정부의 지원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농어업 생산비 절감 및 농어업인의 안정적인 소득 보장을 위해 중장기적 관점에서 근본적인 정책을 마련할 것을 정부에 강력히 요구했다.

이날 농해수위 위원들은 해양수산부 장관에게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 △수산물 안전 확보를 위한 대책 마련 △해양과학기술원



과 한국원자력연구원의 오염수 방류 시뮬레이션 데이터에 대한 신뢰성 확보 △일본의 투명한 자료 공개 요구 △국제해양법재판소 제소와 같은 국제법적 대응을 준비하는 등 해양수산부가 적극적인 역할을 해줄 것을 요구했다.

또한 위원들은 △어선 위치발신장치 부착 의무화 등을 통한 해난사고 대응 능력 강화 △어선원 안전을 위한 구명장비 개발 △어상자 보급사업 적극 추진 △낚시객 등으로 인한 성어기 쓰레기 문제 관련 대책 마련 등을 촉구했다.

한편, 해양경찰청장에 해경 인재개발원 설립 필요성 및 사전타당성 조사 용역 추진 방안 등의 적정성과 관련해 문제를 제기하고, 불법어업에 따른 벌과금 등을 어민에게 돌려줄 수 있는 방안과 전복사고가 난 통발어선 ‘청보호’의 사고원인 규명 및 재발방지 대책 등을 주문했다.

첨단전략산업 특위, 첫 회의 열고 위원장·간사 선임

반도체산업 등 첨단전략산업의 육성·보호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출범한 국회 첨단전략산업 특별위원회(위원장 유의동)가 2월 22일 첫 회의를 열었다. 특위는 이날 위원장과 간사(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위원, 국민의힘 김성원 위원)를 선임하는 등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특위는 유의동 위원장을 포함, 18인으로 구성되며, 활동기한은 2023년 11월 30일까지다.

특위 위원은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간사, 김두관·김수홍·김한정·서동용·신영대·임오경·조승래·홍기원·홍정민 위원, 국민의힘 유의동 위원장, 김성원 간사, 구자근·김영식·안철수·양금희·한무경 위원, 무소속 민형배 위원으로 구성됐다.

위원들은 첫 회의에서 첨단산업 분야에 대한 지원 필요성을 공유하고 국회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논의에 임하겠다는 각오를 다졌다. 또 위원들은 선택과 집중을 통한 특위 의제 선정, 세제 지원 등을 위한 입법권 확보 등 향후 특위의 효율적인 운영방향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다.

유의동 위원장은 “첨단산업의 기술력이 해당 산업의 경쟁력을 넘어 미래의 경제·안보 패권 향방을 결정하는 핵심 요소이며 첨단전략산업과 이를 지탱하는 첨단기술은 국가의 미래 경쟁력을 좌우한다”고 특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

NEWS

김진표 국회의장, 튀르키예 지진 참사 조문



김진표 국회의장은 2월 10일 서울 중구 주한 튀르키예대사관을 찾아 튀르키예 지진 희생자를 애도하고 조문했다. 앞서 김 의장은 2월 7일 무스타파 쉐넵 튀르키예 국회의장에게 위로전을 보내 희생자들의 명복을 빌고 부상자들의 조속한 쾌유를 기원했다.

김 의장은 대사관 조문록에 ‘형제의 나라, 튀르키예 국민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우리와 모든 세계인, 튀르키예 정부가 구호와 지원에 하나가 되어, 피해를 최소화하고 빠른 회복이 이뤄지길 간절히 기원한다’고 남겼다.

조문을 마친 김진표 국회의장은 살리 무랏 타메르 주한 튀르키예 대사에게 “어렸을 때 수원에서 유엔군으로 참전한 튀르키예 군인들이 한국전쟁 고아들을 위해 세웠던 양카라 고아원 원생들과 함께 초등학교를 다녔다”며 “수원 시민들은 지금도 튀르키예가 한국전쟁에 참전해 자유를 위해 싸웠고 전쟁 고아들을 위해 고아원까지 만들어준 데 대해 고마워하고 있다”고 감사를 전했다.

이어 김 의장은 “우리의 형제 국가 튀르키예의 재난에 우리 국민들도 슬픔에 잠겨 있다”며 “신속한 피해 복구로 튀르키예 국민들의 상처가 하루빨리 치유되고 평온한 일상을 되찾을 수 있도록 대한민국 국회와 정부도 노력하겠다”고 위로했다.

이에 타메르 대사는 “한국에 온 후 4개월 동안 한국과 튀르키예

가 형제 나라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다”며 “형제 같은 한국 국민들과 함께 위기를 이겨내고 싶다”고 답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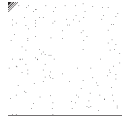
김진표 국회의장, 105의무경찰대 해단식 및 국회기동대 발대식 참석



김진표 국회의장은 2월 23일 국회경비대 1층 하모니홀에서 개최된 105의무경찰대 해단식 및 국회기동대 발대식에 참석했다. 국회경비대는 국회의장의 수행경호 및 공관경비, 국회울타리에서 회의장 건물 밖에 이르는 국회구역 경비, 출입자 및 출입차량 검문 등 업무를 수행한다.

1951년 3월 내무부 훈령 제11107호에 의해 설립된 국회경비대는 제2대국회 이후 국회에 상주하고 있다. 당초 국회경비대는 의무경찰로 구성되어 있었으나, 2023년 5월 의무경찰제도 폐지 및 국회의 특수성을 고려해 경찰관기동대 1개 중대가 상주하는 것으로 결정되면서 2월 20일 임무 전환이 이뤄졌다. 국회경비대장 아래 약 120명의 경찰관이 국회와 국회의장 공관을 경비한다.

김진표 의장은 “105의무경찰대의 노고 덕에 국회 가족들이 마음 놓고 지낼 수 있어 직접 뵈고 고맙다고 말씀드리고 싶었다”며 “경찰관으로 구성된 국가 경찰 조직 ‘국회기동대’ 여러분이 직접 국회 경비 임무를 맡아 주셔서 든든하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이어 “민의를 전당’ 국회에 목소리를 전하기 위해 국회를 방문하는 국



민들이 가장 먼저 만나는 ‘국회의 얼굴’이 바로 여러분”이라며 “국회의 주인인 우리 국민을 따뜻하게 맞이하고 국회가 열린 소통의 공간이 될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을 부탁드리며, 국회기동대원 여러분 모두가 국민의 집, 민의의 전당, 역사의 현장을 지키는 자부심으로 국회 지킴이 역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김 의장은 축사 이전에 국회기동대 건물 내 상황실을 둘러보며 CCTV 등 기기를 점검하고 근무자의 노고를 위로했으며, 축사 이후 ‘국회기동대’ 현판식에도 참석했다.

국회사무처-OBS, 프로그램 교류 등 협력 위한 MOU 체결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이광재)는 2월 9일 국회 본관 다목적영상회의실에서 OBS(대표이사 김학균)와 프로그램 교류 등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으로 양측은 국회가 제공하는 국회뉴스, 정책토론 프로그램의 편성을 비롯한 프로그램 교류 등에 관한 협력체계를 구축해 국가 정책에 대한 지역주민의 정보접근성을 제고할 계획이다. 이광재 국회사무총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국회의원의 입법활동 등 일하는 국회의 모습이 국민에게 보다 잘 전달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김학균 OBS 대표이사는 “국가기관인 국회와 협력하면 2천700만 수도권 시민들에게 생생한 의정 정보가 제공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행사에는 이광재 사무총장과 박장호 입법차장, 김상수 기획조정실장, 김명진 방송국장, 김학균 OBS 대표이사, 신성호 방송본부장, 이선희 편성제작국장, 김용주 보도국장 등이 참석했다.

국회박물관, 이제 온라인에서 체험하세요!

국회사무처는 온라인에서 국회박물관(2022년 4월 11일 개관)을 체험할 수 있도록 상설전시실을 소개하는 영상과 체험형 브이로그 영상(총 4편)을 제작, 국회 공식 유튜브 채널과 국회박물관 홈페이지에 게시했다.

상설전시실을 소개하는 영상에서는 각 전시실의 전시공간과 유물을 소개한다. 구체적으로 1전시실은 ‘임시의정원에서 시작된 민주주의’, 2전시실은 ‘민주주의를 위해 국회가 걸어온 길’, 3전시실은 ‘국민의 목소리를 통해 성숙한 대한민국’을 주제로 제작했다. 또한, 체험형 브이로그 영상은 국회박물관의 디지털 미디어 및 체험을 중심으로 제작됐다.

국회사무처는 이번 홍보 영상을 통해 온라인에서 전시 관람 기회를 확대하고, 국회박물관 관련 다양한 온라인 콘텐츠 제작을 통해 국민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할 계획이다.

※영상 시청 안내

- 국회 유튜브 채널(<https://www.youtube.com/@assemblykorea>): ‘슬기로운 문화생활’
- 국회 박물관 홈페이지(<https://museum.assembly.go.kr/>): ‘온라인 박물관’

국회의정연수원, ‘2023년도 지방의회 초선의원 기본과정 연수’ 실시

국회의정연수원은 지방의회 초선의원 89명을 대상으로 2월

NEWS

6일부터 '지방의회 초선의원 기본과정'을 온라인 과정으로 실시했다. '지방의회 초선의원 기본과정'은 2023년도 '지방의회 전문연수과정'의 첫 연수다.

국회의정연수원은 지방의회 역할 강화, 정책지원관 신설 등 지방의회연수 수요 증가에 대응해 올해 '지방의회 전문연수과정'을 대폭 확대(7개 과정 14회 → 14개 과정 33회)하고, 대상별·과목별 맞춤형 과정을 신설해 연수과정을 수요 중심으로 재편성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의원 선수(選數)의 차이를 고려해 초선·재선 이상 의원과정을 구분했고, 단계적인 연수가 가능하도록 이를 각각 기본·심화과정으로 나눴다. 또한 주요 교과목을 집중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과목별 맞춤형 지방의회 의원연수과정을 신설했다.

이번 '지방의회 초선의원 연수과정' 교육대상자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광역의회(4개) 25인, 기초의회(26개) 64인이고, 지역별로는 경남 24인, 인천 18인, 전북 12인, 서울 10인, 경기 9인, 강원·경북 4인, 대전 3인, 충북 2인, 부산·울산·전남 각 1인으로 분포되어 있다. 교과 구성은 '지방자치법의 이해', '조례안 입안 및 심사', '지방재정의 이해', '예산안 및 결산 심사', '지방의원윤리(이해충돌방지법)',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등 초선의원들이 실제 의정활동에 직접 활용할 수 있는 과목에 대한 기초이론 중심으로 편성했다.

올해 '지방의회 전문연수과정'의 의원 대상 연수는 초선의원 3회(기본과정 1회, 심화과정 2회), 재선이상의원 4회(기본과정 2회, 심화과정 2회), 맞춤형 지방의회 의원연수 3회, 찾아가는 지방의회 의원연수 4회 등 총 14회가 더 실시될 예정이다.

국회, '로봇의 날' 행사 개최

국회 '로봇의 날' 행사가 2월 21일 국회에서 열렸다. '일상 속 로봇, 변화할 미래'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행사에서는 매년 2월 26일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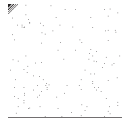
'로봇의 날'을 지정하는 내용을 담은 '지능형로봇법 개정안' 제출과 함께 일상 속에서 함께할 수 있는 로봇들이 국회에서 다채롭게 시연됐다.

이날 행사에는 지능형로봇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정일영 의원, 이광재 국회사무총장, 공동발의에 참여한 윤관석·김교홍 의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국회 분수대 앞에서 로봇이 시연됐다. 이어 참석자들은 국회 본관으로 이동해 감시·정찰 로봇과 사족보행로봇, 안내로봇과 만나 본관 내 카페로 이동해 방역 로봇과 서빙로봇을 통해 음료를 받기도 했다.

정일영 의원은 "발명의 날, 통계의 날, 소비자의 날 등 기념일들이 법률에 규정되어 있지만, 2008년 제정된 로봇법안은 그동안 기념일이 없었다"며 "이번 로봇의 날 국가기념일 제정을 통해 지능형 로봇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높이고, 로봇산업 업계와 종사자들의 의욕을 고취시켜 미래먹거리인 로봇산업의 경쟁력을 높여 나갈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광주시립발레단의 해설이 있는 발레 'VOICE OF SPRING' 공연 개최

대한민국국회가 2월 16일 국회를 찾은 국민에게 광주시립발레단의 공연을 선보였다. 국회사무처는 '국회문화극장'이라는 이름으로 주기적인 문화행사를 개최해 국민과의 소통 창구를 확대해



나가고 있다. 광주시립발레단을 초청해 성사된 이번 공연은 지난해 9월 행사를 다시 시작한 이후 세 번째 초청 공연이다. 광주시립발레단의 해설이 있는 발레 ‘Voice of Spring’ 공연은 400석이 모두 예약된 상태로 성황리에 개최됐다. 특히, 국회의 문화행사 개최를 통한 국민과의 교

류 확대라는 취지에 공감해 이번 공연에 민형배 의원, 이병훈 의원 등이 주요 참석자로 함께했다.

광주시립발레단의 해설이 있는 발레 ‘Voice of Spring’은 박경숙 예술감독의 해설을 포함해 약 50분간 진행됐으며, 주요 프로그램은 ‘해적’ 중 ‘오달리스크’ 3인무, ‘에스메랄다’ 중 ‘다이애나와 악테온’ 2인무 등이었다. 국회사무처는 매달 셋째 목요일 오후 7시에 공연, 영화 상영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국회문화극장’을 개최하고 있다.

국회, 세계 최초로 의회 의사중계 AI 실시간 자막서비스 제공

국회가 세계 최초로 의회 의사중계 AI실시간 자막서비스를 제공한다. 국회사무처는 AI 음성인식 기술을 이용해 상임위 회의 인터넷 의사중계 시에 실시간 자막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스템(이하 ‘AI 음성인식 생중계 자막시스템’)을 구축해, 2월 22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및 2월 24일 보건복지위원회의 전체회의에서 서비스를 제공했다. AI 음성인식 생중계 자막시스템은 장애인에 대한 원활한 정보제공을 위한 조치를 규정한 ‘국회법’ 제149조제3항(‘국회법’ 제149조(국회에 의한 방송) ③국회는 제1항의 방송 제도를 운용하거나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통해 중계방송을 하는 경우 장애인에 대한 원활한 정보 제공을 위해 국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수어·폐쇄자막·화면해설 등을 제공해야 한다. <2020.12.22 신설, 2021.6.23 시행>)에 따라 개발·구축된 것으로, 의회 회의에 대한 세계 최초의 AI 음성인식 생중계 자막서비스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국회는 장애인 관련 사안이 많은 2개 상임위원회(문체위·복지위) 회의에 대해 우선적으로 AI 음성인식 실시간 자막서비스를 제공하고, 서비스 대상 범위를 전체 상임위로 점차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국회 AI음성인식 엔진은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의 최신 중단형 AI음성인식 기술을 적용한 것으로, 발생 후 1~2초 이내 자막을 표출하는 성능을 갖추고 있다. 국회는 음성인식율의 향상과 자막 서비스 품질 관리를 위해 국회 회의록, 지역별 사투리 및 비원어민 언어모델 등을 활용해 엔진을 고도화하고, 최신 회의 학습데이터를 구축해 AI 음성인식 학습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국회가 구축한 음성인식 학습데이터는 향후 일반에 공개해, 지방의회 및 연구기관 등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국회도서관, 개관 7주년 기념행사 개최

국회도서관(관장 이명우)은 2월 20일 국회도서관 1층 아트월에 서 국회와 국민과 함께한 7년의 역사를 되새기고, 최상의 의정서비스를 제공하는 의회도서관, 디지털 전환을 선도하는 미래도서관으로서의 실천을 다짐하는 개관 기념식을 개최했다.

김영주 국회부의장과 국회의원내대표단 등 내외빈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기념식에서는 지난해 국회도서관의 서비스를 가장 많이 이용한 ‘국회도서관 이용 최우수 국회의원’ 8명에 대한 시상이었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영상 격려사에서 “개관 7년을 맞은 국회도서관은 인공지능시대를 맞아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디지털 도서관

NEWS



으로 도약하고 있으며, 지난해 개관한 국회부산도서관을 통해 지역균형발전에도 기여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국회도서관이 앞으로는 국가전략정보센터와 ‘국가전략정보포털’ 등을 통해 나라의 미래를 준비하는 일에도 큰 역할을 해주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영주 국회부의장은 격려사에서 “국회도서관은 국민들이 공간적·시간적 제약 없이 양질의 정보를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디지털 서비스의 지속적인 확대를 통해 디지털 강국에 어울리는 대국민 서비스 향상에 매진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명우 국회도서관장은 개회사를 통해 “국회도서관은 개관 70주년이었던 지난해 국회부산도서관을 개관하고, 국가전략정보센터를 설치하는 등 의미 있는 한해를 보냈다”고 돌아보고 “다음 70년을 새롭게 시작하는 올해의 세 가지 목표는 ‘데이터 기반의 선제적 의정·법률정보 서비스 제공’, ‘빅데이터와 인공지능을 활용한 융합콘텐츠 생산 및 지식공유 플랫폼 구축’, ‘국내외 6천 300개 이상의 학술정보협의회 기관들과의 협력체제 활성화’라고 강조했다.

국회도서관은 이날 오픈한 ‘국가전략정보포털(<https://nsp.nanet.go.kr>)’ 서비스와 AI의정분석서비스 ‘아르고스(<https://argos.nanet.go.kr>)’를 함께 시연했다. ‘국가전략정보포털’은 주요국의 국가전략보고서와 싱크탱크·국제기구 자료 등 국가전략에 관한 광범위한 콘텐츠를 원스톱으로 제공한다. ‘아르고스’는 인공지능을 이용해 뉴스 및 소셜데이터를 일평균 30만 건 이상 수

집·분석하여 국민적 관심사와 정책 이슈를 알기 쉽게 시각화해 제공한다.

※국회도서관 이용 최우수 국회의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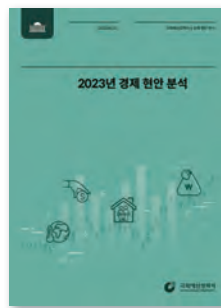
▷의원 방문 이용 부문: 조경태·김두관 의원

▷의회·법률정보하달 이용 부문: 윤재갑·최연숙 의원

▷단행본 대출 이용 부문: 윤영석·박재호 의원

▷전자도서관 이용 부문: 박주민·민형배 의원

국회예산정책처, ‘2023년 경제 현안 분석’ 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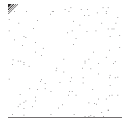


국회예산정책처(처장 조의섭)는 ‘2023년 경제 현안 분석’을 발간했다. 보고서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미·중 무역갈등, 에너지·원자재 가격 상승, 인플레이션에 대응하기 위한 금리인상, 투자·소비 위축 등 글로벌 경제 위기의 한 가운데 2023년을 맞이

하는 우리 경제의 주요 현안을 선제적으로 분석함으로써 우리 경제가 당면한 경제 현안에 대해 점검하는 목적을 지니고 있다.

보고서는 I장 경기현황 및 성장경로 점검, II장(물가) 쉽게 잡히지 않는 인플레이션, III장(금융) 글로벌 금리상승의 방향성 및 위험 요인, IV장(재정) 팬데믹 이후 재정운영 방향, V장(투자) 위축 위험 속에서 활력 유지하기, VI장(수출) 신보호무역주의 속에서 공급망 다변화 모색, VII장(인구) 혼인하지 않는 사회와 저출산, VIII장(기후·에너지 위기) 새로운 국제질서에 대응하기 등 8가지의 주제로 구성되어 있다.

최근 국내외 주요 전망기관들이 세계 경제와 우리나라 경제의 성장률을 일제히 하향 조정하는 등 경기둔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인플레이션·글로벌 금리상승·경기둔화 시 재정운영 방향 등 다



양한 리스크 분석과 투자·수출 등의 활성화 방안, 기후·에너지 위기·혼인 등 새로운 성장 전략에 대해 살펴봄으로써 우리 경제가 당면한 과제와 시사점을 도출해 경제위기에 대응하는 국회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충실히 지원하고자 발간됐다.

국회입법조사처, ‘노인 통합 돌봄 정책 세미나’ 개최



국회입법조사처(처장직무대리 이신우)는 2월 15일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WHO 고령화 정책을 통해 본 노인 통합 돌봄 정책 세미나’를 강기윤·김성원·최영희 의원(국민의힘)과 공동으로 주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초고령 사회로의 진입을 눈앞에 두고 있는 상황에서, 전 세계적 차원으로 대응해 나가야 할 고령화 현상에 대한 WHO의 정책을 살펴보고, 국내 노인 돌봄정책에 활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이신우 국회입법조사처장 직무대리는 개회사를 통해, “지난 3년간 코로나19로 인해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의료-요양-돌봄이 연계되어야 함을 깨닫게 되었고, 국회가 법과 제도를 통해 어떻게 이 문제에 신속히 대응해 나가야 할지를 고민하고 있다”면서 지역사회가 돌봄이 필요한 노인에게 통합적으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복지시스템을 갖춰나가야 할 때가 되었음을 강조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3건의 발제가 이루어졌다. 김희선 한국보건 의료연구원 부연구위원은 ‘WHO의 고령화정책과 노인통합돌봄 (ICOPE: Integrated Care for Older PEople) 가이드라인의 국내 적용방안’에 대해, 유원섭 국립중앙의료원 교수는 ‘지역사회 사람 중심 노인통합관리 일차의료 적용 모델 및 제언’에 대해, 그리고 김다솜 서울시 통합건강증진사업단 팀장은 ‘지역단위 노인 통합 관리 사업 적용 사례’에 대해 발표했다.

이날 세미나의 종합토론은 원장원 경희대 가정의학과 교수를 좌장으로 원시연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서동민 백석대 사회 복지학부 교수, 김진희 조선대 간호학과 교수, 유애정 국민건강 보험공단 통합돌봄연구센터장, 방석배 보건복지부 통합돌봄추진단장이 참여해 향후 지역사회 통합돌봄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한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국회미래연구원, ‘국가현안 대토론회’ 총 8회 총괄 기획

국회미래연구원(원장 김현곤)은 2023년 7월까지 대한민국 국회가 주최하는 ‘국가현안 대토론회’를 총괄 기획한다. 국가현안 대토론회에서 다룰 주제는 ‘연금개혁’, ‘기후위기’, ‘인구위기’, ‘교육개혁’, ‘노동개혁’, ‘첨단산업’, ‘세계질서’, ‘정치개혁’ 등 국가 차원에서 중요한 8가지 현안 주제다.

국회 상임위원회는 물론 특별위원회에서 논의되는 사안도 대토론회의 각 회차별 토론 내용에 포함될 예정이다. 대토론회 기획 과정에는 올해부터 추진 중인 국회 소속기관 간 공동연구에 참여하는 연구진도 참여한다.

제1회 대토론회는 3월 21일에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연금제도 어떻게 개혁할 것인가? 전망과 대안을 주제로 개최될 예정이다. 🏠

예술인의 권리, 법률로 보장합니다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시행 2022. 9. 25.]

블랙리스트 사태와 문화예술계 미투 운동 등으로 예술계의 불합리한 처우와 낡은 관습이 수면 위로 드러났고 예술인의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게 됐다. 특히 자유계약자가 대부분인 예술인이 그동안 ‘근로기준법’ 등 기존 법률에 의해 보호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어, 법적 보호의 사각지대에 있는 예술인을 보호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이에 국회는 2021년 8월 31일 본회의에서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제정안’(예술인 권리보장법)을 의결했다. 동 법은 지난해 9월 25일부터 시행됐다.

법 제정 이유에 대해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미공 입법조사관은 “우리나라의 예술관련 법령은 그간 장르 중심의 지원 근거와 체계를 마련하는 내용에 집중되어 왔고, 상대적으로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 등을 보장하기 위한 노력이 부족한 면이 있었다. 그런 상황에서 이른바 ‘블랙리스트 사태’, ‘예술계 미투 운동’ 등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를 침해하는 사태가 발생하면서 불공정한 예술 환경과 사회보장의 사각지대에 놓인 예술인의 삶을 구제할 수 있는 법령을 제정해야 한다는 예술계의 요구가 높았다. 따라서 ‘예술표현의 자유’와 ‘예술인의 직업적 권리 보호’를 법률로 규율해 예술인에 대한 권리침해 행

위를 방지하고, 성평등한 예술환경을 조성하는 한편, 폐쇄적 예술계 환경과 권리구제 사각지대에 놓인 예술인에게 실효적인 피해구제 방안을 마련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예술인’의 정의에 예비예술인 포함시켜

예술인 권리보장법은 ‘예술인’의 정의에 예술활동을 업으로 하는 사람뿐 아니라 예술활동을 업으로 하기 위해 교육·훈련을 받는 예비예술인도 포함시켰다. 또, 법은 “예술표현의 자유는 보호되어야 하고, 예술인은 노동과 복지에 있어 다른 직업과 동등한 지위를 보장받으며 성평등한 예술 환경에서 활동할 수 있는 권리를 갖도록 한다”고 규정했다. 2021년 문제부의 예술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전업예술인 가운데 자유계약자 비율은 78.2%, 겸업예술인 가운데 자유계약자 비율은 72.2%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술인 권리보장법은 이와 함께 “예술인은 예술 활동에 있어 성별에 따른 차별 등이 없이 인권을 동등하게 보장받고 성희롱·성폭력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고 명시했다. 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예술인에 대한 성희롱·성폭력을 방지하기 위해 대책을 수립하고



지난 1월 서울 종로구 대한민국역사박물관에서 열린 제1차 회의에 참석한 '예술인 권리보장 및 성희롱·성폭력 피해구제 위원회' 위원들.

피해구제 지원기관을 지정하는 한편, 2년마다 성희롱·성폭력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도록 했다.

특히 이 법은 예술인의 권리구제를 위해 문화체육관광부 소속으로 예술인 권리보장 및 성희롱·성폭력 피해구제위원회를 두도록 했다. 예술인권리침해 및 성희롱·성폭력행위가 발생한 경우에는 문체부 장관에게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문체부는 신고된 내용을 조사해 권리침해 및 성희롱·성폭력 행위 등이 확인된 경우 관련자에 대한 징계·시정권고·시정명령·재정지원의 중단 및 피해자에 대한 구제조치를 시행할 수 있도록 했다.

문체부에 따르면, 성희롱이나 성폭력을 비롯해 기타 권리가 침해된 예술인은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이 운영하는 '예술인신문고'에 신고를 하거나 상담할 수 있다. 문체부 김수현 예술인지원팀장은 “법 시행 이후 현재까지 예술인신문고에는 상담 289건, 신고 50건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신고가 접수되면 문체부가 사실관계를 조사해 '예술인 권리보장 및 성희롱·성폭력 피해 구제 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하게 되며 위원회 심의를 통해 가해자에 대한 제재 조치 등을 의결한다. 위원회 의결 결과에 따라 문체

부는 관계기관에 구제조치 및 시정권고, 시정명령 등을 하게 된다. 김 팀장은 “예술사업자가 시정 명령을 지정된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을 경우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중단, 배제할 수 있다”고 밝혔다.

예술인 권리보장 및 성희롱·성폭력피해구제위원회 출범

예술인 권리보장법 시행에 따라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보장 정책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예술인신문고 신고 사건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의결하는 기구인 '예술인 권리보장 및 성희롱·성폭력 피해구제위원회'가 지난 1월 12명의 위원 위촉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다. 초대 위원회는 연극, 연예, 음악 등 예술인과 함께 변호사, 노무사 등 법률전문가를 비롯해 성희롱·성폭력 피해자 상담 등 실무경험이 있는 전문가로 구성됐다.

한편, 김수현 팀장은 “이번 법 시행으로 새롭게 도입된 예술분야의 성희롱·성폭력 실태조사와 관련, 준비 기간을 거쳐 2024년 첫 실태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체부는 법 시행과정에서 나오는 예술인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향후 부족한 점을 보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

글 박민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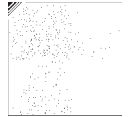
미성년자 상속인의 자기결정권 및 재산권을 보호합니다

‘민법’ 일부개정법률

2022-11-23 법제사법위원회 의결

2022-11-24 본회의 의결





※ 법률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국회 홈페이지 www.assembly.go.kr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구성 이진택

챗봇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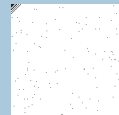
인공지능과 대화하는 시대, 읽기와 쓰기에 대한 고찰



초기의 글자라고 할 수 있는 그림문자나 상형문자로 기록되던 시절에는 글자가 사물의 모양을 그대로 모방하고 있어서 그림만 봐도 알추 그 내용을 알 수 있었다. 하지만 인간은 자신의 경험을 기록하고 싶어하며 인간의 사고는 매우 추상적이고 복잡해서 그림을 가지고 인간의 사고의 다양성을 모두 담는 데는 한계가 있다. 그러다가 기원전 750년경 그리스인들이 문자를 개발하고 그들이 남긴 기록은 혁명적으로 자세함이 더해졌다. 세월을 많이 뛰어넘어 금속활자가 발명된 후로는 정보혁명이라 불릴 정도로 인쇄물이 널리 퍼지고 독자의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게 되었다.

그림을 해독해서 읽는 능력과 글자를 익는 능력은 담당하는 뇌의 영역이 다르다고 한다. 발달심리학자인 매리언 울프의 ‘책읽는 뇌’에 따르면 중국인과 미국인이 독서를 할 때 활성화되는 뇌부위가 다르다고 한다. 표의문자를 사용하고 있는 중국인들이 독서를 할 때는 기억력에 관련된 해마를 활성화하는 반면, 영어처럼 단어의 소리와 의미를 분석해야 할 경우에는 전두엽과 측두엽이 함께 사용된다고 한다. 그리고 그림에서 글자로 기록이 변화되면서 사람의 뇌도 변화에 적응한다는 사실을 알아내게 되었다. 뇌의 가소성(plasticity)이라는 개념이다. 뇌는 상당히 빠르게 주변의 변화에 적응해서 개체의 생존율을 높이려는 경향을 가진다. 기록의 방식이 변함에 따라 인간의 뇌도 점차 변한다는 사실은 지금도 진행중이다.

글을 쓰는 도구의 변화도 글쓰기의 변화와 관련이 있다. 프리드리히 니체는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방황하던 시기에 덴마크제 몰링 한센 타자기를 구입했다. 타자기 사용법을 익힌 후에는 눈을 감고도 글을 쓸 수 있게 되었다고 하고, 이 후의 글들은 이전의 글과 비교해서 간결하고 힘이 있는 문장으로 변화했다는 것이다. 니체의 시절보다 백 년 정도가 지나서 타자기보다 훨씬 편리한 컴퓨터가 등장했다. 컴퓨터의 워드 프로세서는 손가락의 피



로도를 줄였을 뿐만 아니라 무한정 수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아무런 부담 없이 생각을 있는 그대로 쓸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스마트폰의 등장은 또다른 진화를 가져왔다. 손가락을 전부 사용하는 컴퓨터 자판 대신 극단적인 엄지족이 생겨날 정도로 스마트폰의 축소된 자판속에서 축약된 언어와 각종 이모티콘을 사용하여 소통하는 시대가 도래했다. 동시에 글을 적게 쓰기는 하지만 접하는 정보는 과거에 비할 수 없을 정도로 폭증해 있는 상태다. 그러면서 글들을 읽는 방법 또한 변화된 느낌이다. 기성세대들이 열심히 연습해서 익혔던 속독이나 속독 같은 방법이 아니라 읽고 싶은 부분만 띄엄띄엄 읽어가는 음악적 부호로 표현하자면 ‘스타카토’ 방식의 읽기가 성행하고 있다. 대부분의 신세대들은 그러한 방식에 익숙해졌고 불편함도 없고 더구나 만족도도 높다고 한다.

인공지능이 보편화된 현대에는 인공지능인 챗봇과 대화하고, 인공지능이 쓴 글을 읽는 일들이 수시로 벌어지고 있다. 2022년초 Open AI가 개발한 대화전문 인공지능 챗봇인 챗GPT는 대학에서 사용해도 무방할 정도의 정교하고 자연스러운 언어를 구사한다. 아울러 막말을 쏟아내거나 인류의 도덕적 관념에 위배되는 답을 하는 등의 문제도 현저하게 줄어들었다. 테슬라의 경영자인 일론 머스크가 이러한 단계를 뛰어넘는 인공지능을 구상하면서 과감히 실행했던 일이 트위터를 사들이는 일이었다. 인간의 언어가 발달했던 이유 중에 정반합의 논리가 기여를 한 부분도 있다. 그런 의미로 다양한 의견이 난무하는 대화의 장이 바로 트위터였던 것이다. 트위터의 대화를 인공지능이 학습하면 사람과 비슷한 수준의 대화능력을 가질 수 있을 것이라는 아이디어에서 출발했다고 한다. 투자금을 조달하는 과정에서 투자자들에게 물의를 일으키긴 했지만 세상을 들쭉이게 만드는 챗GPT의 출현은 사회적 이슈들을 단번에 잠재우는 일대의 사건이 되었다. 바야흐로 전세계의 사람이 유료로 전환된 챗GPT를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가입해서 사용하는 현상을 보면서, ‘비즈니스는 이렇게 하는 것이다’라는 일론 머스크의 속마음이 들리는 듯하다. 사람이 만들어낸 도구가 사람의 능력을 초과하는 시기에 뇌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어떠한 가소성을 발휘하고 있을 수 있다. 그것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국가의 교육 제도도 그에 따라 변화를 해야 할 것이다. 대한민국도 인공지능의 특정한 부분에 있어서 세상을 바꾸는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한다. 🍌

글 김동철 공학박사, 유비케어 사외이사



육사·특전사 거친 보좌관의 국회 이야기



김경한 보좌관
정경희 의원실

Q. 국회에서 일하시게 된 계기가 궁금합니다.

저는 육군사관학교를 졸업하고 제9공수특전여단에서 특전사 팀장으로 군 복무했습니다. 임관 5년차에 전역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 고민 끝에 대위로 전역했습니다. 전역 직후 우연히 국방위원회 소속 의원실의 채용 공고를 보게 되었고, 국회에서 제가 할 일이 있을 것이라는 생각으로 의원실에 지원했습니다. 제17대 국회에서 인턴비서로 보좌직원 생활을 시작했는데, 어느덧 제21대 국회까지 이어졌습니다. 그동안 7급과 5급을 거쳐 4급 보좌관이 되었고, 국방위 뿐 아니라 교육위,

정무위, 안행위, 예결위 등 여러 상임위를 경험했습니다.

Q. 제17대국회부터 20여년 간 국회도 많이 달라졌을 것 같습니다. 보좌관님께서 느끼시기에 어떤 점이 많이 달라졌을까요.

2014년 국회 선진화법 도입이 가장 큰 변화가 아닐까 합니다. 연말마다 본관 로텐더홀과 본회의장에서는 연례행사를 치르듯 보좌직원들과 국회의원들이 서로 뒤엉켰고 경위분들도 고생이 많았는데, 지금은 그런 모습이 사라졌습니다. 로텐더홀 바닥에 앉아 김밥을 먹으며 성탄전야를 보내고 신년을 맞이하던 기억도 점점 흐려지고 있습니다. 아이러니한 것은, 예전에는 여야 보좌직원들이 정당과 관계없이 개인적으로 친분을 쌓고 소통하는 기회가 많았는데, 시간이 갈수록 보좌직원들 간의 거리감이 커졌습니다. 국리민복(國利民福)이라는 공통의 목표를 추구하면서도, 권력획득을 위한 정략적 이해관계에 쉽게 매몰되는 것 같습니다. 정치적 양극화가 심해졌다고 볼 수 있겠지요.

달라진 점을 하나 더 말씀드리면, 국민이 직접 나서는 입법 투쟁이 현저히 많아졌다는 것입니다. 보편성을 추구해야 할 입법행위가 각종 특례와 특별법으로 얼룩지고 단서와 예외조항이 실질적인 효력을 가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모든 문제를 법으로 해결하려는 경향이 강해지고, 국회의원을 선출해 놓고도 저마다의 이익을 위해 직접 입법투쟁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국회 출입문 앞에 있는 수많은 텐트와 깃발, 현수막, 피켓



들을 볼 때마다 국회 보좌진의 한사람으로서 안타까움을 느낍니다.

Q. 국회의원 보좌관의 힘든 점은 무엇이고 보람 있는 점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힘든 점이라면 소수의 보좌직원이 비서실, 전략기획실, 정책실, 홍보실, 민원실, 의전실 등의 업무를 동시에 소화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선택과 집중을 해야 하고 의원님을 중심으로 한 구성원 간 호흡도 중요합니다. 그러다보니 업무적인 부담보다는 의사결정의 책임과 구성원 간의 소통에서 문제가 발생하곤 합니다. 보좌관으로서의 보람은 제 아이들에게 조금이라도 더 나은 나라를 물려주는데 기여한다는 것입니다. 자유민주주의 체제로의 건국, 6·25전쟁에서 나라를 지켜낸 호국, 피땀 흘려 이뤘던 부국의 역사가 있었기에 오늘 우리가 누리는 자유롭고 풍요로운 대한민국이 존재합니다. 그렇게 받은 유산을 더 아름답게 가꾸어 물려줄 수 있다는데 큰 보람을 느낍니다.

Q. 보좌관 생활 중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가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작년 9월 정경희 의원님 주최로 이승만 전 대통령의 활동을 다룬 다큐멘터리 시사회를 열었습니다. 제목은 ‘이승만의 하와이 30년’이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분들이 참석할지 가늠이 되지 않는 상황에서 500석이나 되는 의원회관 대회의실을 덜컥 예약했습니다. 의원님과 관계자분들은 객석을 다 채울 수 있을지 전전긍긍했습니다.

다행히 많은 분들이 SNS를 통해 홍보해 주셨고, 행사 당일에는 놀라울 정도로 많은 분들이 오셨습니다. 대회의실 객석을 다 채우고, 심지어 계단에 앉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통상 대회의실은 지역구 주민들을 모시거나

관련 단체의 회원들로 객석을 채우곤 합니다. 그 경우 사전에 방문자 명단을 작성해 개별 출입증 발급절차 없이 단체방문으로 안내를 합니다. 그러나 그날 시사회는 지역주민이나 단체를 따로 섭외한 것이 아니어서 모든 분들이 개별로 방문하셨습니다. 그러다보니 시사회 행사 때문에 의원회관 출입증이 다 떨어졌다는 소식도 들렸습니다. 시사회는 많은 분들의 관심과 노력 덕에 성황리에 마쳤습니다. 그날 대회의실에는 초등학생부터 80대 어르신까지, 또 아이를 임신한 젊은 부부도 참석해 이승만 전 대통령의 활동과 업적을 기렸습니다. 의원실 행사에 개별방문객으로 500석 대회의실을 가득 채우는 것은 상당히 드문 사례여서 오래도록 기억될 것 같습니다.

Q. 앞으로 국회생활의 포부에 대해 말씀해주세요.

앞으로 국회 생활을 계속한다면 입법(立法)에만 치중하기보다 해법(解法)을 논의하는 기회를 만들고 싶습니다. 저는 법이란 개인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마다의 자유를 극대화하기 위한 최소한의 약속이 법인 셈이지요. 그러나 때때로 ‘법률만능주의’에 빠져 우리의 삶을 과도하게 구속하고, 자유와 인권, 사유재산과 같은 보편적인 가치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법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법은 말 그대로 ‘최소한의 규범’으로 남겨두고 개인이 시장경제질서 속에서 자유롭게 활발하게 땀 수 있는 환경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개별 구성원이 해결하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한해 법이 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입법기관의 분위기를 바꾸는데 기여하고 싶습니다. 🍵

글 박민선 사진 유윤기

돌봄이 돌보는 세계

취약함을 가능성으로, 공존을 향한 새로운 질서

“돌봄을 받기만 한 사람이 어떻게 자신과 타인을 돌보는 이로 자랄 수 있겠는가? 돌봄을 하찮고 거추장스러운 것으로 여기는 곳에서 교육을 받은 이가 어떻게 돌봄의 가치를 소중히 여길 수 있겠는가?” - 228쪽

출생부터 사망에 이르기까지 누군가의 돌봄 없이 인간은 생존할 수 없다. 돌봄에서 시작해 돌봄으로 마무리를 맺는다. 따라서 인간의 역사는 돌봄의 역사이다. 예전에는 돌봄이 개인의 영역에 국한됐으나 산업화 이후 핵가족의 보편화, 노령인구의 급증, 만성 퇴행성질환의 증가,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증가 등으로 인해 돌봄의 외주화와 시장화는 보편적 현상이며, 돌봄은 이제 사회적·국가적·국제적 차원의 문제로 확대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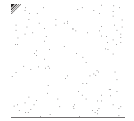
돌봄은 두 가지 측면을 가지고 있다. 돌봄을 제공하는 사람과 돌봄을 필요로 하는 대상자다. 지금까지는 돌봄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누구이고, 어떻게 돌봄을 제공할 것인가에 모든 초점이 맞추어져 왔다. 그러나 이제는 돌봄을 제공하는 돌봄 노동에 관한 관심과 배려가 필요한 시점이다. 돌봄 노동에 대한 정당한 가치 인정 없이는 양질의 서비스를 기대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돌봄 노동에 종사하고 있는 대부분(90% 이상)이 여성이기 때문이다.

돌봄을 통해 우리가 모두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돌봄 노동에 대한 충분한 가치가 부여돼야 한다는 전제하에 본서는 11명의 저자가 각기 다른 11개의 주제를 가지고 다양한 시각에서 돌봄의 문제를 분석하고 있다.

저자 중 1명은 돌봄의 실제 대상자로, 장애인 등록 과정에서 무임승차의



저 자 김창엽 외 10인
출판사 동아시아
출판일 2022. 8.



느낌과 인간성에 대한 근본적인 모욕을 느낀 경험을 진솔하게 표현하고 있다. 또한 인간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타인의 돌봄을 받지 않고서는 생존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인식하고 영혼과 삶과 괴리된 폭력적인 시스템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돌봄 대상자가 처한 상황과 곤란함을 삶 전체 속에서 파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저자는 ‘돌봄을 공기처럼 들이마실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를 소망하면서 글을 맺고 있다.

‘국가가 민간을 통해, 민간은 집단 수용이라는 방식을 통해 가장 적은 돈으로 가능한 한 많은 몸들을 관리하고자 하는’ 경제적 효율성 추구 과정에서 돌봄 제공자(기관 또는 시설)의 이해만이 강조된 ‘돌봄의 권력화’가 초래됐다.

전형적인 ‘남성 생계 부양자 모델’을 극복하고 돌봄과 돌봄 노동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돌봄에 대한 의식의 전환을 넘어 혁명적 변화가 필요하다는 기초를 본서는 유지하고 있다. 즉 ‘돌봄의 성별성을 해체하는 일상의 혁명’, ‘돌봄의 민주성을 해체하는 혁명’이 시대적으로 요구되고 있다는 것이다. 돌봄 혁명에는 돌봄 노동에 대한 재평가가 전제돼야 한다. ‘가사 노동과 돌봄 노동을 비가시적이고 비생산적이라고 평가 절하하는’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는 돌봄 노동의 진정한 가치가 인정받기 쉽지 않기 때문이다.

본서에서는 돌봄 혁명은 국경을 넘어 전 지구적 사고의 전환을 요구하고 있다. 육아, 가사 노동, 병간호 등과 같은 돌봄이 이주 여성에 의해 ‘돌봄 받을 자격을 갖춘 존재’에게 제공되고 있는 성차별주의와 인종주의를

극복해야 한다. 돌봄 이주자는 결코 ‘돌봄 받을 자격이 없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이다. 현재 우리나라 간병인의 80% 정도가 재한 중국 동포(조선족) 여성인 현실을 고려할 때 저자의 주장은 매우 설득력을 갖고 있다.

여성의 돌봄 노동이 ‘사회 재생산 과정에서 필수적이었으며 자본주의 체제를 작동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가치가 평가 절하되고 있는 현실을 거시적 차원의 문제로 확대하고 있는 저자는 ‘최일선 공동체’의 개념을 도입하고 있다. ‘불이익과 차별에 노출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극복하고 대처할 자원을 제대로 소유하지 못한 집단’인 ‘최일선 공동체’의 문제로 돌봄 노동을 재평가할 필요가 있다.

모든 인간은 잠재적 돌봄 대상자로 돌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노동이 전제되기 때문에 돌봄은 반드시 타인의 희생이 수반된다. 돌봄을 통해 우리가 모두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돌봄 노동에 대한 충분한 가치가 인정되어 돌봄 노동자가 사회적으로 존경받고 정당한 대가를 받아야 한다. 돌봄 대상자나 돌봄을 제공하는 사람은 현실적으로 사회적 취약계층이다. 사회적인 취약계층이 사회적인 취약계층을 돌보고 있다. 따라서 돌봄을 돌보는 사회가 될 때 공동체적 삶이 진정으로 영위될 수 있을 것이다.

돌봄 노동자 110만 명의 시대에 돌봄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실천적이고 체계적으로 듣고 싶어 하는 독자들에게 일독을 권하고 싶다. 🍵

글 문재우(한세대 간호복지학부 교수)



조선 최고의 명저 율곡 이이의 ‘성학집요(聖學輯要)’

단재(丹齋) 신채호는 역사학자로, 독립운동가로 모두가 인정하는 큰 인물이었다. 단재의 저서 ‘역사논설집’에 나오는 이야기가 있다.

“누가 성호 이익에게 물기를 ‘우리나라 수백년래에 저술된 서적에서 세상에 권할 만한 것이 몇이나 되나요?’ 성호가 답하기를, ‘동의보감(東醫寶鑑)’이 첫째요, ‘성학집요’가 둘째요, ‘반계수록’이 세번째요, 나의 저술인 ‘성호사설’이 네번째이다”라고 했다는 내용이다. 조선의 수많은 책 중에서 허균·이이·유흥원의 저서가 3등 안에 드는 후세에 전해질 책이고 자신의 ‘사설’이 네 번째라는 평가를 내렸으니, 성호 같은 대학자의 평가이니 믿어도 의심하지 않을 이야기다.

조선 말엽 박학한 학자 홍한주(洪翰周)는 그의 저서 ‘지수염필(智水拈筆)’에서 조선을 대표할 만한 저서로 네 권의 책을 거론했으니, 그 첫째는 인간의 마음을 다스리기 위한 책으로 율곡의 ‘성학집요’를 꼽고 인간의 몸을 다스릴 책으로는 허균의 ‘동의보감’이라 단정해서 말하고, 두 책을 더 거론한다면 조선의 문물제도를 총망라한 이만운의 ‘동국문헌비고(東國文獻備考)’와 유흥원의 ‘반계수록’이라면서 4권의 저술을 언급했다. 보잘것 없는 책이 많기도 하지만 ‘성학집요’·‘동의보감’·‘동국

문헌비고’·‘반계수록’ 등이 국가적으로 귀중한 저서임을 분명하게 밝혔다. 그렇다면 율곡 이이의 ‘성학집요’야말로 조선 5백년에 최고봉에 오른 책임을 알게 된다.

율곡 이이는 퇴계 이황과 함께 조선을 대표하는 학자로 ‘해동공자’라는 대접을 받던 탁월한 유학자이자, 나라와 인민을 구제하려는 뜨거운 애국자로서 벼슬에 나아가 온갖 정성을 바쳤던 개혁가였다. 율곡은 종종 31년인 1536년에 태어나 선조 17년인 1584년 49세로 세상을 떠났다. 짧은 생애에도 정치가로 학자로 교육자로서 방대한 저서 ‘율곡전서(栗谷全書)’를 남겼는데, 그 중에서도 대표적인 저서가 바로 ‘성학집요’ 13권이니 그의 나이 40세이던 선조 8년인 1575년에 저술했던 책이다. 율곡은 모두가 인정하는 천재였다. 29세에 문과에 장원급제하여 호조좌랑으로부터 벼슬길에 들어가 송지·부제학·대사간·대사헌·대제학과 이·호·병 3조의 판서를 역임하였고 지방관으로는 청주목사·황해도 관찰사를 지내는 등 나라를 다스리는 일에도 정성을 다했다. 물론 학자로서 틈만 나면 후학들을 교육시켰고 많은 개혁적인 내용이 담긴 저술에도 게으르지 않았다. 우리는 앞전에 학생들 교과서로 ‘격몽요결’이라는 고전을 설명하면서 율곡 학문의 깊이를 알아본 적이 있었다. ‘성학집요’





라는 책은 이름 그대로 성인의 철학과 사상을 요약한 책으로, 성인의 학문과 사상을 통해 인격을 갖춘 온전한 인간이 되고 그런 인격을 갖춘 통치자가 요순시대의 정치를 구현해내기 위해서 저술했다. 성인의 학문과 사상을 체득하여 실행에 옮김으로써 교화되지 못한 이들에게 유교도덕을 펴서 부패하고 타락한 정치와 세상을 정화하며, 불합리한 국가 사회의 시책을 개혁하고 갱신해서 유교가 지향하는 요순시대와 3대(하·은·주)의 이상적 국가·사회·인심(人心)을 복원해 내자는 의도였다.

13권 7책인 성학집요의 목차를 알아보자. 총설 제1편은 성학집요의 핵심내용을 요약해서 정리한 내용으로 책 전체의 키워드를 맨 먼저 열거해 놓았다. 제2편은 수기(修己)인데 총론·입지·수렴(收斂)·궁리의 4개 조목이 있다. 수기의 두 번째 항목에서는 성실·교기질(矯氣質)·양기(養氣)·정심(正心)·검신(檢身)의 조목이 있다. 수기의 세 번째 항목에는 회덕량(恢德量)·보덕(輔德)·돈독(敦篤)·수기공효(修己功效) 등의 조목이 있다. 제3편은 정가(正家), 제4편은 위정(爲政), 제5편은 성현도통(聖賢道統), 모두 5편으로 구성하여 편마다 수많은 조목을 열거하여 성학으로 치국안민의 길을 열어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구체적인 내용을 보자. 정가편만 보아도 효경(孝敬)·형내(刑內)·교자(敎子)·친친(親親)·근엄·절유(節儒)·정가공효의 항목으로 가정을 제대로 다스릴 수 있어야 치국평천하가 가능하다고 했다. 제4편 위정(爲政)을 보자. 총론위정·용현(用賢)·취선(取善)·식시무(識時務)·법선왕·근천계·입기강·명교(明敎)·안민(安民)·위정공효를 열거하여 정치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성현의 말씀을 통

해 방법을 제시해 주고 있다. 율곡은 성학집요 서문(序文)에서 실학(實學)적으로 사서육경(四書六經)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라 하면서, ‘식시무’의 현실논리로 정치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으니, ‘무실역행(務實力行)’을 모든 행위의 근본으로 삼던 율곡 철학이 구현된 책이 바로 성학집요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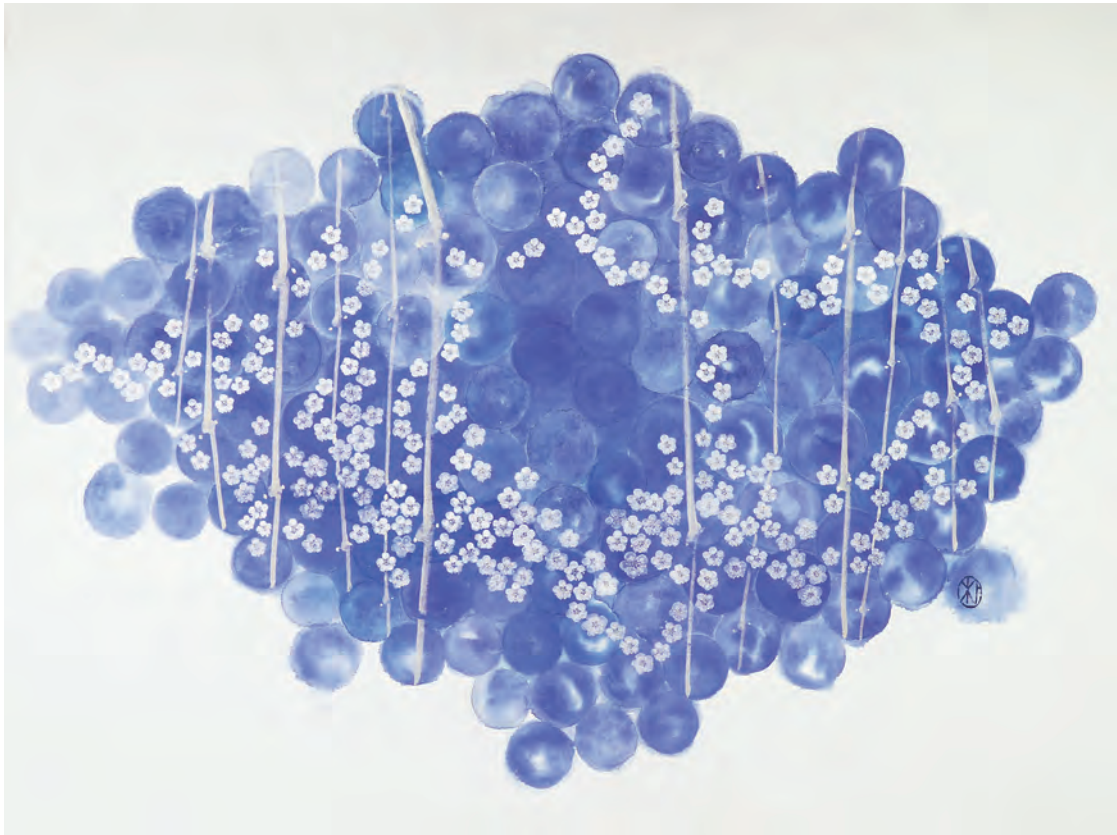
책은 유학을 공부하고 그 가르침에 따라서 자기완성을 이루고 다시 가정·사회·국가를 다스리는데 필요한 이념적인 지표를 간요(簡要)하게 편집한 것이라는 황원구 교수의 주장처럼 수신·제가·치국·평천하의 유교논리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요순시대를 복원해 내자는 조선 유학의 희망과 이상을 가장 치밀하고 요령있게 설명한 율곡의 주저가 바로 성학집요다. 사서오경과 성현의 저술을 참고, 인용하여 고증학적으로 설명했다. 책의 내용대로 실천할 수만 있다면 요순·3대의 정치를 부흥시킬 수 있을 것이라는 율곡의 희망이 원대하게 설계되어 조선 최고의 저술로 자리잡게 되었음을 알게 된다.

책을 완성한 율곡은 진차(進筭)·서(序)를 통해 선조 임금께 올리는 형식을 취하고 서문에서 책의 간략한 내용과 저술의 목적을 상세히 설명하여, 누구라도 책을 읽어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여 실천으로 옮겨지기를 간절히 희망하면서 나라와 백성을 그렇게도 염려하고 걱정하던 자신의 애국심까지를 넉넉하게 기술했다. 현대에 들어와 시대와 사상이 변천하면서 유학의 교화는 시들어지고 유교의 도덕은 사라져간다. 조선이 요순·3대의 이상적인 국가로 발전하기를 그렇게도 갈망했던 율곡을 기억하면서 한번쯤 성학집요 읽기를 권장해 마지않는다. 🍵

글 박석무(다산학자, 우석대 석좌교수)



다중우주론을 펼쳐보이는 생명의 노래



박소영, '우주와 자연(The cosmos and nature) 08-9', 한국화, 장지에 안료, 97x130cm, 2008



박소영의 회화 작품 ‘우주와 자연’은 자연의 대상물을 혼합해 한 화면 안에 그려 넣은 것이다. 이 도상들은 전통회화의 소재로 자주 등장하는 것들이다. 박소영 회화에 등장하는 세 가지 요소, 포도와 매화와 대나무는 각각의 상징을 담고 있다. 포도는 풍요를 상징한다. 주렁주렁 매달린 포도송이를 통해 풍요와 다산을 염원하는 마음을 담곤 했던 길상화가 그 대표적인 예다. 선비정신을 나타내는 대나무와 매화 또한 나뭇의 안정적인 상징으로 자리잡았다. 이렇듯 박소영 회화에 등장하는 요소들은 의기와 지조, 풍요와 다산 등을 상징하는 것으로서 특히 전통회화 영역에서 도상학적 위치를 확립한 기호들이다.

한국화가로 불리는 박소영은 전통적인 재료와 기법에서 자신의 회화 세계 근간을 구축한다. 그는 전통회화의 주요 구성 요소들을 화면에 배치하는 우주와 자연 주제의 연작으로 창작을 이어왔다. 장지라는 종이의 특성에 수묵과 담채가 어우러진 은은한 그림으로 우주적 사유의 세계를 열어주는 그의 그림은 한국화 장르에 속한다. 장지에 채색 안료를 사용한 그림을 매체별 분류상 한국화로 규정하기 때문이다. 한국화라는 말은 한국의 전통적인 회화 방법과 정신을 잇는 그림이라는 뜻이다. 그런데 이 그림을 통해서 한국화(동양화)에 따라붙는 ‘전통회화를 현대적으로 계승했다’는 식의 상투적인 수사를 갖다 붙이기에는 뭔가 적절하지 않은 기운이 감돈다. 그것은 이 그림이 전형적인 한국화들과 비교해봤을 때, 색다른 어법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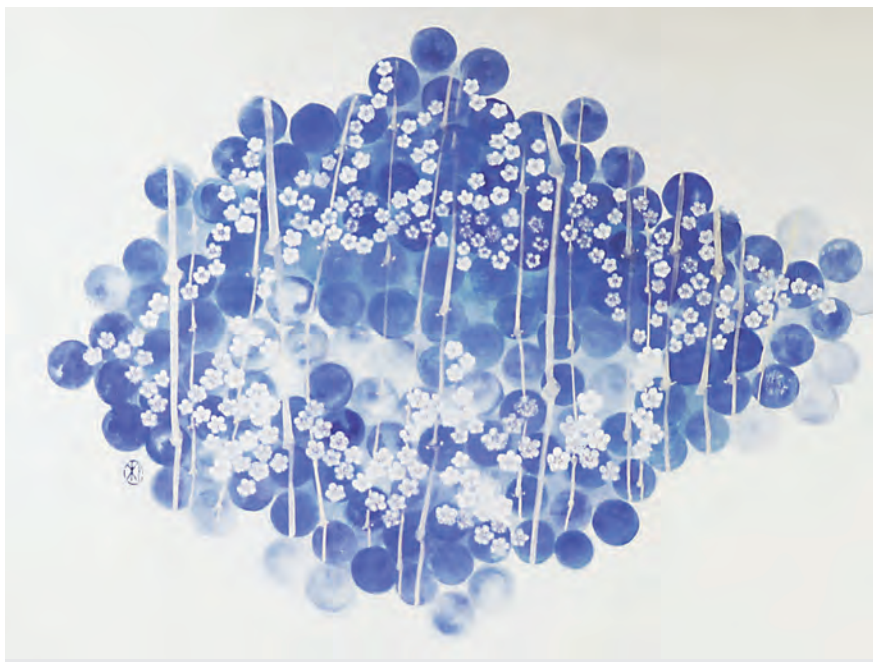
자연물 이미지를 재배치해 자연과 우주에 관한 상상의 세계 보여줘

장지에 스며드는 수묵과 채색 안료의 변화무쌍한 번짐 효과를 잘 살린 그의 그림은 한국화의 물질적 특성을

갖췄으나, 형상을 배치하고 도상을 규정하는 방식에서는 다소간 차이를 보인다. 한국화의 전형적인 매체와 도상을 가져다 쓰고 있기는 하지만, 이 그림의 진의는 대상물을 직접적인 형상 지칭이 아닌 고도의 상징으로 재해석하고 있기 때문이다. 박소영은 그림에 등장하는 도상들의 안정적인 기호 작용을 풀어헤쳐 놓고 그것을 재구성한다. 그림 속의 상징적인 요소들을 고정적인 기표로만 사용하지 않는다. 그것은 수천 년 동안 쌓여온 사물의 이미지와 상징체계 사이의 전형적인 알고리즘을 채택하는 듯하면서도 그 전형성을 깨는 새로운 조형의 세계로 연결된다. 그는 자연물 이미지를 끌어와서 이것들을 화면 안에 자유롭게 재배치함으로써, 자연과 우주에 관한 상상의 세계를 펼쳐 보여준다.

이 그림의 도상들에는 유교적 이상인 선비정신과 사머니즘이 들어 있다. 하지만 각각의 도상들이 관계 맺는 방식은 사뭇 다르다. 박소영은 포도와 대나무, 매화를 풍요와 선비정신으로 직결하는 해석 틀에 가두지 않는다. 이 그림의 핵심 의도는 우주적 시공간 속에서 자라나는 생명의 서사를 펼쳐내기 위해 자연을 상징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림 속에 등장하는 포도알 모양의 원은 포도알 너머 원의 철학을 담고 있다. 원은 그 자체로 완전체를 상징한다. 그것은 하늘을 형상화한 도상이며, 시공간 개념을 총체적으로 담보하는 우주의 상징이다. 원은 순환과 생성의 상징이다. 그것은 생명의 논리이자 우주의 이치다.

포도송이처럼 보이는 원들의 연쇄는 우주 서사를 펼쳐 보인다. 그림 속의 원은 단순히 형상 표현을 위한 원이 아니라 추상화한 원이다. 이 생각을 조금만 더 깊게 밀고 나간다면 우주적 사유의 일단을 만날 수 있다. 포도알 하나하나를 우주로 읽을 수 있다. 포도송이를 닮은 원들은 소우주 하나하나를 나타낸 것으로 읽을 수도 있



박소영, '우주와 자연(The cosmos and nature) 08-10' 한국화, 장지에 안료, 97x130cm, 2008

지만, 우주들의 연쇄 개념을 떠올릴 수도 있다. 우주와 우주가 서로 관계를 맺고 있다고 생각해보자. 우리는 금새 유니버스가 아니라 멀티버스(multi-universe), 즉 다중우주라는 새로운 세계에 도달할 수 있다. 우주는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라는 생각의 다중우주론은 현대인들에게 이미 몽상 수준을 넘어선 과학지식으로 자리잡았다.

우주 자체가 아닌 우주와 우주 사이의 이야기로 확장하는 다중우주론

단일한 정체성으로 인식되어왔던 하나의 우주가 아니라 여러 우주가 뒤섞여 있는 다중우주의 가능성은 점

점 기정사실화하고 있다. 푸른 구슬과도 같은 포도알 하나하나의 낱알의 존재를 드러내는 것 같지만, 사실은 원들의 연쇄가 드러내고자 하는 것은 모든 존재들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점이다. 모든 존재는 홀로 존재하지 않는다. 존재는 존재와 존재 사이의 관계를 통해 드러나는 것이다.

다중우주론은 우주 자체가 아닌 우주와 우주 사이의 이야기로 확장한다는 점에서 새로운 인지로 주목받고 있다. 박소영의 그림 한 장이 함유하는 바는 바로 이 지점, 저 깊고 넓은 다중우주의 세계를 펼쳐보이는 새로운 감각의 세계다. 🍷

글 김준기(미술평론가·광주시립미술관장)

국회에서 보낸 신나는 하루!



갑작스러운 사고로 지하철 운행이 중단돼 발을 동동 구르며 우여곡절 끝에 찾은 국회의사당. 미니 전기버스를 타고 국회 여기저기를 둘러보며 즐겁고 신나는 하루를 보냈습니다.
대한민국 국회 파이팅!

- 2023년 2월 구해진(경기도 안산시)

국회 국정감사에 등장한 찐쌀, 산낙지, 구렁이, 고양이

국회의원은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에서 정책질의를 통해 국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대변한다. 국회의원의 입법활동을 기록한 국회 회의록은 국회의원의 질의와 정부의 답변이 주 내용이며, 그 외에 의식이나 회의진행 등과 관련된 회의 상황을 나타내는 표기도 기재되어 있다.

질의자가 자신의 발언을 보충하기 위해 어떤 행동을 하거나 소품 등을 사용하는 경우의 상황표기는 문자화된 회의록을 통해 실제 회의 상황을 현장감 있게 느끼게 해 준다.

<제5대국회 제38회 제41차 국회본회의(1961. 4. 2.)>

○김응조 의원 (……)

진실로 국토개발을 하려면 경제개발기구를 조속한 시일 내에 단일화해야 되어요. 단일하실 각오가 있는지.

이것이 주먹입니다.

(주먹을 들어 보이며)

이것 손가락 하나만 빼쳐도 주먹이 안 되어요. 적수공권(赤手空拳)으로 적과 싸울 때에 이 다섯 손가락이 꼭 줌으로써 주먹이 되는 것이예요. 적을 때릴 수 있어요. 농림부는 농림부, 상공부는 상공부대로 제멋대로 되어 있으면 주먹이 안 돼요.

제5대국회 김응조 의원의 주먹을 들어 보이는 행동을 통해 우리는 국토개발을 위한 경제개발기구의 단일화를 강조하는 그의 굳은 의지를 느낄 수 있다.

21세기를 맞이하면서 사회 전반에 걸친 급속한 발전으로 국민 생활과 직접 맞닿은 여러 문제가 나타났고, 국회의원은 정부를 향해 질의할 때 국민들이 겪고 있는

고통을 대변하기 위해 회의장에 농산물과 수산물을 직접 들고 왔다.

제16대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중 국산 찐쌀이 등장했다.

이방호 의원은 중국산 찐쌀의 유통 문제, 그로 인한 쌀값 폭락 등에 대해 질의했는데 쌀 문제는 예나 지금이나 여야를 뛰어넘는 중요 사안인 것 같다.

<제16대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2003. 10. 10.)>

○이방호 위원 추가로 중국의 찐쌀이 수입되고 있습니다. 찐쌀이 뭐냐 하면 증기를 찌어서 대충 찌서 국내에 무한정 들어옵니다.

(……)

그런데 이것이 80kg에 6만 원 정도에 들어옵니다. 지금 우리 시중 일반미가 80kg에 십 몇만 원 안 됩니까?

(찐쌀을 들어 보이며)

이것이 중국에서 들어온 찐쌀이고 이것은 우리 시중의 찐쌀입니다. 먹어보면 똑같아요. 별 차이 안 납니다.

(밥을 들어 보이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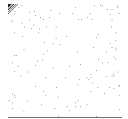
그리고 어제 저녁에 보좌관한테 밥을 해 오라고 했어요. 밥맛이 거의 같습니다. 별 차이 없어요.

○국립농산물관질관리원장 이수화 찐쌀은 위원님 말씀대로 1977년부터 수입자유화……

제18대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서울특별시 국정감사에서 이윤석 의원은 산낙지를 들어 보였다.

<제18대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2010. 10. 11.)>

○위원장 안경을 전남 무안·신안군이 우리 대한민국 낙지의 주산지



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윤석 위원께서 오늘 하루 낙지 위원이 되시겠습니다.

○이윤석 위원 (낙지를 들어 보이며)

시장님, 우연히 던진 돌에 개구리가 죽는다고 오세훈 성과주의가 던진 돌에 불쌍한 낙지 어민, 판매 상인이 다 죽었습니다.

(……)

시장님, 낙지 검사 샘플 과정에 대해서 지금 검찰에서 국내산이 아닌 중국산으로 샘플이 진행되었다고 수사가 진행되고 있지요?

○서울특별시시장 오세훈 예, 샘플 중에 일부가 그런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보고받았습니다.

낙지는 이윤석 위원의 지역구인 무안·신안 주민들의 주요 생계 수단이었다. 그런데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 에서 낙지머리에서 기준치의 15배에 해당하는 중금속이 검출되었다는 발표를 함으로써 낙지 가격이 급락하고 판매가 줄어들어 지역주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는 상황 이었다.

이런 상황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는 낙지 내장까 지 먹어도 안전하다는 발표를 함으로써 낙지의 안전성 을 두고 일대 혼란이 일어났고, 이윤석 위원은 국내 최 대 낙지 산지인 지역구에서 구해 온 세발낙지를 보여주 면서 지역주민의 고통을 대변했다.

또한 발언의 취지를 더 효과적이고 강렬하게 전달하 기 위해 구렁이, 고양이 등 동물이 등장한 예도 회의록 에서 찾아볼 수 있다.

<제18대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2010. 10. 21.)>

○차명진 위원 장관님, 지금 눈앞에 보이는 것보다 저의 질문 내용 에 좀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렁이를 가리키며)

지금 이게 뭘지 아시죠?

○환경부장관 이만의 예. 어떻게 국회의원님이 뱀을 가지고 들어오 셧는지 걱정입니다.

○차명진 위원 이게 구렁이입니다, 구렁이. 이게 한 마리에 시중에서, 불법이지만 이게 멸종보호종인데 시중에서 불법으로 얼마에 거래되는지 혹시 아세요?

○환경부장관 이만의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차명진 위원 이게 한 1000만 원에 거래된답니다.

<제20대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2018. 10. 10.)>

○위원장 민병두 수고하셨습니다.

(뱀갈고양이를 가리키며)

저기는 속기사석인데 그것은 안 된다고 생각해요.

위원장한테 허가를 받고 진행을 하세요.

(……)

○김진태 위원 제가 동물을 하나 가져왔습니다.

퓨마 새끼와 비슷한 동물을 가져왔는데요.

9월 18일 날 3차 남북정상회담 할 때 사살된 퓨마와 아주 비슷한 것을 가져오고 싶었지만 퓨마를 너무 고생시킬 것 같아서 그것은 그냥 안 가져왔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전투화, 수리부엉이 박제본, 멧돌, 인 공지능(AI) 로봇 등 회의장에 다양한 소품이 등장한 예 가 많다. 이러한 이색 소품의 등장으로 회의는 입체적인 형태를 띠고 해당 질의는 스포트라이트를 받는다.

국회 회의록에는 회의 중에 행한 발언 내용만으로 발 언의 맥락을 이해하기 어렵거나 특별히 회의장의 분위 기를 나타낼 필요가 있을 경우에 줄을 바꾸어 괄호 안에 그 상황을 간략하게 표기하는데 이러한 소품 사용의 상 황 표기는 그 시대 상황을 잘 알게 해 주는 역할을 한다. 앞으로 회의장에는 또 어떤 소품들이 등장할지 궁금해 진다.🐾

글 정영희 속기사무관(의사국 의정기록2과)



소백산 아래 풍경

철마다 야생화 만발하고 여우 뛰노는 생명의 땅

영주 소백산 초원능선



지리적으로 강원, 충북, 경북 3도의 경계선상에 위치한 소백산(小白山 1,439m)은 그 이름에 ‘작은 백두산’을 담고 있다. 겨울 풍경이 만년설이 뒤덮인 백두산의 모습과 흡사하다고 하여 그리 이름이 지어졌다고 이야기가 전해진다.

그렇다고 하여 소백산을 백두산의 모조품쯤으로 과소평가하면 섭섭하다. 예로부터 우리 민족은 신령스러운 산에 밝음을 뜻하는 백(白)을 넣었는데, 백두산이 북쪽을 대표하는 영산(靈山)이라면, 소백산은 남쪽을 대표하는 영산으로 대접받고 있다. 남성스러운 백두산과 다르게 소백산은 부드러운 휴산으로 여성스러움이 넘친다.

소백산을 이야기할 때 단골손님처럼 등장하는 인물이 있다. 조선시대 풍수학의 대가로 이름을 날린 도인 남사고(1509~1571)다. 4백여 년 전 풍기 땅을 찾아왔던 남사고는 우뚝 솟은 소백산을 보고는 말에서 뛰어내려 넙죽 절을 하면서 “저 산이야말로 사람을 살리는 산”이라며 찬탄을 금치 못했다고 한다. 그는 우리나라 명산 중에서 소백산의 기운이 가장 온화하고 아름답다고 극찬했다. 대개의 옛날 일화들이 그렇듯 좀 과장된 이야기일 수도 있겠지만, 한편으로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다.

산행을 계획하면 어느 계절에 그 산을 오르는 것이 좋을지 고민하게 된다. 이왕이면 다홍치마라고 그 산이 가장 아름다운 시절에 방문하고 싶어서다. 실제로 계절마다, 철마다 거기에 어울리는 산이 있다. 그런데 소백산은 그런 걱정을 할 필요가 없다. 봄에는 연분홍 철쭉이 만개하고, 여름엔 들꽃이 지천에 일렁인다. 가을에는 붉은 단풍, 겨울엔 주목 군락지와 하얀 눈꽃이 만들어낸 설경으로 유명하다. 고로 언제 찾더라도 바로 지금이 가장 아름다운 산이 소백산이다.

3개도에 걸쳐 4개의 고을을 품은 산

백두대간의 허리쯤에서 불뚝 솟은 소백산은 영주, 예천, 단양, 영월 등 4개의 고을을 안고 있는 품이 아주 넓은 산이다. 대개 우리나라 산들은 바위투성이 악산(岳山)이 많지만, 소백산은 중턱 이상을 올라가면 바위가 거의 없는 토산(土山)이라 독특하고 이국적인 풍광을 자랑한다. 휴산이라 산길이 험하지 않고 여성스럽다. 크고 높은데도 비탈이 가파르지 않고 완만하다. 그래서 소백산 산봉우리는 생김새가 무척이나 유연하다.

봉우리 하나만 우뚝 솟은 것이 아니라 주봉인 비로봉을 비롯한 1,300m가 넘는 고봉들이 즐비하다. 이 봉우리에서 저 봉우리로 이어진 산봉우리들은 물결처럼 부



나무 울창한 숲길

드럽게 뻗어간다. 나무가 자라지 못하는 1,300~1,400m 높이에 걸친 연화봉~비로봉~국망봉으로 이어지는 능선에는 양탄자를 깔아놓은 듯 초원지대가 펼쳐진다. 풀들은 바람따라 물결처럼 일렁인다. 초원능선에는 눈보라치는 겨울철을 제외하고 언제나 야생화가 지천으로 깔려 있어 잊을 수 없는 산행을 선사해준다.

초원능선을 타기 위해서는 여러 개의 소백산 등산코스 가운데 풍기의 희방사를 들머리로 연화봉과 비로봉을 거쳐 비로사로 내려오는 길을 추천한다. 약 11km로 5시간은 잡아야 한다. 반대로 비로사를 들머리로 소백산 정상인 비로봉으로 직행해 초원능선을 걸어도 된다.

연화봉 중턱에 자리 잡은 희방사는 신라 시대 창건된 고찰이다. 희방사 주차장을 들머리로 삼는다. 호젓한 산길을 따라 소백산 절경 중 하나인 희방폭포를 지나고 곧 희방사를 넘어가면 본격적인 산행이 시작된다. 우선 악명 높은 깔딱재가 기다린다. 정상까지 500여m의 깎아지른 듯한 오르막을 돌계단을 밟으며 올라가야 한다. 깔

딱고개 정상에 올라서면 다시 완만한 능선길이다. 멀리 소백산 천문대를 바라보면서 1시간 정도 더 오르면 연화봉에 다다른다.

드넓은 초원에 기대어 사는 생명들

연화봉 전망대에 서면 제1연화봉~비로봉~국망봉으로 이어지는 초원능선이 한눈에 들어온다. 백두대간을 따라 아름답게 흐르는 능선은 부드럽고 완만하며, 길게 늘어져 걸어도 걸어도 끝이 없을 듯하다. 이제부터가 소백산 산행의 백미다. 특히 제1연화봉과 비로봉 사이에서 만나는 초원길에는 갈대도 아니고 억새도 아닌 긴 풀들이 바람에 따라 이리저리 물결치는 모습이 장관이다.

다른 곳에서는 볼 수 없는 이국적인 능선 길이 만들어진 것은 소백산 정상 부근이 아고산대에 속하는 데서 기인한다. 해발 고도 1,300m 이상인 아고산대는 바람이 세고 비와 눈이 자주 내려 키 큰 나무가 자라지 못하고 초본류가 주종을 이뤄 초원지대를 형성한다.



운치있는 등산로



소백산 정상 비로봉

초원능선에 들어서면 산이 아니라 알프스 오솔길을 걷는 듯한 착각에 빠진다. 우리나라에는 고산이면서 이처럼 넓은 초원지대를 이룬 산이 드물다. 수년 전 백두산 트레킹을 할 때 정상 아래 펼쳐진 나무 하나 없는 드넓은 초원지대에 놀란 적이 있다. 초원능선을 마주하니 작은 백두산이란 이름이 절묘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산세가 넓고 부드러운 소백산 초원능선에는 그곳에 뿌리내리고 사는 식물들도 종류가 다양하고, 귀한 것들이 많다. 소백산의 깃대종 식물인 모데미풀, 보라색 갈퀴현호색, 노란색 산괴불주머니, 흰색 개별꽃, 노랑제비꽃, 노란색 팽이눈, 보일 듯 말 듯한 풀솜대꽃, 흰색 홀아비바람꽃, 노란색 피나무, 박새, 양지꽃...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야생화가 철따라 피고지기를 거듭한다.

초원에 기대어 사는 진귀한 동물도 있다. 멸종위기 야생동물 1급인 여우다. 국립공원에서는 여우가 소백산 일대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복원 사업을 추진 중이다. 2012년 10월 소백산 일대에 토종 여우 암수 한 쌍을 방사한 것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100마리가 넘는 토종 붉은여우를 방사했다. 옛날부터 소백산에는 여우가 많기로 유명했다. 소백산 드넓은 초원은 먹이인 설치류가 많

아 여우가 살 수 있는 최적의 서식지로 꼽힌다. 여우가 복원된 소백산은 더욱 생기가 넘친다.

도인 남사고가 소백산을 두고 “사람을 살리는 산”이라 했던 것도 이 초원능선 때문이 아니었을까. 다양한 희귀 식물들이 자라고 사라졌던 여우도 돌아온 치유의 땅, 사람들도 다르지 않으리라.

그나저나 이번 산행길에서 불행인지 다행인지 여우는 만나지 못했다. 여우 복원사업이 잘 마무리되어 사람과 함께하는 날이 오기를, 그때는 여우와 반갑게 눈인사라도 나눌 수 있으려나... 🐾

글 | 사진 유인근(여행칼럼니스트)



대중교통은 서울 청량리역에서 영주역까지 가는 KTX를 이용하거나, 서울고속버스터미널 또는 동서울종합터미널에서 영주행 고속버스를 이용한다. 영주에서는 다시 소백산 희방사행 버스로 갈아타야 한다.



승용차는 영동고속도로 → 만종분기점 → 중앙고속도로 → 풍기IC → 희방사쪽으로 방향을 잡으면 된다.

우리말을 열심히 공부해야 하는 이유

꽤 오래전 서울의 어느 대학에서 있었던 일이다. 공학 전공 교수들이 교양과목 편성에 문제를 제기했다. 공학 분야는 기초 학력을 다지기도 바쁜데다 전공과목 공부를 하기에 시간도 빠듯한데 어째서 글쓰기를 포함해 국어 관련 학점을 이렇게 많이 이수해야 되느냐는 것이 그 이유였다.

이 일을 계기로 여러 단과대학에서 교양과목 편성표에서 자기 분야 전공과 다른 과목을 빼달라고 요구하는 바람에 심각한 논쟁이 벌어졌다. 특히 인문 사회계열 단과대학이 아닌 곳에서는 필수과목으로 들어 있는 국어 관련 교양과목이 필요하지 않다는 주장을 강력하게 펼쳤고, 논쟁 끝에 이 과목은 필수과목에서 선택과목으로 조정하기로 합의되었다. 공과대학 측에서는 국어 관련 교양과목 대신 공학의 기초를 다질 수 있는 수학 관련 과목을 필수로 지정하는 조치를 취했고, 많은 학생들이 국어 관련 과목을 선택하지 않고 졸업학점을 이수하는 일이 벌어졌다. 물론 몇 년 뒤 현실적인 문제가 심각하게 발생하자 원래 커리큘럼으로 돌아가기는 했다. 그렇지만 그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들의 몫이 되었다.

국어와 전혀 관련이 없어 보이는 학문 분야에서는 늘 국어, 특히 글쓰기를 왜 꾸준히 배워야 하는지 의문을 제기하곤 한다. 그 생각의 이면을 살펴보면 자기 자신은 우리말을 완벽하게 알고 있다는 전제가 깔려 있다. 사실 이런 생각은 뜻밖에도 우리 사회에 널리 퍼져있는 것이기도 하다. 우리말을 잘 아는데 왜 국어를 배워야 하는지 의문을 가지고 있으며, 복잡하게 문법을 배워도 쓸데가 없을 뿐 아니라 문법 지식을 몰라도 우리말을 완벽

하게 사용하고 있다는 생각을 한다. 우리는 정말 우리말을 완벽하게 구사하고 한글로 표현할 수 있을까? 다음 문장을 읽어보자.

가. 공문을 한 건 보내는데 한 시간이 걸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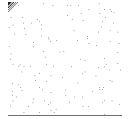
나. 공문을 한 건 보내는 데 한 시간이 걸렸다.

요점은 ‘데’를 어떻게 볼 것인가 하는 점이다. 두 문장은 모두 비문으로 처리하기는 어렵다. 겉으로 보기에 두 경우는 띄어쓰기에서 차이를 보인다. 무슨 차이가 있을까? (가)처럼 띄어쓰기를 하지 않았다면 ‘-는데/-은데’로 보아 조사로 처리를 한 것이고, (나)에서처럼 띄어쓰기를 했다면 ‘데’를 의존명사로 처리를 했다는 의미다. 품사가 다르다는 것은 의미도 다르다는 것이다.

(가)의 경우는 종속적 연결어미이기 때문에, 문장이 조금 어색하기는 하지만 문맥으로 보자면 한 시간이 걸린 이유가 공문을 보내는 행위만에 국한되지 않는다. 공문을 한 건 보내는데 그 사이에 여러 가지 일을 함께 처리하느라고 한 시간이 걸렸다는 의미일 수도 있다. 그런 데 (나)의 경우는 의존명사로 보기 때문에 ‘데’는 ‘것, 사실’이라는 뜻이다. 그러므로 공문을 한 건 보내는 일에 한 시간이 걸렸다는 의미다.

이처럼 일상생활에서 흔히 사용하는 단어지만 띄어쓰기에 따라 함축하고 있는 의미가 달라질 수 있다. 의사소통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혼란에 빠지는 현실을 자주 당면한다. 우리말에 더욱 깊은 관심을 기울여야 할 이유로 충분하지 않은가. 🍵

글 김풍기(강원대 국어교육과 교수)



국회 ART GALLERY 3월 작품전 국회의원회관 1층 아트갤러리



아름다운 부산 展

2023. 3. 2. - 3. 15.

작가 : 박여웅 | 추천 : 김희곤 의원실



달빛이 피다

2023. 3. 16. - 3. 29.

작가 : 나선미 | 추천 : 이광재 국회사무총장

국회, 한미동맹 70주년 기념결의안 채택, 대정부질문 실시 등

2월 6일	• 국회, 본회의를 열고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 실시
2월 7일	•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 실시… 난방비 폭등 등 집중 질의
2월 8일	•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소추안 의결… 헌정사 첫 국무위원 탄핵소추
2월 10일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대장동 및 위례신도시 특혜 의혹 관련 검찰 출석 • 김진표 국회의장, 서울 중구 주한 튀르키예 대사관을 찾아 지진 희생자 조문
2월 11일	• 정의당, 전국위원회를 열고 이정미 당대표를 위원장으로 하는 재창당추진위원회 발족
2월 14일	• 김진표 국회의장, 국회에서 아살 가산 알리 니아지 알-탈 주한 요르단 대사를 접견하고 경제협력 확대 방안 논의 • 국회, 본회의를 열고 '튀르키예·시리아 지진 피해 희생자 추모 및 복구 지원 촉구 결의안' 채택 • 여야, 국가보훈처를 국가보훈부로 승격하고 외교부 산하에 재외동포청을 신설하는 내용의 정부조직 개편에 합의
2월 15일	• 김진표 국회의장, 국회에서 룩상남스랭 어용에르덴 몽골 총리를 접견하고 광물·에너지 협력 확대 등 논의 • 더불어민주당, 가스·전기 요금 폭탄 지원책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에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한 별도의 에너지 지원책 마련을 요구
2월 16일	• 검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사전구속영장 청구… 헌정 사상 처음으로 제10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 정의당,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과 관련해 체포동의안 찬성 표결 입장 밝혀
2월 17일	•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한미동맹 70주년 기념 양국 관계 지속발전 촉구 결의안' 의결
2월 21일	•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 "임시국회를 3월 6일 혹은 13일에 열고 그 사이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영장실질심사를 받으라"고 밝혀 •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노동조합법 개정안 이른바 '노란봉투법' 의결
2월 22일	• 국회 첨단전략산업특별위원회, 위원장에 국민의힘 유의동 의원, 여야 간사에 더불어민주당 이원욱·국민의힘 김성원 의원 선출
2월 25일	• 신임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된 정순신 변호사, '자녀 학교 폭력' 논란으로 자진 사퇴
2월 27일	• 국회 본회의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체포동의안 부결

정리 윤성혜

찰칵! 국민이 담은 국회

국회방문객이 찍은 국회 사진 공모

- 주제** 국회의 풍경
- 참가자격** 국회를 방문한 사람 누구나
- 내용** 사진과 촬영이유, 사진설명
 - 국회의 풍경이나 국회를 찾은 방문객, 국회 실내 모습 등의 사진과 짧은 설명(2~3문장)
- 응모방법**
 - 휴대폰으로 촬영(촬영 날씨가 보이게)
 - 사진 및 설명, 연락처를 이메일로 제출 (book@assembly.go.kr)
- 마감** 매달 20일
- 규격** 가로·세로 3000픽셀 이상 용량의 JPG, JPEG 파일형식 원본 창작사진 (디지털 합성 등 수정 변형불가)
- 시상** 선정 시 원고료 10만 원
- 문의** 국회사무처 문화소통담당관실 (02-6788-2058)

- 매월 1편씩 선정하여 국회 월간지 국회보에 게재 예정.
- 응모작품은 순수 창작품이어야 하며, 선정 이후라도 표절, 타 공모전 입상작품 등 이유로 저작권 문제 발생시 선정 취소

새로운 **희망**을 만드는 **국회**



발 간 등 록 번 호

31-9710176-000680-06

국회사무처
NATIONAL ASSEMBLY SECRETARIAT